

People Power
시민의힘!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2016. 3. 5. 토 3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People Power
시민의힘!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2016. 3. 5. 토 3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결의문>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구조 마련을 위한 활동, 권력 오남용 사건 기록사업을 펼쳤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촉구 활동, 복지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에도 매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활동,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비핵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참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와 인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과 반(反)민주적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보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으로 인정받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조차 권력자들의 말장난 속에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을 내팽겨치고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남북 갈등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과 고통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강한 만큼 세상은 결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치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여연대는 세상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진리와 상식을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22차 정기총회를 맞아 민주주의, 인권, 민생과 평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저해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현명하게 심판하도록 돕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국회와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을 개혁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감시하는 한편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시민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환시키고, 대안적 평화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양극화, 저출산, 민생고 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복지확대 재정마련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청년세대들이 직접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 방송·통신, 영화, 개인정보 등 소비자권리 문제에도 힘을 쏟아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참여민주사회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참여연대 회원을 더 늘리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회를 더 많이 늘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순간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목 차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결의문	2
--------------------	---

2015년 사업보고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10
회원공청회 활동결과 보고	16
2015년 사업 총평	20
11대 중점과제	27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50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민생희망 본부 경제금융센터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 터 국제연대위원회 참여연대국제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80
시민참여분야 정책기획분야 미디어홍보분야 운영기획분야	
연대활동	89

2015년 활동기록 · 통계

회원 현황	98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100
시민교육	106
감시와 정책제안	108

2016년 사업계획

2016년 7대 활동방향 124

11대 중점과제 128

- 중점과제 1.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128
- 중점과제 2. '열려라 국회'사이트와 국회 평가 활동 활성화 130
- 중점과제 3.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31
- 중점과제 4.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132
- 중점과제 5.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34
- 중점과제 6.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 개선 135
- 중점과제 7.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과 대책 입법 활동 137
- 중점과제 8.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139
- 중점과제 9.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140
- 중점과제 10.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141
- 중점과제 11.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4) 143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144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경제금융센터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사무처 166

국제협력사업 시민참여분야 정책기획분야 미디어홍보분야 운영기획분야

살림살이- 2015년 결산안 및 2016년 예산안

2015년 회계 감사 보고	176
2015년 결산안	178
2016년 예산안	184

조직과 운영원리

참여연대 정관	190
조직 기구표	198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202
2016년 임원 명단	207

■ 부록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12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220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	222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226
참여연대 노래	236

2015년 사업보고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회원공청회 결과보고

사업 총평

11대 중점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6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승인

- 2015년 10월 31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16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구성(안)을 승인함
- 구성(안)에는 총준위원, 안전검토소위, 임원추천소위 위원 구성방안, 회의일정 기본계획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후 2015년 11월 30일 1차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을 완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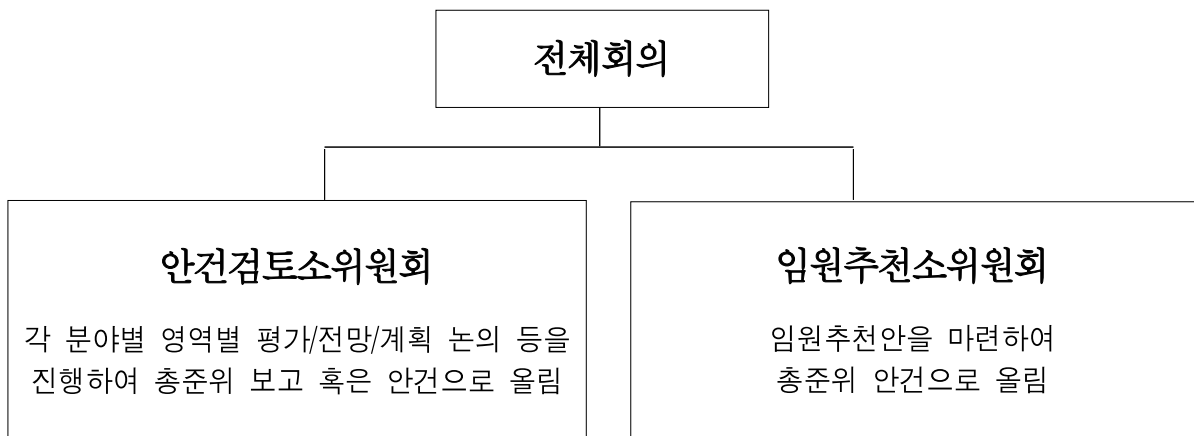
○ 2016 총회준비위원회 목표

- 2015년 사업평가 및 2016년 사업계획 수립
- 참여연대 의사 결정 및 집행 구조 평가 및 개선안 마련
- 임원인선안 마련
-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 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중기 실행계획 마련

▷ 2016 총회준비위원회

1. 총준위 구성

- 집행위원(38명) + 운영위원회 분과별 1명(이봉섭(조직운영), 윤형준(사회경제), 김동한(시민감시), 맹행일(평화국제)) 총 42명으로 구성
- 총준위 공동위원장 : 공동운영위원장(진영중, 하태훈)



2. 안전검토소위 구성

- 안전검토소위원장 : 이찬진 집행위원장
- 안전검토소위 부위원장 : 김경울 집행위 부위원장
- 간사위원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김남근, 김경울, 김성진, 이태호, 서복경, 조형수, 윤홍식, 양규응, 박근용, 박정은, 안진걸, 강준원

3. 임원추천소위 구성

- 임원추천소위원장 : 진영중 운영위원장
- 간사위원 : 이태호 사무처장
- 정현백, 김균, 정강자, 법인, 하태훈, 진영중, 김정인, 이현욱, 김남근, 양윤재, 이승희, 이태호 (이상 12명)

▷ 2016 총회준비위원회 소집경과

1. 총준위 전체회의

1)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강준원 외 16명 참석, 21명 위임)

- 일시, 장소 : 2015년 11월 30일 오후 7시5분 ~ 8시35분,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2016 총회준비위원회 소위 구성 및 논의일정 확정

2)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김경울 외 18명 참석, 14명 위임)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1일 오후 8시45분 ~ 9시55분,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2015 참여연대 사업 평가안 보고 및 토론

- 사무처장 역할에 대한 설문결과 보고 및 총준위원 의견수렴 진행
- 총회 행사 및 회원공청회 기획 방향 보고

3)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김남근 외 14명 참석, 13명 위임)

- 일시, 장소 : 2016년 1월 18일 오후 7시20분 ~ 9시50분,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2016 사업방향(초안) 논의 (안전검토소위, 임원워크숍 토론 요지 보고 등)
- 의사결정 집행 구조 논의 (안전검토소위 논의요지 보고 등)
- : 참여연대 공동체 TF 구성을 승인함.
- 임원추천소위의 사무처장 추천결과 승인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4) 총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김동한 외 20명 참석, 8명 위임)

- 일시, 장소 : 2016년 2월 15일 오후 7시30분 ~ 9시30분, 느티나무홀
- 활동내용
- 2015 사업보고 및 2016 사업계획 승인
- 2015 결산 및 2016 예산안 승인
- 임원선임안 (운영위 소관, 총회 소관) 승인
- 회원공청회 검토, 22차 총회 진행안 검토

2. 안전검토소위

1) 안전검토소위 1차 회의(10명 참석)

- 일 시 : 2015년 12월 16일 오후 2시10분 ~ 오후 5시50분
- 활동내용
- 2015 참여연대 사업 평가안 1차안을 검토함.

2) 안전검토소위 2차 회의(7명 참석)

- 일 시 : 2015년 12월 28일 오후 1시50분 ~ 4시10분
- 활동내용

- 의사결정, 집행 구조의 쟁점 1차 논의

3) 안전검토소위 3차 회의(9명 참석)

○ 일 시 : 2016년 1월 11일 오후 1시30분 ~ 4시

○ 활동내용

- 의사결정, 집행 구조의 쟁점 2차 논의

: 회원모니터단을 기구표에 두기로 함.

: 정책위원회의 취지, 역할과 임무에 동의하며, 구성하기로 함. 정책위원회 기본 구성에 활동기구 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함.

: 상집, 집행위원회는 현행 방식의 구성과 운영을 유지하기로 함.

: 각 활동기구, 실행위원들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간사와 실행위원간 활동 내용을 전수할 수 있는 접촉면 확대, 신규 실행위원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함.

: 참여연대 공동체 TF 구성 제안 등을 논의

→ 이상의 논의내용을 총준위에 보고하고 승인 받기로 함.

4) 안전검토소위 4차 회의(6명 참석)

○ 일 시 : 2016년 1월 14일 오후 7시 ~ 10시

○ 활동내용

- 총선 및 정책/홍보분야 2016 사업방향 초벌 논의

5) 안전검토소위 5차 회의(9명 참석)

○ 일 시 : 2016년 1월 20일 오후 6시40분 ~ 9시30분

○ 활동내용

- 권력감시분야 중점과제, 사업과제 논의

6) 안전검토소위 6차 회의(12명 참석)

○ 일 시 : 2016년 1월 25일 오후 6시40분 ~ 9시30분

○ 활동내용

- 사회경제분야 사업방향, 중점과제, 사업과제 논의

7) 안전검토소위 7차 회의(8명 참석)

- 일 시 : 2016년 1월 27일 오후 7시 ~ 10시

- 활동내용

- 평화국제분야 사업방향, 중점과제, 사업과제 논의

8) 안전검토소위 8차 회의(9명 참석)

- 일 시 : 2016년 2월 1일 오후 7시 ~ 10시

- 활동내용

- 시민참여, 조직운영, 정책기획, 미디어/홍보분야 사업방향, 중점과제, 사업과제 논의

9) 안전검토소위 9차 회의(6명 참석)

- 일 시 : 2016년 2월 3일 오후 7시15분 ~ 10시

- 활동내용

- 2016 사업방향 및 계획, 중점과제 선정 등 사업계획 마무리 회의
- 참여연대 공동체 TF는 이후 상집에서 구성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3. 임원추천소위

1) 임원추천 소위 1차 회의(8명 참석)

-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오후 12시30분 ~ 2시

- 활동내용

- 2015 임원 현황 확인 (회의 출석 포함)
- 사무처장 선임절차에서의 간사참여 방안 논의 : 사무처장 추천 지원 TF를 구성하여 사무처장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설문을 진행, 총준위원, 사무처 간사의 의견 수렴
- 사무처장 추천을 위한 우선 접촉대상 결정

2) 임원추천 소위 2차 회의(10명 참석)

○ 일 시 : 2016년 1월 9일 오후 6시 ~ 12시

○ 활동내용

- 사무처장 추천을 위한 면담 진행, 임원인선안 초안 검토

3) 2/15 임원추천 소위 3차 회의(8명 참석)

○ 일 시 : 2016년 2월 15일 오후 6시 ~ 7시

○ 활동내용

- 총준위에 올릴 임원 선임안 점검

회원공청회 결과 보고

▷ 회원공청회 개요

- 행사명 :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3일(토) 오후 2시 ~ 5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목표
 - 정기총회(3/5)를 앞두고 참여연대 활동 방향과 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 회원거버넌스 구조를 확대하고, 회원 정체성을 강화하며 한 해 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함께 결의
- 참여인원 : 57명 참여 (임원 7명 + 상근자 14명 + 회원 36명)

▷ 행사 진행 순서

시간	소요시간(분)	순서
13:30 - 14:00	30	등록 및 입장
14:00 - 14:20	20	테이블별 서로 인사
14:20 - 14:25	5	공동대표 / 사무처장 인사
14:25 - 14:40	15	2015 회원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나?
14:40 - 15:10	30	중구난방 : 1라운드
15:10 - 15:40	30	중구난방 : 2라운드
15:40 - 15:50	10	휴식
15:50 - 16:20	30	중구난방 : 3라운드
16:20 - 17:00	40	각 테이블 별 발표

- 사회자 : 김정현(참여연대 회원)
- 각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 각 부서 팀장
- 정리발언 : 이태호 사무처장

▷ 토론결과 정리

[주제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① 이것만은 꼭 약속해줘!

- ▶ 사회경제 분야 법인세 인상 ▶ 기본소득 도입 ▶ 부유세 도입 ▶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최저생계비 인상 ▶ 중산층 살리기 정책 ▶ 보육의 정부책임 실현 ▶ 경제민주화 실현 ▶ 임차상인 보호 ▶ 집값 문제 해결 ▶ 재개발 시행 시 영세 가옥주 보상 확대 등 ▶ 정치개혁 분야 투표시간 연장 ▶ 의원정수 확대 ▶ 사표 줄이기 ▶ 비례대표 확대 등

② 기억하자! 심판하자!

- ▶ 후보자 정보 인포그래픽 제작 ▶ 기성 정치인(특히 다선의원) 집중 검증 ▶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유권자 매뉴얼’ ▶ 낙선캠페인 ? 지역 회원들을 위한 ‘자질 부족’ 후보자 정보 제공

③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 ▶ 유권자가 참여하는 부정선거감시 캠페인(시민제보처 설치, 투·개표소 감시 등)
 -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 활동 ▶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감시

④ 딱 한 명만 더!

- ▶ 내 가족 내 친구 투표참여 설득 ▶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 ▶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총선연대 구성

[주제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① 2만 회원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 회원확대 캠페인

▶ 회원권유 노하우 공유 ▶ 예비회원제 도입 ▶ 소액회원 모집 ▶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활동 ▶ 1+1 회원배가 운동 ▶ 맞춤형 회원가입 캠페인 ▶ 국민 TV 광고, 회원 모집 거리 캠페인

• 시민모임 확대

▶ 자영업 회원 네트워크(회원의 가게) ▶ 생활 속 네트워크 활용 ▶ 기존 회원모임 활성화 ▶ 주제별 모임 만들기 ▶ 다른 단체와의 연대 강화 ▶ 대중 강좌 및 행사 확대 ▶ 참여연대 행사에 지인 초대하기

• 지역회원모임 활성화

▶ 지역회원조직 결성 ▶ 지역연대 강화 ▶ 지역모임(회원간 교류) 활성화 ▶ 참여자치지역연대 활동 공유

② 시민 캠페인 제안

▶ 선거연령 인하 등 청소년 정치교육 ▶ 작은권리찾기 캠페인 ▶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등 1인 1단체 가입 운동 ▶ 유산기부·재능기부 캠페인 ▶ 시민로비단 활성화 ▶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③ 내가 바로 미디어

▶ 회원이 홍보대사 : 지인들에게 참여연대를 알릴 수 있는 ‘입소문 거리’ 제공, 개인 SNS로 참여연대 소식 알리기 ▶ 모든 회원이 참여연대 홍보물과 <참여사회> 상비, 회원들이 오리거나 복사해 쓸 수 있도록 <참여사회>에 홍보물 지면 마련 ▶ <참여사회>를 더 많이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낼 수 있도록 선물이벤트 진행 ▶ 참여연대 활동에 “좋아요, 나빠요” 표시할 수 있는 버튼 만들기, 팟캐스트 및 대안언론을 도와 함께 성장, 시민사회에 열린 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 ▶ SNS에 맞는 콘텐츠(짧은 글, 이미지 등) 개발, 참여연대를 펴내는 언론 적극 대응

[주제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① 이견 최고예요

- ▶ 시민의 파수꾼 역할; 정부정책 감시 및 대안 제시 ▶ 다양한 사회이슈와 쟁점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안보논리에 대한 반박 ▶ 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개설 ▶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고 공감하는 활동 ▶ 활동가들의 소명의식과 희생 ▶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 ▶ 1mm 항의서한 ▶ 맥주파티 등 부드러운 형식의 회원윌레모임

② 이견 아쉬워요

• 선택과 집중

- ▶ 관심은 다양하게 두되 실천은 집중 필요 ▶ 대표사업 발굴 ▶ 취약계층을 더 많이 대변해야 ▶ 평화이슈, 청년이슈 관련 활동 확대 ▶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월호 대응 후속 활동 ▶ 언론개혁 운동

• 회원 참여

- ▶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확대 ▶ 회원 참여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과 일정을 마련해야 ▶ 신입회원 행사를 늘리고 참여를 돕는 안내서 마련 ▶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활동 확대 ▶ 사회 이슈에 대한 회원 번개모임 진행

• 홍보 · 언론대응

- ▶ 기성 언론 보도를 대체할 수 있는 홍보방식 개발 ▶ 같은 일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 대안 없는 비판처럼 비춰지는 활동은 자제 □

2015년 사업 총평

● 중기(2015-16년) 활동 목표

- 권력오남용 책임추궁 활동 강화와 입법, 사법, 행정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 및 통제 구조 확대
- 경제민주화와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 활동내용과 방식의 대중성, 현장성 강화와 시민참여 주체 확대
- 참여연대 20주년 비전(중장기 의제와 혁신 방향)의 실천전략 수립과 1단계 이행

● 2015년 표어 : 행복한 참여 · 따뜻한 연대

● 2015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 집권 3년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과 실정,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가 가중된 2015년이었음. 참여연대 중기 활동목표와 주요 활동방향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입과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 등 조직 내적 과제에 근거한 것이었음.
- 2015년에도 참여연대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활동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음. 국가폭력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 활동도 이어졌음.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특혜에 희생되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서민의 복지, 민생, 노동조건의 악화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음. ‘청년참여연대’ 발족으로 청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참여사회연구소의 인적쇄신과 활동정비가 진행되었음. 각 활동의 현장성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콘텐츠 제작, 유통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개선하였음. 콘텐츠가 질적으로 향상된 월간 <참여사회> 발간, 새로운 형식의 강좌 도입과 소모임 활성화를 이룬 아카데미느티나무, 회원들의 멤버십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 카페통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음. 상근자 교육, 활동방식 개선과 조직혁신과제 논의, 정책과 정세에

관한 내부토론과 공유 등 조직 내적 역량강화와 통합력 제고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음. - 전체적으로 각 의제별 부서 활동력이 유지되었고,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참여연대 활동은 공직윤리와 공익제보, 민생 분야에서 일부 법령과 제도의 도입 또는 개선 조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의제화하는 등 정치, 복지,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연대를 넓혔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했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원탁토론을 비롯해 조세재정 개혁을 주제로 한 '맥주파티', 판결문 읽기 시민모임,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적격 고위 공직자 임명반대를 비롯한 시민참여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고려한 사업들을 왕성하게 진행했음. '팩트북' 발간과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임상실험 문제 제기, 노동행정 감시 활동 등 새로운 사업 주제를 발굴하거나 활동의 전형을 마련했음. 유엔 애드보커시 등 국제연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내외에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음. 목표 수준의 회원확대도 이루었음.

- 참여연대의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거나 완고한 정권과 정치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에 가로막혀 좌절되었고, 부적격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대응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 경제민주화 담론을 확산시키고 정책과 법률로 이어지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밀어붙이는 경제활성화 담론이나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노동부문의 담론을 넘어서지 못했음. 평화군축운동을 왕성하게 전개했으나 대중적 기획이나 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대응은 미진했음. 전체적으로 권력의 사유화, 공공성 축소와 극심한 양극화를 저지하는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상황이었음.
- 또한 2015년 활동방향에 따라 우선 과제로 두었던 중점과제 선정이나 부서별, 팀별 사업의 목표와 전략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일부 중점과제의 경우 우선순위에 두고 과제 실행을 위해 활동력을 집중했다고 보기 어려움. 앞으로 실현가능성과 내적 역량 배치, 대내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활동방향과 사업들을 20주년 비전에 근거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전략마련과 계획수립에는 미흡함이 있음.

- 활동방식 관련해, 새롭게 시도한 <카드뉴스>는 28차례 제작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음. 이슈리포트 발간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의 빈도수는 예년수준임.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2015년에 입법 청원이나 의견서 제출 등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직접 국회 입법 로비활동에 집중했음. 감사 요구나 신고조치 등 행정처분 요구 활동과 정책자료 생산이나 토론회 등 공론 활동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음.
- 이는 각 부서별 인력운용이 유연하지 않고, 고유한 활동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집중할 의제와 사업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이슈에 대응할 여력을 고려한 연중 사업계획이 요구됨. 또한 활동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관성적인 활동방식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시도 역시 지속해야 함. 더불어 참여연대가 제기하는 주장과 활동방식이 당위적이거나 관행에 그치지 않았는지,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진영논리에 간혀 활동한 것은 아닌지 등 향후 효과적인 정책개입과 저지 활동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8대 활동방향에 따른 평가

○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

-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정치개혁운동을 중점과제로 삼고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함. 시민사회내 합의도출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결성으로 비례대표 확대를 정치개혁 핵심의제로 부각시킴. 지역별로 다양한 원탁토론을 진행하여 시민이 직접 정치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는 공론장을 마련함. 그럼에도 시민들의 뿌리 깊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20대 국회에서 지속해야 할 과제임.
- 최저임금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일환으로 발간함. 감시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와 구체적인 제도개선 요구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심사 관련 정보 비공개 문제 대응,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의혹 관련 국민고발단 모집과 국정원 고발 등 대응 활동,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과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 반대 등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 등 주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환기시키고 독려하는 활동을 집중 전개함. 주요 과제로 검토되었던 검사장 직선제 논의는 차기 연도 과제로 순연됨.

○ 권력 오·남용 책임추궁을 위한 기록기억사업 활성화

- 팩트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및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 사건,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건 등 2차례 제작. 예정했던 MB 자원 외교, 세월호 건은 진행하지 못함.
- 부패와 비리, 권한남용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발굴함. 제작과 발송을 시민편당으로 조달, 재정마련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함. 다만 팩트북 제작이 사후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시의성과 활용방안 등을 더 고민해야 함.

○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 담론과 정책이 일자리, 고용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소득주도(임금주도) 성장정책과 재벌 특혜와 중소기업인 보호, 만연한 비정규직 대응, 일자리 마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기하고자 했음. 특히 재벌 대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인권 문제 대응이 주문되었음.
-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의 편법승계나 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 제,개정 노력을 기울였고 언론기획 등으로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압박활동을 하지 못함. 삼성 노동인권 침해 문제 대응은 일부 지원에 그침.
- 비정규직 대응에 있어 자체적인 활동보다는 주요 연대체 차원에서 활동함. 재벌대기업을 포함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 실태를 평가하고자 했으나 진행하지 못함. 대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부의 근로감독 실태를 3차례 이슈리포트로 발간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 최저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함.

- 정부 여당에서 노동개악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민주화운동에서 노동조건 악화를 막아내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집중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감독 실태조사와 평가 활동이 현재 정부가 강행하는 비정규직 대규모 양산과 쉬운 해고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

- 국민기초생활을 비롯해 국민건강과 노후소득, 보육과 돌봄 등에 있어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메르스 대응, 보육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연대기구 활동을 주도함.
- 세수확보와 공평과세 관련, 세법개정의 방향과 입장을 토론회, 기자회견, 언론기고 등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함. 중앙정부가 지방 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고 복지와 세금에 관해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행사로 '맥주파티'를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시도함.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법인세 정상화나 자본이득 과세 등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조세재정개혁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책개입 활동이 요구됨. 동시에 공평과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사례 발굴과 타겟팅,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법제도 개선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

- 세월호 1주기 즈음하여 추모행사와 더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자체 기획과 세월호 대책회의 차원의 연대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함. '416연대'로의 전환과 함께 상임운영위원과 상근자 파견, 진상규명위 활동 등 책임 있는 연대활동을 지속함. 광화문 당직 포함 세월호 특조위 활동 모니터와 정부 여당의 방해에 대한 비판활동도 지속함. 향후 진상규명 활동과 416인권선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안전사회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재발방지대책 관련 토론회, 언론 시리즈 기고, 규제완화보고서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활동을 진행함. 하지만 콘트롤타

위 부재로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거나 후속 정책대응이 진행되지 못함.

○ 정전체제 종식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 강화

- 해방 70년을 계기로 '이제는 평화'라는 모토로 캠페인을 진행함.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ADEX 항의행동, 평화기행, 평화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평화교육강좌 등을 진행함. NPT 검토회의를 계기로 비핵지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함.
- 한미일 군사협력, 사드 배치, 탄저균 반입과 실험 등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 등을 지속함. 다만, 이러한 군사안보 이슈들은 대체로 준비된 기획이기보다는 사후적 대응이었고, 정책변화나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과 전문영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음. 추후 정책개입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음.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기획과 함께 일상에서의 군사주의 문제, 안보교육 문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 교육, 문화 다양성 강화

- 회원서비스, 회원 월례모임, 회원캠프 등 일상적, 연례적 회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 다만 청년참여연대 조직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회원과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계획했던 지역 회원모임 신설이나 회원 직접캠페인 사업은 진행 못함. 예정했던 회원확대캠페인도 연중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팟캐스트, 교환광고를 통해 일부 진행되거나, 창립기념행사와 연말에 집중 진행함.
- 부설기관으로 청년참여연대 발족(10월) 이후 청년 당사자들의 문제로 삼고 있는 대학 입학금, 졸업유예제, 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 대응 등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함. 그 밖에 청년 대상 인턴프로그램, 공익활동가학교, 불온대장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중 진행하여,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민주주의,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탐방이 이어지고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 높은 상황.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 강화할 계획임.

- 시민사회 교육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임에도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연중 56개 강좌, 318회 강의, 수강생 991명이 참여하는 등 현상유지를 하고 있음.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TOT(Training Of Trainers) 등 다양한 강좌 개발, 춤과 그림, 연극 등을 위한 소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음.
- 카페통인은 공간활용과 수익창출 면에서 향상되고 있음. 월 1-2회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실험을 시도함. 추후 카페와 갤러리 등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함.

○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20주년 중장기 의제와 혁신과제에 대한 내부 공유,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근자 교육과 활동방식 개선을 위한 집중논의를 진행함. 20주년 비전에 근거하여 활동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평가하도록 함. 하지만 미래 의제에 대한 준비를 포함해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계획 논의는 진행하지 못함. 꾸준한 내부 공유 노력과 정책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20주년 의제와 과제에 기초한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중점과제 1.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그간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부패 척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비례대표 확대, 국회 개혁 등을 제안하고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음.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들의 인구편차를 2:1 이하로 줄이는 선거구 조정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표)가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다양한 대표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모아지고 있음.
- 지지(표)가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고, 국회가 지역구의 이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다양한 계층 등의 이해와 요구도 제대로 대표하게 하지 위해서는 외국 선진 의회들처럼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함.
-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의석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더 줄이거나, 게리맨더링을 통한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정치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조직해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감시와 모니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주요 활동

1.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 연대기구 결성

-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3월), 공동 정치개혁안 발표(6월), 공동 활동 기획 및 결의(6월~8월), 255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전국 조직 발족(8월) 등 진행
- 전국 조직 발족 이후 강원,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광주, 전북, 부산 지역에서 지역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2.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한 시민 행사 진행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4월, 150여 명 참여) 및 <불공정

한 선거제도 확 바꾸자! 유권자 행진>(10월, 200여 명 참여) 진행.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의 지원으로 서울, 인천, 춘천, 충남, 충북, 울산, 전주, 광주 등 지역과 부문에서 선거제도 개혁 시민 토론 행사(정치사랑방), 특강, 전문가 토론회 등 다수 개최

- 9월~11월, 월 2회 거리 홍보 캠페인, 추석 귀성객 대상 집중 홍보 캠페인 진행

3. 정치개혁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 및 홍보 활동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이트(<http://electionreform.tistory.com>) 개설. 활동 소식과 정책 콘텐츠, 지역별 소식 등 홍보
-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책자 <국회 선거제도 가이드북>(4월), 전단지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9월) 제작
- 시민 모금(265만원 모금)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신문 광고(11월) 진행
- <선거제도만 바뀌도 달라진다> 언론 칼럼 시리즈 진행(7회, 오마이뉴스)
-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인사의 100자 메시지를 받아 홈페이지와 SNS 등에 홍보하고, 비례대표 확대·선거제도 전면 개혁 사회인사 기자회견 진행(10월)

4.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는 국회 상대 입법로비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 의견> 이슈리포트(6월),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선거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7월)
-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수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 청원서 국회 제출(8월)
-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내 협상에 대한 평가 등의 논평/성명 30여 차례 발표, 기자회견 14회 개최

• 성과 및 보완과제

- 비례대표제 확대, 의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의원정수 확대 등 전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간에 동의기반이 약했던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음. 더 나아가 단일 기구를 구성해 활동의 토대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켰음.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

표 의석확대가 논의되도록 한 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임

- <불공정한 선거제도 확 바꾸자! 유권자 행진> 등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활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시민원탁토론 행사나 '정치사랑방' 행사 진행 매뉴얼과 자료를 제공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 정치학자 여론조사, 각계 사회인사 메시지 수집/배포, 언론 기고용 칼럼 조직, 시민 참여형 신문 광고,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표명과 국회의원 면담 시도 등 국회 로비활동,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 회의 공개 촉구 피켓팅, 의제설정 및 쟁점토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균형있게 진행함.
- 그러나 놓여준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조직적 활동에 비해 이에 대응하여 비례대표 확대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민(집단) 조직화는 시도하지 못해 아쉬움.
- 20대 국회 개원 이후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의제화하고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함.

중점과제 2. 부패·권력남용 사례 기록과 기억사업 확대

• 사업 배경

- 부정부패를 비롯해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였으나, 국민적 비판과 여론의 관심을 피하고 그 잘못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추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감시활동의 꾸준함과 지속성, 사례의 기록과 공개는 권력 오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시민들이 잊지 않게 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함.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효과를 거두고 직접적인 처벌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실행부서

- 감시1,2팀/참여연대

• 주요 활동

1. 권력남용 사건 팩트북 발간

- 권력감시 팩트북 1_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발간(6월)
- 권력감시 팩트북 2_ 2008~2012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발간(12월)
- 팩트북 1, 2를 사건 관계자 및 언론사, 국회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제작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 모금 캠페인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팩트북 발간이라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팩트북은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인 만큼, 발생 시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우나,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됨
- 팩트북 1, 2 발간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 사업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인터넷 아카이브 형성, 독자층에 맞춘 인쇄용 또는 인터넷용 등 발행 형식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기록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맞춰 발간하는 것으로 조정함
- 기록사업으로 다루려 했던 국가재정을 낭비한 관료와 책임자에 대한 기록,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들에 대한 기록, 부적격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록은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내부역량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음

중점과제 3. MB 자원외교 총체적 부실과 세금낭비 문제 대응

• 사업배경

- 수십 조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
- 자원외교 세금 낭비는 국민들의 조세재정 불신과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MB 정책실패 책임에 대한 청산요구도 높음

• 실행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행정감시센터

• 주요 활동

1. MB 해외자원개발 사기 의혹 및 세금 낭비 문제 적극 대응

-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진상규명 협력 호소 방문, 국정조사 핵심 증인 채택 촉구 등 국민적 여론 조성 및 압박 활동 진행
- MB 사기의혹 공동대응 모임을 꾸려 블로그,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 진행
- 부실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에너지 관련 3개 공기업 전/현직 사장,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 메릴린치 서울지사장 등에 대한 연속 검찰 고발과 문제제기
- 자원외교 등 조세재정 현안 설문조사를 원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함(4월)
- 국정감사 시기에 맞춘 부실자원외교 중단 촉구 및 검찰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9월), 2016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책정된 점에 문제제기하는 논평 발표

2. 국민소송법 제정, 공기업 운영구조 개선

-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9월)
- 공공기관장으로 이해관계자가 종사하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을

고발하여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부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킴

• 성과 및 보완과제

- 작년부터 MB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이어졌고, 국정조사 기간에도 여러 활동으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할 것을 압박해 언론사의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일정한 진상이 드러난 것은 성과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정조사에 MB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출석이 무산되는 등 핵심적인 부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있음
- 여론조사 및 발표, MB 자원외교 책임자 연속고발, 검찰 부실수사 규탄, 부실자원외교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논평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검찰수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과가 미약(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기소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했고, 하반기에는 중점사업에 걸맞는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 공기업 예산낭비 문제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을 지속하고 국민소송법 제정운동을 계속하되, 공기업 지배 및 운영구조 개선이나 공기업 인사 문제는 행정감시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중점과제 4.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운동

• 사업배경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를 시정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기반한 조세체계의 개편이 시급함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한편, 시민에 의한 재정지출 감시와 조정 요구도 강화해야 함

• 실행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사회복지위원회

• 주요 활동

1. 복지와 조세정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2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3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간(6월), 법인세 정상화를 주제로 한겨레에 연속 기고 3차례 진행,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5대 쟁점 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11월) 등으로 법인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개편, 자본이득 과세 등 공평과세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함
- 정부의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논평 발표(8월),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논평 발표(11월), 종교인 과세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합의에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논평 발표(12월)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힘

2. 세금과 복지에 관한 시민행사

- 세금과 복지에 대한 시민행사 “맥주파티” 개최(9월)
- 복지와 세금에 관한 자료와 동영상 제작 및 공유의 공간으로 “맥주파티”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beerparty2015)를 활용함

3. 복지를 위한 예산 및 재정 운동 - 지방재정 문제 공론화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추진한 것에 대응하여, 전국 지역단체,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75개가 참여한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결성과 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10월)
- 국민 공청회 개최, 홍보물 배포 활동, 전국 각지에서의 토론회, 입법 의견서 발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국 17개 지자체장에게 복지사업 정비결과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법인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개편, 자본이득 과세, 종교인 과세 등 공평과세 이슈를 토론회, 논평, 기자회견, 이슈리포트 발표, 신문기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함. 이를 통해 여론화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실제 세법 개정에서는 미흡한 수준의 종교인 과세 입법 외에는 큰 성과가 없었음
- 복지와 공평과세 문제에 관한 시민행사 “맥주파티”를 기획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후속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2016년에도 공평과세, 복지확충을 위한 시민행사를 추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전국복지수호 공대위>를 결성하여 정부의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각지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계획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촉진 또는 지원함으로써, 여러 지역에서 정부의 복지 정비지침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성과를 냈고, 정부의 반(反)복지성을 널리 알림

중점과제 5. 삼성 등 재벌·대기업 특혜와 특권 바로잡기

• 사업배경

- 주요 재벌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이거나 완성단계에 있으며, 2015년에는 삼성의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성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일가에 의한 탈세·배임·횡령 등 불법이 끊이지 않았는데 시민사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3세 승계를 그대로 사실상 '승인'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어 비판적 문제제기 자체가 의미가 있음
- 정치·관료·사법·언론과의 유착에 의한 재벌그룹의 법·제도상의 특혜, 특히 삼성이 누리는 특혜는 여전히 커서 삼성 특혜로 왜곡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작업 필요함
- 지배구조 및 삼성 특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삼성그룹 안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과 비판 역시 중요한 과제임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 주요 활동

1. 보험업법 개정안 상임위 논의 모니터링

-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 관련 회의록 검토 등 해당 개정안의 입법과정을 감시함
- 개정안 내용을 다루는 언론 기획, 카드뉴스 제작 등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병행

2.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는 법률 제·개정안 발의

- 보험업법,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법 개정안 등 재벌특혜를 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 촉진 활동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대기업 특혜법안 처리 반대 활동을 진행함
-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관련 국회 제출 촉구 활동 진행함

3. 삼성 종합보고서 제작과 배포

- “3세 승계, 법 위의 삼성과 결별하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기사 시리즈(5회, 7월)로 대체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관철시키기에 앞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벌·대기업 특혜 법안을 막는 것이 시급했고 이 또한 어려운 일이었음. 재벌·대기업의 경영권승계와 기업에 대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한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통과를 2015년 말까지는 저지하였으나, 아쉽게도 2016년 2월에 통과되었음.
- 19대 국회에서 진행한 입법운동 결과와 실제 통과된 법안 등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입법과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 있음.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경제력 집중 등을 바로잡을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삼성 종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함.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그 과정과 법적 문제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콘텐츠 추가 개발이 필요함

중점과제 6.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과 사회적 연대 확대

• 사업배경

-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노동시장 급변으로, 단일한 관점의 해석과 대안으로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난망한 상황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제조업계의 문제로 상징되었던 불법파견 문제는 유통·서비스업계를 거쳐 전 산업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특수고용 등으로 변형되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짐.
- 이 과정에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특히,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미조직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기존 노동조합은 물론,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 실행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 주요 활동

1.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대응과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연대 확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 기성 노동조합 등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응하는 정책개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함
-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공조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대함

2. 비정규직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모니터링

-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 6조」 발표(6월)
-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발표(8월)
-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태 조사 결과 발표(12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관철 시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기아자동차 고공농성, 케이블통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함. 다양한 노동사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관심을 환기하고 연대사업의 초석을 마련함
-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시민사회계 내부에서의 시각차이, 심각성에 대한 온도차 존재함. 정부 노동개악에 대해 시민사회계의 더 높은 수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노동사안에 대한 내용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대의 확대를 위해 연대방식의 다양성 확보와 보다 유연한 시민 캠페인 방식이 필요함
-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방향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로 선회함. 이슈리포트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의 다양한 면을 시민에게 공개함
-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법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감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근로감독의 내용적 개선안 마련이 요구됨

중점과제 7. 통신·영화 분야 등에서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 사업배경

- 통신과 영화 등의 영역은 재벌·대기업의 독과점과 담합 체제로 시민들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통신, 영화 분야 등에서 시민·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있음
- 참여연대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기획해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권리 - 소소권> 캠페인을 2015년에도 진행하고, 시민·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 있음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주요 활동

1. 통신·영화 분야 등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 멀티플렉스 3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음아고라(온라인)·거리캠페인(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불만사항 조사해 WORST10 발표. 시민 불만사항 중 팝콘 가격 폭리, 광고 무단 상영, 3D안경 끼워팔기, 시네마포인트 주말 사용제한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영화 시작 시간 넘겨 강제 광고 상영해 얻은 부당이득반환과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2년째 경향신문과 공동기획 '소소권(작지만 소중한 권리)' 30회 연재하며 통신사 부가서비스, 각종수수료, 포인트 사용 제한 등 여러 가지 소비자 권익침해 사안 제기
- 통신3사의 비싼 통신비 인하 캠페인, 통신정책감시 활동, 단통법 시행 이후 데이터 요금제 효과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SKT T가죽포인트 등 주요 부가서비스 일방적 폐지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안 등에 대해 공정위 등 통신당국에 신고
- KT, 티브로드·씨앤엠, SK텔링크 등 대기업 알뜰폰사업자의 불법적인 마케팅 신고
- 시민참여 공익소송, 캠페인 및 소통 프로그램으로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상을 밝힌 영화 '산다' 상영회 개최(노동사회위원회, kt새노조 공동개최), 토익(TOEIC) 시험 환불 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2심과 대법원 상고 제기

-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유출·불법판매 관련 피해 시민 62명과 함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청구 소송 제기

2.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캠페인

- 멀티플렉스3사의 무단 광고 상영 제한, 이용자 불만 사항 처리 구조 마련, 스크린 독점 문제를 개선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 발굴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공론화
- 단말기유통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 단통법 개선 문제 다룬 이슈리포트 발행. 단통법 관련 통신정책 의견서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성과 및 보완과제

- 영화관 개선 캠페인은 대중적 지지가 높아 공정위에서 조사 착수 방침도 결정. 영화관 불공정 이슈는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행정처분 제기, 입법 청원 등 시민운동 프로세스를 모두 활용해볼 수 있는 좋은 사안이어서 여러 언론사의 자체 기획으로도 이어짐
- 언론지면을 활용해 '소소권' 장기 연재를 하며 일부 사안 관련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 있었고 대중 호응도 좋았음
- 통신사 요금 꼼수를 미래부, 방통위 등에 신고한 결과 요금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표기하도록 조치해 소비자가 요금 선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됨.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추가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 할인율이 20%로 상향되었고 신청기간도 무기한 연장돼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룸
-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티브로드, 씨앤엠 등의 이용자에 대한 기만행위도 제재 조치하며 참여연대의 행정처분 제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정조치 됨
-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소소권' 이 시민 반응이 좋아 2016년에도 연장 기획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활동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소송 제기로 공론화시켰지만, 입법 활동은 부진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침

중점과제 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과 시민안전 정책 대응

• 사업배경

-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제정운동을 진행함
-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2015년 2월에 발족하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며 안전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임

• 실행부서

- 정책기획팀/참여연대

• 2015 주요 활동

1.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 모니터

-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를 모니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416연대 부설 국민참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해(8월),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정상화를 위한 활동 진행함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및 관련 연대기구 활동 지원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사업 및 시행령 규탄행동 지원
-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범국민행동, 5월 1일 1박2일 시민행동 등 1주기 추모 및 정부 시행령 폐기 행동 동참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발족(6월) 지원
- 1주기 진상규명 촉구(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상근자 출근길 행진 진행
- 참여연대 건물 외벽에 추모 상징물(대형 노란 리본) 설치
- 단원고 일러스트 전시회, ‘세월호를 기록하다’ 북콘서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실시

3. 안전사회 담론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

-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토론회 주관(4월)
-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기사 <진단. 세월호 참사 1년 무엇이 바뀌었나> (8회)
- ‘맑고 안전한 대한민국,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캠페인(4월)
-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5월)
- 416연대 산하 안전사회위원회(7월 발족)에 참여하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등 활동에 동참

4. 안전사회 관련 법률 제·개정

- 참여연대 발표(2014.11.)발표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10대 법안’ 중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제정(2015년 3월)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2015년 7월)됨

5. 주 1회 야간 광화문광장 지킴이 당직(1년간 매주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였으나,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방해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임
-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활동에 적극 참여함. 416연대의 출범과 산하 국민참여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주도함
- 연대활동과 별개로 독자적인 1주기 추모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였음. ‘서촌길 노랑게 물들이기’ 캠페인은 서촌지역 상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졌음. 경향신문과의 공동기획 역시 1년 전에 제시했던 의제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음
- 정부의 예산삭감과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인 활동으로 전환 등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함

중점과제 9. 해방과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캠페인 (End the Korean War Campaign)

• 사업배경

- 한반도 정전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주변국의 패권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실험과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2015년은 해방·분단 70년,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투하 70주년으로, 더 이상 대결과 갈등, 핵위협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

• 주요 활동

1.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수립 촉구하는 시민주체 조직

- 세계군축행동의날(4/14)을 맞아 기자회견 및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웹사이트 구축함
- 무기전시회(ADEX) 관련해 <죽음의 시장, ADEX 전쟁장사를 멈춰라> 캠페인 진행함
- 해방 70주년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 No Wars, No Nukes> 개최함
- 해방·분단 70년 평화기행 및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진행함

2. 평화체제와 동북아비핵지대 국내외 의제화

- 몽골과 남,북,미,중,러,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7개국 민간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참여함
- 탈핵 공동캠페인에 참여하고, 핵무기의 비인도성 알리는 거리전시회 개최함
- 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 참가하여 동북아 비핵지대, 한반도 전쟁종식, 한국인 피폭자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민사회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한반도 전쟁종식과 비핵지대화’ 촉구하는 국제시민사회 공동선언을 발표함

3.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갈등에 대한 시민 콘텐츠 제작

- 평화칼럼 <2015, 이제는 평화>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을 주제로 언론 기고 15차례 진행함

- '핵무기 반대' 등 1인 평화 캠페인 피켓 그리기 공모 활동 진행

4. 분단체제 고착시키는 동북아 재무장과 군비경쟁 반대 운동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대응 관련 국정조사 청원서 국회에 제출함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정보비공개 무효 청구 소송은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기각되어 이에 상고함
- 일본 재무장과 안보법제 통과 관련하여 반대 성명 발표(단독 3회, 공동 2회), 평화칼럼 발행(4회), 공동기자회견 개최(3회), 국정감사 과제 발표 등 진행함. 일본에서 열린 반핵 행사와 미군기지 반대 행사 등에 초청되어 아베정부의 재무장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행동을 요청함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한반도 배치 반대 공동 기자회견과 집회 개최(7회) 및 사드 반대 공론화를 위한 카드뉴스 발행 및 홍보물 제작, 언론기고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민간 6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과 한·중·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의 정치,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부각시킴.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 후속 대응으로 이어갈 필요 있음
- 국제사회 논의에 발맞춰 한국인 피폭자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촉구한 것에 의미가 있었으나 2015 NPT 검토회의에서 의제화하지는 못함. 국내는 물론 아시아 및 국제 평화단체들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내도록 연대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세계군축행동의날(GDAMS) 캠페인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웹사이트 오픈 등 새로운 방식의 활동을 시도했다는 점, 무기전시회(ADEX) 대응캠페인은 다양한 개인과 단체 참여, 언론보도 등에서 성과를 내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한미일 군사협력, 사드(THAAD) 배치와 같은 외교·국방 이슈에 대한 평화운동을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풀어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대중적 기획이 필요함
- 평화기행, 한중일 역사교육연대 등 평화와 역사, 인권 분야의 활동가와 교사, 연구자들이 연대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임.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음

중점과제 10.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1/4)

• 사업배경

- 2011년 중기과제로 2014년 말까지 회원 15,000명을 만드는 발전과제를 설정하였고, 달성하였음. 그러나 현재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보류 회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언론 환경 악화 및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참여연대 지지층을 넓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
- 2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재정자립을 넘어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을 앞당길 것을 결의함. 최근 3년간 회원가입을 보면 2012년 875명(순증 420명), 2013년 886명(순증 590명), 2014년 1,458명(순증 1,240명)이었음. 2018년까지 회원 2만 명, 예산기준 100% 회비에 의한 자립으로 확대하는 장기 목표를 두려고 함. 2015년은 4개년 계획의 1차 연도임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주관, 참여연대 전체

• 주요 활동

1. 미디어 활용의 개선

- 대안미디어인 <국민TV> 3개 프로그램(이강운의 오늘, 이용마의 한국정치, 안진걸의 을아차차)과 인기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에 3가지 종류의 회원가입 관련 광고(① 조정래의 '허수아비춤'을 인용하여 소개, ② 싱어송라이터 윤영배가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이유, ③ 참여연대 김정현 회원이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이유)를 진행함
- 팟캐스트 '참팻'에 회원광고(아카데미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를 삽입함
- 한살림 <살림이야기> 교환광고, 공무원노조 <공무원U신문> 무료광고 등 진행함

2. 대면접촉 강화

- 4월부터 서촌지역 상점 60여 곳에 참여사회 배포함
- 회원확대 캠페인① <21주년 창립기념행사 : 회원확대 캠페인>(8.15~10.7.)진행하여, 상근자 등이 77명의 지인들을 회원가입으로 이끔

- 회원확대 캠페인② <365 당신과 함께>(11.24~12.31)진행하여 기존 회원들이 51명의 지인들을 회원가입으로 이끔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5년 말(12/31) 기준으로 회원가입은 총 1,147명, 탈퇴자는 1,421명으로 총 회원수는 14,699명임. 탈퇴회원이 많은 이유는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장기미납 회원들을 임의정리 방식으로 탈퇴처리했기 때문임. 그로 인해 2014년 말 기준(15,029명) 대비 330명이 줄어들었음
- 1년간(2015년) 1,147명이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목표 1,200명 대비 96%를 달성했음. 가입이유로는 기타(26.3%)를 제외하고는 지인의 권유추천(23.3%, 267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팟캐스트 12.1%, 언론보도 11.9%, 인터넷 5.2%, SNS 2.4%)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015년의 세부 실행과제였던 대면접촉 강화와 미디어활용의 개선은 적절한 계획이었다고 평가함. 2015년에 담당부서의 신규업무 증가로 연중 캠페인은 진행하지 못했고 창립기념식과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에 맞춰 두 번의 회원확대 단기 캠페인만 진행했음
- 참여연대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회비미납 회원들에 대한 정리를 진행해왔음. 7년 이상 회비미납 중이며 연락이 닿지 않았던 회원들께 후원재개 및 회원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이메일과 편지를 발송 후, 회비납부가 재개되지 않은 1,126명의 회원을 탈퇴처리하였음(7월 말). 이에 표면적인 회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임의정리 1,126명을 제외한 연간 탈퇴자 수는 295명으로 2014년(221명)보다는 늘었고 2013년(300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회비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보류회원으로의 전환이 감소 추세이고, 보류회원에게서 유지회원(회비납부)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2014부터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임. 2015년 연말 기준 보류회원은 1,788명임. 보류회원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탈퇴하는 회원들의 '완충'지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함
- 중기목표인 2만 회원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이 필요함. 지인을 회원으로 추천한 회원에 대한 명칭 부여 및 관리·감사 서비스 신설을 비롯해 증액, 지인추천, 신규가입회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발굴 및 교환광고 다양화도 모색해야 할 것임

중점과제 11.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 활동 개시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운동은 물론 청년실업·청년복지·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섰음. 2006년부터는 청년연수·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청년활동가와 참여형 시민들도 양성하였음. 그러나 청년세대의 삶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들의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청년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주년 정기총회에서 청년참여 활동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을 승인받았음. 청년/캠퍼스 문제 및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청년 대변자 그룹인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하여 본 궤도에 올리고자 함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 주요활동

1. 1단계 - 청년참여연대 기획

- 청년참여연대 기획단회의 5차례 진행함
- △스스로 대변하고 연대하는 청년당사자 그룹 발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예비 공익활동가 양성, △청년 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애드보커시 운동, △청년문제 해결을 통해 근본적인 사회변화 촉진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함

2. 2단계 -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발족함(7월, 28명 참여)
-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단 회의 포함) 12차례 진행하고 분과(운영, 교육, 기획)회의 18차례 진행함(7월~9월)
-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개최함(10월, 109명 참여)

3. 3단계 - 활동 개시

-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국정화’ 말고 진짜 ‘민생’에, ‘노동개악’이 아닌 진짜 청년대책에 ‘다 걸기’ 바랍니다!” 기자회견(11월)
-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11월)
- ‘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는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제’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청원(11월)
-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제대로 된 청년정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12월)
- ‘등록금이 다인 줄 아셨죠?’ 입학금관련 캠페인(12월)
- 교육과학기술부에 ‘조선대 의전원 폭행 사건 방기 규탄’ 민원 제출(12월)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과정 진행함(2016년 1월~2월, 21명 수료)
-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압력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2016년 1월)
- 이פק사관 탐정단(입학금 문제 대응 정보공개 청구 캠페인단) 교육(2016년 1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청년참여연대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회칙, 조직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애초 예정했던 시기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10월에 창립하였음. 창립이 늦어지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대한 준비위원들의 만족도와 평가는 좋았음. 당일 행사는 기획안대로 잘 진행되었으며 창립회원 70여 명을 포함해 총 109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됨
-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창립회원 모집기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219명을 창립회원으로 조직하는 성과를 내었음. 특히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통해 기존의 청년사업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30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성과임
- 현재 각 분과별로 내부세미나 및 현안 대응, 기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심사업을 찾고 있음. ‘청년과 대학분과’에서는 입학금 및 졸업유예제 개선, ‘청년과 경제분과’에서는 ‘노동개악’ 및 청년정책에 대해 꾸준히 다루고 있으며 입법청원, 고발, 민원제기, 기자회견, 논평,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회원확대 및 활동형 회원(분과원 등) 모집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각 분과별 중점사업 발굴과 활동방식 정착이 과제임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국민의 지지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개혁
-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니터 강화
- 정치개혁과 의정감시 활동에 시민 참여 및 행동 프로그램 강화

• 2015 주요 활동

1. 중점과제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실행

- 연초부터 정치개혁 시민원탁토론 기획,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결성 및 활동 기획, 추진 등 중점과제 1.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활동에 집중함

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 의정 평가 자료 제작

- 중점 과제에 집중하느라 연초에 계획했던 다양한 평가자료 제작은 하지 못했음. 19대 국회 의정 평가를 위해 하반기 2년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준비 중이고, 총선 전에 발표할 예정

3. 국회의원과 국회 모니터링 사이트 개선 및 활성화

- <열려라 국회> 사이트 디자인 리뉴얼, 프로그램 개발, 의원 DB 수집/정리 중이며 2016년 3월 중에 새 버전 오픈 예정임

4. 기타

- 국회 사무처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려,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함
-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 위원들에게 '검직 금지' 결정할 것 요청하는 의견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함(5-6월),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위임입법 통제 국회법 개정 시도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본회의 통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비판 활동함(6월)
- 12월말~1월초 ANFREL 선거감시단(스리랑카), 3월 제2회 아시아선거포럼(동티모르), 10월 2015 Congress Reform and Oversight International Conference(대만)에 참석

하여 선거 및 의회감시와 관련한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과 교류하고, 대만 컨퍼런스에서는 참여연대의 전반적 활동과 낙선운동 등 의회감시 사례 발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사업에 센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함. 이로 인해 연초 계획한 사업 중 국회 회의 방청 시민캠페인,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의정평가, 참여형 의정 평가는 시도하지 못했지만, 19대 국회 표결 평가,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회 활동 평가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함
- 국회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이 현안이 되었을 때 입장 표명, 정보공개청구, 후속 행정 소송까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 그러나 다른 사업에 밀려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삭감 및 집행내역 증빙 요구 등의 대응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움
- 국제회의에 참가해 선거 및 의회감시 단체들과 교류하며 민주주의 확대,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를 이슈로 한 국제 교류의 장이 매우 넓다는 점을 확인함. 시민들에게 의회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새롭고 다양한 웹사이트를 소개받은 것도 의미가 큼. 향후 의정감시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있음
- <열려라 국회> 사이트 개편을 계기로 의정활동 정보, 의원 평가 자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정 평가 방식과 아이템 개발을 풍부하게 시도해보아야 함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사법감시 활동의 시민참여 수단 개발
- 사법부 구성과 감시의 시민참여 강화

• 주요 활동

1.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감시 활동 강화

- 2005~2014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판(2/13). 출판 기념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특강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4월) 개최함
- 판결감시 사업의 대중화를 위해 <판결문 읽기 모임> 진행함(10~12월)

2.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활동 지속

-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발간함(온라인판 3월, 인쇄본 4월)
- 청와대 파견 제한 검찰청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월),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심의 촉구 공문 발송(6월), 정기국회 중에 국감과제·입법과제로 발표하여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함

3.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의제화

- 기본 입장 문서 제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사업의 외화 시점을 2016년으로 조정함

4. 법관 인사의 개혁 방안 공론화, 시민행동 추진

- 상반기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준 반대 활동(1월~4월), 하반기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공개된 피천거자 중 7명에 대해 지지·반대 등 의견서 발표함(7월)
- 대법원의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사와 관련, 사실 관계와 현황 정보 공개청구, 근거 법규와 대책 마련 공개질의(5월), 대법원 발표 개선 방안에 대해 평가 보도자료 발표(7월),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UN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제출함(6월)

- 2008년 촛불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일(2/17)에 맞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함
- 법관 임용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논의 위해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 개최함(8월)

5 기록과 공유를 위한 자료 구축

- 그 사건 그 검사 DB 콘텐츠 보강중

6 기타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2014년 12월 결성)을 통해 군사법개혁안, 군인권보호관제도 등을 입법청원하고 법 개정 운동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검찰과 법원 판결에 대한 감시 활동이 비교적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
- 판결감시 활동을 강화함. 판결비평 칼럼의 독자층도 확대되고 판결사업의 대중화를 위해 처음 시도한 <판결문 읽기 모임>도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음. 사법감시 활동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순조로운 첫 발을 땀
- 검찰 분야에서 모니터 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검찰보고서를 7년째 제작, 활용도에 있어서도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 국회 청문위원들에게 유용하다는 평가 받음.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 2년 째 제작비의 대부분을 시민 모금으로 충당함
-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2014년 12월 결성)을 통해 군 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운동 추진했고, 군사법원법의 독소조항이 일부 개정되고 군인권보호관들 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진전이 있었던 것은 성과였음
- 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시민기준 마련 캠페인은 대법관 교체기에 진행하려 했으나 준비가 늦어져 2016년으로 사업 시점 조정함. 국정원 경력법관 신원조사에 대해 대법원에 강력히 문제제기해, 미흡하나마 대법원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성과임

- 주요 사법개혁 과제인 검찰청법(청와대 편법파견 제한), 사면법(대통령 권한남용 제한) 개정 등에 대해 국회에 의견 제시는 했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기획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20대 국회 개원 직후 사법개혁 법안 입법청원, 보좌진 설명회, 의원 간담회 등을 기획해 국회 대응 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해야 함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꼼꼼히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권력감시
-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구조개혁
- 권력유착과 특혜,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 줄이기

• 주요 활동

1. 부정부패, 권력오남용 사건 기록사업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다룬 팩트북 1, 2권 발간함

2. 정부소속 위원회 감시 및 민주적 개혁

- 정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평가를 위해서 회의록 작성·공개, 시민 방청 허용 여부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1_최저임금위원회 편과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2_규제개혁위원회 편을 발행함
-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소관 부처,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함

3.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 김영란법 제정 촉구 논평 및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법사위 위원장 면담, 김영란법 위헌론 반박 의견서 국회 제출,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 진행함
-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는 신탁주식 관련해 국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독 및 조치현황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2005~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 개최. 신탁·보유주식과 관련성 있는 직무에 관여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입법예고안 관련 찬성 의견서 제출함

4.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민간기관 취업감시운동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 처분으로 발행

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함

5. 국정원 개혁

-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사찰 의혹 진상조사 요구 기자회견 및 국민고발인단 모집과 국정원 고발, 국정원에 대한 감독장치 마련 의견 청원서 국회 제출 등 활동

6. 기타

-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 활동, 성완중 리스트 검찰수사 촉구 활동, 부패기업 특별사면 추진 반대 활동 진행하고, MB정부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2~3월에 집중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여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함
-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는 정부위원회 감시활동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감시활동의 방향과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당장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내용이 축적되면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다만, 회의록 작성·공개, 방청허용 여부 외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분석내용을 확대 필요 있음
-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는 신탁주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정부로 하여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하는데 일부 기여했음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대응은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이슈를 주도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런 만큼 일정 시점에 국정원 개혁 및 제도개선으로 이슈를 전환했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음
- 연례적으로 발행해오던 퇴직 후 취업제한 보고서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처분으로 발행하지 못했으나,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으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시켰고, 결국 인사혁신처 스스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었음
- 황교안 등 부적격 고위공직자 임명반대 활동을 진행했으나 임명을 막아내지는 못했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나,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압박 수단을 개발하지 못한 것도 개선해야 함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늘리기
- 공익제보자 보호관련 제도 개선

• 주요 활동

1. “맑고 안전한 대한민국-공익제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캠페인

- 안전분야 공익제보 사례 소개 팜플릿 배포, 전시회 진행하고, 안전분야 공익제보자 6인과 함께 공동성명 발표 등 세월호 참사 1주기 맞이 시민캠페인(4월) 진행함

2.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 모니터링, 국회 의견서 제출, 카드뉴스 배포, 경향신문 칼럼 등 활동 진행함

3. 시민참여형 지원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

- 동구마케팅고 안중훈 교사의 파면처분취소 시민의견서 제출 캠페인(3,653명 참여) 후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함
- 참여연대가 지원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법원의 긍정적 판결(징계처분의 부당성 인정) 등을 다룬 카드뉴스 제작 및 SNS 배포함
- 군산 메트로타워 부설시공을 알리고 해고된 유영호 감리원의 명예회복 요구서를 군산시에 제출하고, 유영호 감리원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시민의견서(635명 참여)를 법원(유영호 vs 군산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함
- H대학 연구소 회계부정 사실을 제보한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함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교사에 대한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의 사퇴압박 중단 요청 논평 발표,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 요청,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 제출함

- 국립전통예술고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A교사의 신원노출 관련해, 문체부에 경위조사 및 담당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요청서 발송(10/15)
-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 교사가 징계처분 받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 발송(10/16)

4. 공익제보자 관련 정보 제공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자에 수록된 공익제보자와 의인상 수상자 등을 블로그에 등록하고 전체 자료를 정비함

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12/18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12/18) 행사 주간에 맞춰, 에드워드 스노든 다큐 <시티즌포> 상영회(12/15), 역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전시회 진행, 네이버 해피빈에서 의인기금 모금 캠페인 진행

6. 기타(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계획)

- 파면, 해임, 해고(계약해지, 정직 포함)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 계획서를 마련해 아름다운재단에 제출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창해온 내용을 일부 담은 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세월호 참사가 그 배경이 되었으나, 참여연대의 주장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꾸준한 활동의 결실이었음
- “맑고 안전한 대한민국-공익제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캠페인은 퀴즈, 캐리커처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배치해 호응을 받았으나, 언론공동기획사업은 협의 중이던 언론사의 사정으로 무산되었음
- 제보자 지원을 위해 시민들에게 사건을 쉽게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 기존에 지원 활동을 해왔던 제보자 외에 신규지원 사례도 발굴하였음. 시민캠페인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2차, 3차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제보자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불이익 조치자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공익법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공익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를 개선함
- 표현의 자유 외 공익소송 대상 사건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힘

• 2015 주요 활동

1. 공익소송 수행

-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정보 수사기관 무단제공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 △세월호 구조 관련 해경 비난 홍가혜 씨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무죄 선고 등 3건의 공익소송에서 승소함
- 반면 △변호사시험 면과락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항소심 패소), △교육부장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 패소), △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징계 취소소송(항소심 패소), △일베충모욕죄 사건(1심 패소)은 상급심 진행 중임

2. 이동통신사의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수사기관 무단제공 제도 개선

- 가입자 정보제공 현황 확인 시민 캠페인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확인 방법 시정 및 과태료 부과 요청 진정서 제출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악 반대를 위한 △법률전문가 200인 반대선언, △네티즌 1000명 반대서명,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양한 캠페인 진행

4. 모욕죄,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

-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사건 공익변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 제기, 피해자들 대상 수사 및 재판 대응법 교육 실시
-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가기관, 공무원 등에 의해 제기된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를 모은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사건 등 대통령 풍자에 대응하는 경찰과 정부 비판 토크쇼 진행
- 유엔자유권위원회 115차 세션의 한국정부 자유권이행 여부 심의에 맞춰 <한국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

5. 세월호참사 1주기 국민대회 등 집회시위의 자유 옹호

- 서울경찰청이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의 교통용 CCTV 9대를 불법 전용,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것과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
-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 집회에서의 경찰 차벽 설치와 불법해산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의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경찰 상대 손해소 제기

6.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활동

-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 17개> 발행
- 국회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공문 발송
-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협조 재개 선언에 대한 항의 서한 카카오측에 제출

• 성과 및 보완과제

- 유엔자유권위원회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정부정책, 고위 공직자 비판 등에 남용되는 실태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와 영장제시 없는 가입자정보(통신자료)제공 근거 법률조항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하는데 기여했음
- 방송통신심의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심의규정 개악 저지 활동을 통해 의제화 성공하였고 공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부기준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모욕죄 기획 고소사건 피해자 교육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기여함
- 사이버사찰방지법과 관련 가입자정보(통신자료)제공의 문제제기에만 머물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문제, 감청 등의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보완 과제로 남음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통신·영화 분야 시민권리 찾기 캠페인 집중 전개
- 생활밀착형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및 시민·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 중소기업, 소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적극 대응
-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주거 세입자, 상가세입자 보호 운동 적극 수행
-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운동 지속
- 주거, 교육환경 등 민생침해 및 생활안전 이슈 대응

• 2015 주요 활동

1. 중점과제 <통신·영화 분야 등에서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실행

2. 주거·상가 세입자 보호 운동 및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대응

-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노동단체 125개 전국연대단위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출범 및 운영.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도입 촉구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 민간임대 뉴스테이 정책 감시, LH가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건설사에 특혜 문제를 제기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촉구
- 세입자 당사자가 참여해 주거대책 촉구 '세입자 번개 버럭' 개최해 시민 120명 참여
- 상가임차인 권리금 약탈방지를 위해 상인들과 연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

3.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 유통재벌이 대형마트 시장의 하향세를 틈타 기업 계열사를 모두 모은 복합적 쇼핑몰을 출점해 지역상권 초토화를 막기 위해 상인단체와 적극 대응하며 서울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전국복합쇼핑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도시계획적 관점에 맞춘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취소처분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촉구 및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 과정과

- 절차 개선 촉구 활동.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롯데 측에 전달, 전국 동시 1인시위 등 직접행동
- 중소기업살리기·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및 제2의 경제민주화 운동 선포 및 직접행동

4.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징수 중지를 위한 대중 캠페인, 등록예치금 중단 공익소송 제기.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촉구 및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안 공동 발의
- 수원대·상지대·동국대 사학비리 개혁 활동 연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학비리 혐의로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 간 사학비리 비호 문제 제기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수원대 교수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소환 조사 거부 행동(소취하됨)
- 일본의 무상화과학연구소·대학평가학회와 참여연대가 5년째 무상급식·반값등록금·고교무상화·대학구조조정 등 교육의 공적책임 분야 연구 교류 프로그램 진행
- 2014년에 이어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록금캠프 개최(140명 참석)

5. 민생침해 및 생활안전 이슈 대응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문제를 교통부문단체들과 연대해 요금인상 검증방식과 현행제도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제기한 결과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관련 논의틀 마련,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때마다 제안한 조조요금할인제 도입
- 용산화상경마장 폐장 촉구 활동으로 각 정부부처와 감사원에 마사회의 불법적 운영 행태, 탈세문제 고발 및 언론사와 공동 기획, 국회의원실에 사행산업 폐해 연구용역을 제안해 발표하게 하고, 주민대책위와 매주 농성 등 전방위적 활동이 진행되며 민생본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매주 집회, 1000일 넘게 폐장 촉구 농성 중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 등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이 일부 반영된 주거기본법이 제정돼 주거급여 지원 등 기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계기 마련
- 국토부·LH가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할 계획을 포착해 문제제기 및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시킴
- 상인들과 연대해 권리금 약탈을 방지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냄

- 학자금대출 이자율 2.9%→2.7%로 인하.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금액 450만원→480만원으로 증가. C학점경고제가 소득1분위→2분위로 확대되는 등 교육비부담이 경감됨
-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행위를 고발한 결과 검찰이 이인수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로 종결시키려 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안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행태가 드러남.
- 연대단위인 사학개혁국본의 상지대 사학비리 고발 활동 결과 교육부가 상지대 김문기 총장 해임 징계도 요구. 수원대 해직교수들 파면취소소송 승소
- 재벌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이용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할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대법원이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 및 월 2회 휴일 의무휴업제 처분이 정당하다 판결함. 이 판결은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며, 통상협정의 개별조항 위반을 사유로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해, 그동안 기업과 정부여당이 통상협정 위반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를 거부해 온 근거 없는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됨. 또한 유통법 위헌 논란의 종식되었고 의미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겨레21 올해 '최고의 판결'로 선정됨
- 대형마트 출점 후 1년에 1만개씩 폐업하는 영세한 문구소매업 대책으로 2년만에 문구소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NGO상 수상(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실현 운동에 기여)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금융거시 건전성 요인(가계부채, 감독체계, 금산분리 등)에 대한 개입 확대
- 감독당국(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에 대한 권력감시의 기틀 마련
-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

• 2015년 주요 활동

1. 중점과제 <삼성 등 재벌·대기업 특혜와 반칙 근절> 실행

- 보험업법 등 주요 법안을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함
- 재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주요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정 감시, 입법저지 활동 전개함. 삼성 종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해 언론기획 등으로 대체함

2. 채무회생제도의 개혁 등 가계부채 정책대안의 제출과 감시

-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저지 활동 진행함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함

3.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 실제 피해사례를 시민에게 알리고 금감원 등의 책임을 묻는 언론기획 '금융을 외치다' 진행(5회)하고,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사태 피해사례 종합 발표회 진행함
- 생명보험협회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활용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비판함

4. 금융권력 감시

- 신한은행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이끌어 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조치함
- 정부가 은산(銀産)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함. 정부의 정책발표와 사업자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함

5.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증인심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외환-하나은행 합병과정, 하나금융지주와 일부 언론의 론스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등 론스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하는 활동 진행함
-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서 제출,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 활동 진행함

6. 경제민주화운동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4회) 진행하고 재벌 사내유보금 등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회 진행, 참여연대-TBS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진행함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발족 및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 주요 정당과의 정책간담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감독기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금감원이 신한사태의 불법성을 인정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언론기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논리 개발과 대중화 사업을 지속하여 경제민주화 담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함
-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을 막았음. 대안적인 채무조정기관 설립을 관철시키고 가계부채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법활동이 요구됨.
-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관련 은행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은산분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예각적인 접근 요구됨.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감시 기틀 마련
-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 2015년 주요 활동

1. 중점과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과 사회적 연대 확대> 실행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 기성 노동조합 등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캠페인 등 활동 전개함
-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등 노동사안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공조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대함
- <북콘서트> 「땅뎃고 싸우기 -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영화 '산다' 상영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공론화하는 활동 진행함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 「근로감독보고서 1: 최저임금법6조」 발표
- 「근로감독보고서 2: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발표
- 「근로감독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발표
- <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개최

3. 고용보험

-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발표
- 두루누리지원사업 관련 지원방안 변경,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진행함

4. 공공부문 비정규직

- 서울특별시 등 이미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토론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 개진함

-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개최를 통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폄하하는 공공부문 노동용어에 대해 문제제기함
- 강남역 지하철정비노동자 사망사건 등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가 야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 등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활동 진행함

5. 현안대응 및 연대사업

-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기아자동차 고공농성, 케이블통신산업 비정규직 문제,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등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등 해당 사안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추적하는 활동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근로감독의 결과를 공개하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진행하여 일정한 사회적 반향을 얻음. 최저임금, 취업규칙 등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의 결과를 추적함
- 근로감독의 결과 공개와 함께 현장의 불·편법을 시정할 근로감독의 내용적 개선이 요구됨. 근로감독의 수혜자인 현장 노동자의 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용보험을 후퇴시키려는 고용노동부의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응논리개발과 정책대안 제시활동을 진행함. 노동개약 국면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후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거의 유일한 주체임. 고용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 이슈리포트, 토론회 등 기성 방식과 함께 영화 상영회, 관련 서적의 북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노동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의 다양화 시도함
- 당선 1년 차를 맞이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내용을 비판하기 보다 더 많은 도입을 위한 여론화 작업 진행함.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2년차, 생활임금 도입 1년을 시점으로 생활임금의 시행 결과를 검토하고자 함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모두를 위한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 공적연금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정부, 국회 등 보건복지정책/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의 개편 및 복지운동의 대중화

• 2015 주요 활동

1. 중점과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운동> 실행

2.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슈화된 보육 문제를, 보육정책 재점검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 성명, 그림논평, 연대 기자회견, 긴급 좌담회 개최 등으로 적극 대응함. 보육예산 파행에 대하여도 기자회견 등으로 적극 대응 중임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견서 제출, 법사위 의원 면담 등 입법로비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함

3. 공적연금 강화 활동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시민사회, 노조, 공무원사회가 연대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제안단체로 발족을 주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 청년토론회 개최를 주도하였으며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기획을 맡아 진행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이슈로 등장하여 기자설명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 개최 및 카드뉴스 제작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음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성과 없이 종료되어 이를 규

탄하는 기자회견, 성명 등을 연대체 차원에서 진행함

4. 보건의료 정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감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초법 개정 후 지침에 대한 공개질의서, 증언대회 개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제도 감시를 연대체 차원으로 진행함
- 입원료 인상에 대한 대응,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대응, 제주 영리병원 대응,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참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저지운동 등 보건의료 정책 감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 진행. 특히 전혀 이슈화되지 않았던 정부의 임상시험 확대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및 “국민이 마루타인가?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토크쇼” 개최로 임상시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성과를 거둠
- 메르스 사태 이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8문8답 제작, 토론회 개최 등 시민사회의 대안 정리

5. 복지동향 개편 및 복지운동의 대중화 등

- 복지동향 200호를 맞이하여, 특별호를 발간하고, 표지 및 내부 디자인 변경, 인터뷰 코너 신설 등 가독성을 높인 구성으로 개편하여 발간함
- 그림을 이용한 '그림논평', 퍼포먼스 중심 기자회견, 카드뉴스 제작 등 대중적인 방식의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함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제 세미나 참석 및 기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노인연령 상향 시도에 대한 대응 등 전반적 복지이슈에 대한 대응

• 성과 및 보완과제

- 보육, 연금, 보건 등 복지 전반의 이슈에서 연대활동 및 독자적 활동 진행.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임상시험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일부를 최종 대책에서 수정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음
-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정부의 전반적인 복지 후퇴에 대한 대응으로 한계가 있음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세재정체계 재정립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국민소송법 입법화 및 예·결산 감시운동
-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세재정 운동의 연구 및 확대

• 주요 활동

1. 중점과제 <MB자원외교에 대한 대응> 실행

2. 중점과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운동> 실행

3. 시민에 의한 재정지출의 감시와 조정기능 강화

-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정과 예산을 교육하고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과정”을 시작하여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함
- 나라살림 전문가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내년 예산을 평가하는 제3회 나라예산 토론회 개최 및 문제 사업 지목한 자료 발표
- 시민들에게 세금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세금-재정 정보 사이트’(소세지) 구축하여 오픈함(2016년 2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나라살림 전문가과정은 많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함. 나라예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예산 토론회 개최, 예산안에 대한 논평 발표 등으로 예산안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음. 그 밖의 센터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음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 마련
-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 시민이 주도하는 국방정책 감시운동의 전형 마련
- 정부, 국회 등 외교국방정책 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강화

• 2015 주요 활동

1.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 군관사 및 진입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농성 지원과 직접행동
- 제주 평화의 섬 지정 10주년 대응 워크숍 개최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법률지원활동 지속
- 오키나와, 필리핀, 대만 등 기지반대활동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국제참가단과 함께 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개최

2. 파병정책 감시와 성과 평가

- 국군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저지를 위한 의견서 발행, 국회 상임위 방청, 언론기획, 기자회견, 의원면담, 카드뉴스 발행 등을 진행

3. 북한인권에 대한 대안적 시각 제시

-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대응해 남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의 조화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남북 인권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강조하는 입장문 발표, 언론기고 진행

4. 동북아 평화교육운동 프로젝트

- 평화교육 디자이너 강좌(동북아시아 편)를 아카데미느티나무와 공동으로 8회 진행

5.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병영문화혁신특위 활동 모니터 및 입법운동 진행.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군 인권 관련 입법 촉구하는 입장문 발표. 국회 기자회견, 피 해자-의원 면담 조직 등 국회 로비 진행

6.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활동

-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지적하는 의견서 발행, 기자회견, 언론기획, 국회 로비, 면담 등 진행

7.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대응 활동

-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과 관련해 기자회견, 카드뉴스, 국민고발 캠페인, 공개질의, 국회토론회, 언론 기획,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제주해군기지 관련 이슈에 꾸준히 대응하고 법률지원활동도 안정적으로 지속함. 평화, 역사 관련 포럼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제기하고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국제참가단 조직 등을 통해 기지반대운동 국제 네트워크를 만든 성과가 있었음. 다만 기지 완공 이후의 운동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부족한 상황임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음. 군 인권 법안 모니터와 로비 활동 결과 관련 입법 부분적으로 성공했으나, 군인권보호관 실제 설치법 마련 등 과제가 남은 상황임.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안에 참여연대의 대안적 시각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나 법안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임
-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에 발 빠르게 현안 대응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음. 카드뉴스를 제작을 비롯해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론화를 이루어냄.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에서 과거 수차례 탄저균 반입, 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면담 진행하고 추가적 조사 요구하는 운동 펼칠 예정임
- 평화교육 디자이너 아카데미 강좌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기대보다 수강자가 적었으나 8회 강의를 진행함
- 외교·국방 분야 민주적 통제의 선결 조건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당장 성과가 있지는 않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할만함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사회 의견 반영
- 아시아 연대를 통한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 개선
- 유엔 애드보커시를 통한 국내 인권실태 개선

• 2015 주요 활동

1.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 2차 ODA 기본계획 수립,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토론회 개최, 정부와의 간담회 등 진행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이슈리포트 발행
- 원조의 군사화 이슈리포트 초안 마련. 재건사업/재난구호/치안한류 관련 추가적 자료 수집 및 재구성 중
- ‘지속가능한개발계획(SDGs)’ 정부간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 공통 의견서 제출, 정부와의 간담회 진행

2. 연대를 통한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 개선

- 버마, 시리아, IS, 캄보디아 등 인권과 민주주의 주제로 아시아 칼럼 총 9회 발행
- 이야기마당 상반기 <IS의 탄생과 국제사회의 대응>, 하반기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진행
- 버마 선거감시단 참여 한국인 참가단(5명) 모집 및 조직을 담당하며 국제선거감시 활동에 참여

3. 유엔 애드보커시를 통한 국내 인권실태 개선

-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83개 NGO 공동 보고서 발행, 공익법센터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관련 참여연대 단독 보고서 제출, 자유권 심의 즈음 제네바 현지 로비 활동, 국내 언론 기고, 자유권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등 진행

-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방한을 맞아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진행.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 제출.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12월 5일 범국민대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유엔 특별보고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의 관심을 촉구하는 연대활동 진행
- 포럼아시아를 통해 국제인권감시단을 조직해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영문 보고서 작성 주도

• 성과 및 보완과제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의견서, 간담회, 토론회 등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안이 채택되었음. 언론을 통한 압박, 국회로비 등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함
-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민사회 선거감시단을 조직하여 버마선거감시 연대활동을 진행한 것이 큰 의미가 있음.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의 순간인 버마총선 선거감시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그동안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꾸준히 대응해 왔던 ‘버마 민주화’ 지지활동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연대 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있음
-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했음. 유엔 인권 권고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법무부 인권국, 외교부 인권사회과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영향력을 높임. 국내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기동성 있는 대응을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여론 환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냈음. 시민사회의 유엔 애드보커시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함
- 자유권 규약 심의 위원들이 국내 인권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국 정부에 적절히 질의하고 실효적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얻음. 정부의 답변과 향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과제임
- 긴급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사안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유엔 애드보커시를 적절히 활용함. 국제 인권 권고를 국내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는 활동과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음

참여연대 국제연대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글로벌 참여연대를 위해 국경을 넘은 시민사회운동 본격화
- 참여연대 내부 국제연대 역량 강화

• 2015 주요 활동

1. 각 활동기구별 국제연대 목표 구체화

- 각 부서의 국제연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간사 해외 출장 시 유엔 메커니즘, 국제규범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진행
- 국제연대 담당자 정기 모임 1차례 진행

2. 참여연대 영문 자료 제작 및 관리

- 각 활동기구의 영문명 점검하고 브로셔 내용 구성안 초안 작성

3. 해외 출장 경험 공유와 확산

- 해외출장 매뉴얼과 출장 키트를 마련하고 간사들에게 공유함
- 출장 이후 출장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글 공유 또는 보고회 등을 하도록 독려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각 활동기구 별 국제연대 사업에 적재적소에서 기여하고 있음. 점차 개별 센터의 국제연대 사업이 발굴되고 있어 국제연대 전담자 회의를 활성화하고 수요에 맞는 활동 매뉴얼 및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 국제 NGO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수요자들의 시각에 맞춰 영문소개자료 초안을 완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의사소통 지연,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제작이 늦어지고 있음. 영·일 웹사이트 개편은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획 수립할 예정
- 해외출장 매뉴얼과 문서형식 활용한 보고서 작성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음. 출장 후 보고회, 후기 기고 등을 독려하여 출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문화가 정착함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주요활동

1. 4개 시즌별 강좌 진행

- 4개 시즌별 강좌(56개 강좌를 통해 총 318회 강의 진행, 약 1천 명의 시민 참여)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2.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노년 세대를 위한 <푸른시니어 학교>, 시민예술 심화과정 <느티나무 미술학교>, <독서서클> <토크리추얼> <책리추얼> 등 새로운 시민교육을 적극 도입 및 활용하고 있음
-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 <시민연극단> <그림者> <역사답사모임> 등 강좌 후속모임 및 소모임이 진행되고 있음
-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은 서울댄스페스티벌(9월)과 세월호문화제(11월), <시민연극단>은 인권연극제(9월) 등 공연 참여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

3. '민주주의학교' 발전과 체계화

- 민주주의학교 활동가교육(TOT : 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공익로비학교>,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체계화하고 있음

4.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새로운 형식의 <배움의 공동체 독서클럽>, 강사간 협력으로 기획한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대화, 참여, 활동, 예술을 통한 상호 배움을 다양하게 시도함

5.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시민교육에 대한 조사와 연구, 내부 세미나는 비정기적으로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5년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시즌별 강좌를 안정적으로 기획 및 진행하였음. 최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저가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는 한편, 시민사회 내에서의 시민교육은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임을 감안하면, 수강 규모 등 예년 수준 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미술모임 그림者, 역사답사모임 굴렁쇠, 도시의노마드 춤서클, 시민연극단 등)들이 조금씩 정착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기 수강자들이 기간의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강좌들에서 중요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등 배움의 공동체성과 배움의 문화가 천천히 성장해 나가고 있음.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세월호 1주기 걸개그림 그리기, 9월 서울댄스페스티벌 참가, 11월 세월호문화제 춤 공연, 11월 인권연극제 공연 참여 등 개인의 관심 분야 활동이 사회 참여 활동으로 성장해가고 있음
- 청년 세대의 아카데미 수강을 확대하기 위해, <김만권 독서클럽> <정치철학> 등 일부 강좌는 강사 요청으로 참여연대 청년학생 회원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적용하였으며, <애드보커시 입문>, <평화디자이너 과정> 등 TOT 강좌 일부는 청년참여연대 창립준비위원들이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함
- TOT 프로그램의 경우 수익이나 참여률은 저조하나, 참여한 활동가들의 만족도 및 필요성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으며, 시민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 및 커리큘럼을 정리하고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책무로 여기고, 활동가들 맞춤형 강화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등을 보완할 예정임
- 새로 배치된 상근자 2인의 강좌 진행 등 실무는 향상되고 있음. 다만, 시민교육에 대한 조사연구와 학습은 필요성에 비해 강좌 진행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 정체됨
- 보다 적극적인 SNS 및 팟캐스트 활용, 기수강생들 연계 홍보 등 효과적인 소통방식 개발이 필요함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연구 역량 강화,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 통한 연구소 활동 활성화
- 연구소 발간물 정비와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획 시도

• 주요 활동

1. 기획연구사업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 독일 정치, 경제, 사회, 복지, 통일 등 분야별 사전학습 세미나(월 1회, 총 9차)를 순조롭게 진행·종료하고 10/30 워크숍 및 12/4 심포지엄 실시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연구 관련, 연구 내용 관련 이견을 확인하여 공동연구 관계 해소

2.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

- 2분기 법인 해산 및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이후 3분기에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내부 상설 위원회 구성 완료
- 법인 정관을 대체하는 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완료

3. 연구기금 설치

-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과 함께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금 조성 및 관련 내규 제정

4. 출판 《시민과 세계》

- 상반기 26호, 하반기 27호 발간
- 26호 발간 직후부터 개편 논의를 진행하여 편집위원회 재구성과 발행체계 개편을 3분기에 완료함(등재후보학술지 지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규정〉, 〈발행 규정〉, 〈집필 요령〉, 〈연구윤리규정〉 등의 제정 및 공표)
- 등재후보학술지(한국연구재단 지정) 형태로 제27호 발간

5. 시민정치시평 (칼럼)

- 주 1회 시민정치시평 발행 지속(2015년 중에 49편 발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연구소 운영체계 및 《시민과 세계》 개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 활동 활성화, 담론 주도 및 대중적 확산 등의 활동은 기대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
- 그러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서 향후 연구소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기획위원회 신설 등 새로운 전문가 및 연구자 그룹이 결합하였으나, 운영위원회 활동력 제고, 편집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강화(인적 보강 포함), 자문위원회 관리 등은 여전히 요구되는 과제이고 특히 신진 연구자 충원 및 연구분과위원회 신설을 위한 다각적 노력 및 새로운 접근 필요함
- 3분기 《시민과 세계》의 등재후보학술지 지정을 위한 개편 작업을 완료하여 향후 3년간의 진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이전 호에 비해 원고 편집 실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접수 및 심사 등 절차 관리에 소요되는 업무(행정비용)가 증가함. 또한 조직 및 체계 개편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예상 외의 변수(투고 논문 탈락 및 기획 논문 미투고 등)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음. 앞으로 일반논문 원고 수급의 안정화 및 내부 심사역량 강화 필요함
- 평화복지국가 연구의 경우, 과거 두 차례 연구(2012/2013년)에 비해 ‘평화복지국가’의 개념 및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었음. 단행본 출간 등 연구 성과 확산 및 후속 연구 기획 필요함
- 시민정치시평은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기획 강화로 시평을 게재하는 언론사측의 SNS 반응이 개선되고 기사 조회 순위도 상승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반면 고정필진의 집필 동력 고갈과 그로 인한 필자 선정 및 섭외의 어려움, 기획취지가 왜곡된 제목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규 필진 구성 및 발행 매체 재고를 포함한 전반적 재검토가 요구됨
- 2015년에 조성한 연구기금을 활용하여, 참여사회연구소가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서 참여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연대 중장기적 활동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과제 기획 필요함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소속감 고취
-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유도
-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주요 활동

1. 회원들과 소통 및 만남 확대

- 정기총회, 회원월례모임(총 5회 진행), 지역회원만남의날(상반기 4회, 하반기 3회), 회원캠프, 송년회 등 정기 회원행사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
- 산행(시산제, 800회 정기산행), 정기공연(참종다, 패누카), 마라톤대회(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 등) 참여 등 회원모임 주관 행사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였음

2. 회원, 시민교육 확대

- 총 52명(정기 48명, 부정기 4명)이 자원활동을 하였음

3.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으로<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하였고 탐방프로그램(총 45건)을 통해 474명이 방문하였음

4. 공간을 통한 문화사업

- 카페통인 문화행사로 매월 '음악,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잇는 <통인> 콘서트' 개최하였음(총 12회, 375명 참여). 작은 모임으로 <자연을 닮은 손바느질>, <드로잉 원데이 워크숍>등을 진행하였음
- 갤러리느티나무 전시는 총 13회(내부 대관 7회 포함 : 아카데미느티나무 외 5회, 기획전2회) 진행하였음
- 카페통인은 주 6일 영업(일요일 휴무, 1일 12시간 영업), 양질의 음료 제공, 각종 이

벤트 등을 통해 카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음

- 세월 1주기를 맞아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을 통해 67개 상점이 동참하였음.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매월 <참여사회> 배포하고 매장 비치를 요청하고 있음

5. 기타

- 청년프로그램으로 15기 청년인턴프로그램(1/5~2/12, 24명 수료)과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7/6~8/6, 25명 수료)를 진행하였음. <불온대장정 2기 : 내일로 타고 떠나는 오늘의 아픔>(8/14~17, 13명 참여)을 진행하였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회원서비스, 자원활동 모집 등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정기 회원행사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 특히 <회원월례모임>과 <지역회원만남의 날>, <청소년자원활동>, <회원캠프>는 사업부서 의제(청년, 세금, 정치개혁, 평화)와의 연계를 통해 서로 간 시너지효과를 내었음
- 다만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교육과 지역별 회원모임 활성화 및 회원수칙 마련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진행하지 못했음
- 청소년용 탐방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중임. 다만 탐방 규모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2014년 62건 802명 방문 → 2015/12/10 기준 45건 474명). 올해 탐방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창의체험배움터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음. 평가를 낮게 받은 항목을 보완하여 내년에 다시 지원할 예정임
- 세월호 1주기 대응 사업으로 추모전시회, 북콘서트, 서촌가게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거리행진 등 다양한 참여행사를 진행하였음. 특히 서촌 가게들과 함께 한 캠페인은 서촌 상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매월 <참여사회> 배포하고 매장 비치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임
- 7월에 진행한 16기부터는 '인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익활동가학교>로 개편하여 진행하였음. 2016년 겨울에 진행되는 17기부터는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청년참여연대 주관으로 진행됨

- 카페통인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지났음. 그동안 영업시간 확대, 다양한 할인 제도 도입, 이벤트 기획 등을 통해 꾸준히 방문객을 늘려왔음. 음료의 질과 서비스 등에서 만족도도 높은 편이며 카페통인 회원(12/31 기준, 699명)과 단골도 증가하고 있음. 다만 매출에 있어서는 재료비 포함 상근자 2인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함. 매출 분석을 근거해 지난 9월부터 정기휴무일을 화요일에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일요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효과도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 카페 방문객 등 더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월 1~2회 정도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음. 현재 예술·인문(북토크, 콘서트, 드로잉 등)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 갤러리 대관은 기대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편임. 이후 카페활성화TF를 통해 갤러리 느티나무 대관 및 카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민참여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행사에서 자원활동가의 배치 및 역할을 높일 예정임. 또한 각종 행사의 사전 준비와 평가에서도 참여자들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지역회원 모임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지역과 주제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모임 신설도 시도할 예정임

정책기획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활동방식 혁신을 위한 논의와 연구
-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강화
- 정책기획 기본사업 강화
- 참여연대의 의제 통합성 제고와 새로운 의제 발굴을 위한 참여사회포럼 운영
-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주요 활동

1. 조직혁신을 위한 논의와 연구

- 1월 사무처 활동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 및 조직혁신을 위한 집중논의 진행
- 3월부터 조직혁신TF 구성하여 12차 회의까지 진행하고, 탄력근무제, 사무처 거버넌스 개선안 논의를 진행하여 탄력근무제를 11월부터 시범실시, 사무처 거버넌스 개선안과 전체상근자회의 강화안을 전체간사회회의에 제안하고 조직혁신 TF는 마무리 함
- 전체간사회회의를 활성화하여 월 1회로 정례화함

2.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강화

- 분기별 사업평가를 진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집중 평가를 진행함

3. 정책기본사업 강화

- 입법, 소송, 정책 자료실 주기적 점검(매분기) 및 업데이트(매월), 소송 및 입법자료실 작성 매뉴얼 업데이트(11월)
- 소송자료실 운영 지침 개정 완료-소송자료실 소송자료 비실명화 진행 중(12월)
-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4-2015 제작 및 배포 진행(9월)
- 국감과제(9월) 및 입법정책과제(10월)를 참여연대 차원에서 종합하여 발표
- 500인 회원모니터단 2월, 6월 10월 설문 실시 및 보고, 3기 회원모니터단 구성 완료(6월)

-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및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연대사안에 대한 지원과 대응

4. 참여사회포럼 운영

- 참여사회포럼을 구성하여 1월부터 정례적으로 진행(총 10회 진행), 9월부터는 연구소가 맡아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5. 상근자교육

- 사무처 교육TF를 구성해 OJT매뉴얼과 PME 매뉴얼을 만들고 사무처에 공유
- 상근자 2015 정기교육(연 40시간) 실시(재무제표, 엑셀, 애드보커시, 민주적 회의기법, 비영리조직경영 등)

• 성과 및 보완과제

- 1월 사무처 집중논의와 조직혁신 TF 활동을 통해 조직의 통합력을 높이고 활동방식 개선과 사무처 거버넌스 개선의 기초를 마련함.
- 조직혁신TF의 논의의 결과로 탄력근무제를 11월부터 도입하여 시범실시 중. 상근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3기 회원모니터단을 새롭게 구성하였고, 정기적 설문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함
- 교과서 국정화, 설악산케이블카 등 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참여연대 차원의 연대사업을 진행함
- 참여사회포럼은 1월부터 총 10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이룸. 상집과 활동기구의 정책적 통합성을 제고한다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여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상근자교육은 매뉴얼 작성과 정기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전체 교육 모듈의 완성은 2016년 과제로 남았음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알기쉬운 참여연대 : 단체/사업/활동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
- 유통하는 참여연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넓게 콘텐츠 유통
-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 뉴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시민참여, 소통을 지향

• 주요 활동

1. 시민에게 친근하고 알기쉽게 참여연대 이미지 홍보

- 단체PR :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라는 2015 슬로건에 맞춰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캠페인' 광고를 팟캐스트 '국민TV',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연중 방송함. 이 광고는 월간 참여사회와 교환광고임. ([국민TV]는 '이강운의 오늘', '이용마의 한국정치', '안진걸의 을아차차')
- 시민단체의 상생을 위한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캠페인'을 10여 개 단체가 함께 기획 사업으로 진행. 단체별 소식지/잡지 교환광고 진행함.
- 홈페이지/모바일 개편 : 메인페이지는 이미지 전면 배치, 시민의 참여/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에디팅 기능을 강화함

2. 성과알리기

- 사업 홍보에 대한 상근자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홍보알리미'라는 메일로 콘텐츠의 다양한 홍보 방법에 대해 적극 공유하고 소통함.
- 월별 집중사업을 웹포스팅하고, 월별 집중사업과 SNS 인기글을 상집/운영위/간사전체에게 공유함
- 20주년 백서에 기록된 사업성과를 '빛나는 활동 100'으로 홈페이지 반영함
- 상근자에게 홍보 관련 정보제공 및 매뉴얼(웹포스팅 매뉴얼) 교육 강화 : 미디어 활용 방법, 다양한 홍보 방법을 내부적으로 적극 공유 및 교육함.

3.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고 소통하는 참여연대

- 팔로워 10만 만들기 : SNS 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전담관리자를 배치하여 트

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스토리채널에 맞게 콘텐츠를 게시(업로드)하고 있음. 페이스북 페이지로 전환하고, 카카오톡옐로아이드를 개설하여 시민/회원 소통을 확대함.

-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SNS와 오마이뉴스에 게시하고, 지역도서관(서울, 경기 등)과 사무실 인근 가게에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함.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을 6월부터 안정적으로 제작함. '톡톡! 철학사이다'를 비롯해 특집기획 등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사업부서 활동의 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홈페이지를 웹반응형으로 레이아웃을 바꾸고, 메인페이지에서는 이미지를 전면 배치하여 중요 사업을 알리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음.
-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채널)은 전담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콘텐츠 유통 채널로 정착함. 특히, 카카오톡 옐로아이드는 회원/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는 데 큰 호응을 내고 있음.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이 팟빵 순위 50위 내에 진입함(2016년 2월 19일 현재, 팟빵 등록 팟캐스트 총 7,500여 개). 하지만 채널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팟빵 : 팟캐스트 순위정보 제공 사이트)
- 참여사회의 온오프라인 유통 확대로 시민 소통의 수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7개 단체의 월간지와 교환광고를 추진하여, 2016년부터 진행하게 됨.
-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캠페인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0여 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면서 일정이 많이 지체되고 있음. 각 단체의 시민/회원/홍보 담당자들이 기획에 참여하면서 단체간 캠페인 정보를 교류하고, 연대의 정신을 높이는 의미가 있음. 2016년에 집중할 사업계획을 시기별로 정리하기로 함.
- 참여연대 브랜드 홍보(PR)는 담당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6년 과제로 남겨짐.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소통방식 다양화를 통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 집행위원회 정례화 및 사무처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통합성 제고
- 전현직 임원과 전현직 활동가의 네트워크 강화
- 평생회원, 보류회원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
- 회원 데이터베이스(이하 DB) 온오프라인 자료 정비

• 주요 활동

1. 소통방식 다양화를 통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 2015사업계획에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운영위원 공청회 개최.
- 운영위원회 활성화 TF 구성하여 운영위원 설문을 진행하고, 친교를 위한 MT 진행 하였으며 사무처 활동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운영위원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SNS 방을 개설하였으며, 더 많은 회원들과의 교류를 위해 회원모임, 소모임과의 교류프로그램을 논의함.

2. 집행위원회 정례화 및 사무처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통합성 제고

- 집행위원회는 분기별 정례적으로 개최함.
- 집행위원회 등 주요 임원회의에 간사들의 참여를 독려함.

3. 평생회원, 보류회원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

- 평생회원, 보류회원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매뉴얼 정비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함.
- 회원 내실화를 위해 장기미납회원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1단계 정리를 실행함.

4. 회원 데이터베이스(이하 DB) 온오프라인 자료 정비

- 회원 DB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온라인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함.
- DB 관리 강화를 위해 자원활동가 교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운영위, 집행위, 상집, 사무처(팀장회의, 주간조회) 회의 등 주, 월, 분기 단위의 정례 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함.
- 운영위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운영위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설문, 친목MT, 운영위원회 회의 개선, 회원모임과의 교류 계획 등을 추진함으로서 접촉면을 다양화 함.
- 집행위 사무처 간 소통강화와 정책통합성 제고, 전현직 임원, 전현직 간사 네트워크 강화 교류는 진행하지 못했으며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두고 있음.
- 운영기획팀 일상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함. 일상 업무 매뉴얼을 정비함.

연대활동

○ 2015년 주요 연대활동 평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 2015년에도 2014년에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활동은 참여연대의 주력 연대사업으로 진행됨. 2014년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3월부터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5월까지 진행함.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춰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위한 긴급행동, 집회, 1박2일 농성을 진행함. 6월 28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세월호를 기점으로 결성된 각 풀뿌리시민모임이 힘을 합하여 상설 연대기구인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를 결성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함. 참여연대는 416연대 산하에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과 상근자를 파견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모니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방해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중대재해기업책임법제정운동과 416인권선언 운동에도 함께 연대하고 있음.

비례대표 확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고 결정한 이후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예정되었음.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 내에서 유권자의 지지(표)가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다양한 대표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모아짐. 이에 참여연대는 8월 25일 전국 255개 지역, 부문 단체들과 함께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해 전국 단위의 정치개혁 운동을 시작하였음.
-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3대 방향을 수립하고,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국회에 청원함.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표명과 국회의원 면담 시도 등 국회 로비 활동,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 회의 공개 촉구 피케팅 등으로 시민사회의 선거제도 개혁 활동을 알려나갔고, ‘불공정한 선거제도 확 바꾸자! 유권자 행진’ 등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활동 조직, 시민원탁토론, 정치 사랑방, 정치 특강 등 시민 토론행

사 기획 등으로 정치개혁 열망을 모아내기 위해 힘을 기울였음.

-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느라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새누리당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원칙으로 논의되도록 기여한 것은 의미가 큼.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유권자의 의사대로 국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개혁과제임.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 등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는 2016년에도 이어가야 함.

경제민주화·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

-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9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확대·재편해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소비자를 위한 재벌대기업의 횡포 감시 및 당사자운동, 입법운동을 진행함.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강행 저지 및 공정위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규제철폐 요구 철회 촉구 활동, 중소기업 피해사례 연속 토론회,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방안 토론회,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 관련 토론회 등 개최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감시 및 '을' 보호 운동 전개. 8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제기하며 롯데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정책과제' 발표. 8월 26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 개선 △청년·노동자·중소상공인·소비자 권익 보호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 발표하고 제2의 경제민주화 운동을 시민·노동·청년·상공인·소비자단체와 함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개장 반대를 위한 연대 활동

-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운동에 대한 참여연대의 연대활동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해 있고, 경마도박객들로 인하여 현재 주거·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참여연대는 주민대책위와 연대하여 각종 행정 신고와 2차례의 감사청구, 3차례의 형사고발을 제기했음.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임. 참여연

대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도박장이 학교 앞·주택가 인근 입점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85.1%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함. 용산 주민들은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고 있고, 매일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참여연대도 이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음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역복지 수호를 위한 연대활동

- 참여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등 운동을 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에 결합하여, 연대 또는 독자적으로 입원료 인상에 대한 대응,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저지운동 등 보건의료정책 감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함.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사회 토론회와 정책대안 제시 등 활동을 벌임.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추진하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전국 지역단체,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75개가 모여 “전국복지수호 공대위”를 결성하고,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 축소에 대응함. 국민공청회 개최, 선전전, 전국 토론회, 입법의견서 발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국 지자체장에게 정비결과 제출거부 공문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복지 침해를 이슈화하고, 많은 지역에서 복지에산이 삭감되는 것을 저지하는 성과를 냈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 참여연대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 기성 노동조합 등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캠페인 등 활동 전개함. <북콘서트> 「땅딘고 싸우기 -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영화 ‘산다’ 상영회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시민 간 소통 진행함. 정부의 노동개악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기아자동차 고공농성, 케이블 통신산업 비정규직노동자 이슈 등 개별사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을 조직하여 발표함. 다양한 노동사안을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연대사업의 초석을 마련함.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시각차이, 심각성에 대한 온도차 존재함. 정부 노동개악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높이는 연대 활동이 필요함. 노동사안에 대한 내용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연대의 확대를 위해 연대방식의 다양성 확보와 보다 유연한 대중캠페인 방식이 필요함.

분단7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 2015년 해방,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활동은 참여 연대 평화군축센터 주력 연대사업으로 진행됨.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를 즈음하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미주, 유럽의 시민들을 조직하여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을 발표함. 유엔에서는 이 선언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공동포럼을 진행하기도 함. 이 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의 정치가, 연구자, 시민사회 인사가 모여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진행함.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경기도(지사 남경필), 원혜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초당파적으로 행사를 조직하고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비핵화, 일본 평화헌법 수호가 필요하다는 포괄적인 공감대를 형성함. 참여연대는 회의 마지막에 채택된 동아시아평화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으며 회의 진행과 네트워크 관리 등의 실무도 주도적으로 진행함.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유엔 메커니즘 활용 등 국제연대 활동

- 2015년에도 2014년에 이어 한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국제 연대 활동을 지속함. 세월호 1주기 집회, 박래군,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들에 대한 사법 탄압 등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인권옹호자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의 성명을 이끌어 냄. 10월에는 9년 만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가 열렸으며, 이에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함. 참여연대는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의 사무국을 맡아 정부 보고서에 대응하는 NGO 보고서 작성, 국내 언론 기고, 제네바 현지 로비 활동 등 주도적인 역할을 펼침.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도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인권조사단의 방한을 이끌어 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으며 이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중.

○ 연대기구 가입 현황

– 2016. 3. 5. 현재 국내연대 73개 단체, 국제연대 7개 단체 가입

국내연대 - 상설 연대기구 (11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최저임금연대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국내연대 - 한시적 연대기구 (62개, 기구명/가입년도/주무부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	정책기획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2003년 결성후 휴면, 2015 활동재개)	2015	평화국제팀
백남기농민패유와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	2015	시민감시2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2015	의정감시센터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2015	사회복지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공동행동	2015	정책기획팀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2015	민생희망본부
탄저균 불법 반입 ·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2015	평화군축센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	노동사회위원회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2015	노동사회위원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공동행동(2012)이 전환	2015	사회복지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2014	사회복지위원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14	노동사회위원회
불법파견 위장도급 근절!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2014	노동사회위원회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4	민생희망본부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2014	시민감시2팀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2014	평화군축센터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4	민생희망본부
좋은농협만들기전국운동본부	2014	정책기획팀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2014	평화군축센터 /사법감시센터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2014	시민감시1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2014	정책기획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	2014	민생희망본부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2014	정책기획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2014	사회복지위원회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2014	경제노동팀
FTA대응 범국민 대책위원회(약칭FTA범대위)	2013	경제금융센터
예산감시네트워크	2013	조세재정개혁센터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	2013	경제노동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2013	노동사회위원회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2013	평화군축센터
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	2013	노동사회위원회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총체적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위한 시민사회시국회의	2013	행정감시센터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3	노동사회위원회
철도공공성시민모임	2013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2	민생희망본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2	평화군축센터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2	민생희망본부 /경제금융센터
공무원노조 법적지위인정과 해직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2012	노동사회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권리 내보라 운동본부	2012	의정감시센터
표현의자유를 위한 연대	2011	공익법센터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2011	민생희망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치개혁위원회	2011	의정감시센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1	평화군축센터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2011	사회복지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2010	민생희망본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2010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2010	경제금융센터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2010	행정감시센터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2010	평화군축센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2010	노동사회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 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2009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2009	민생희망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09	사회복지위원회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	행정감시센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2009	평화군축센터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8	민생희망본부
국제인권네트워크	2008	국제연대위원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2008	민생희망본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	평화군축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999	공익법센터

※ 활동종료 등으로 2015년 해소/탈퇴가 확인된 연대기구(5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2015 우리농업지키기 소비자 10만인대회 조직위원회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중생활보장위원회

국제연대 (7개)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GPPAC Northeast-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in Northeast-Asia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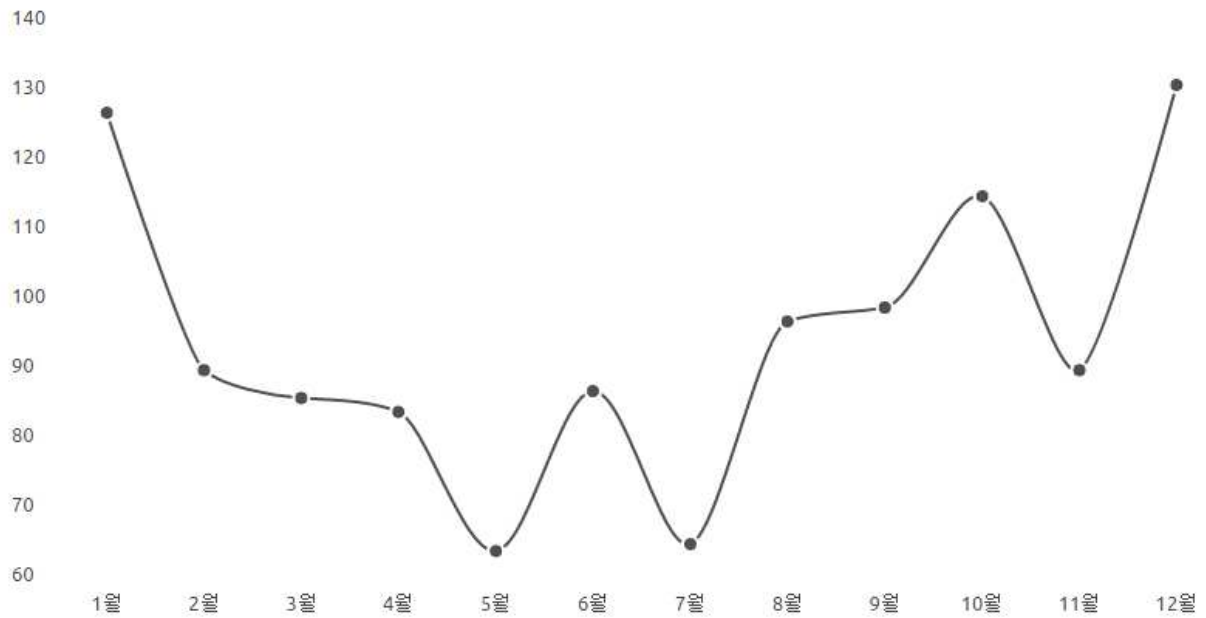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연맹

회원현황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시민교육
감시와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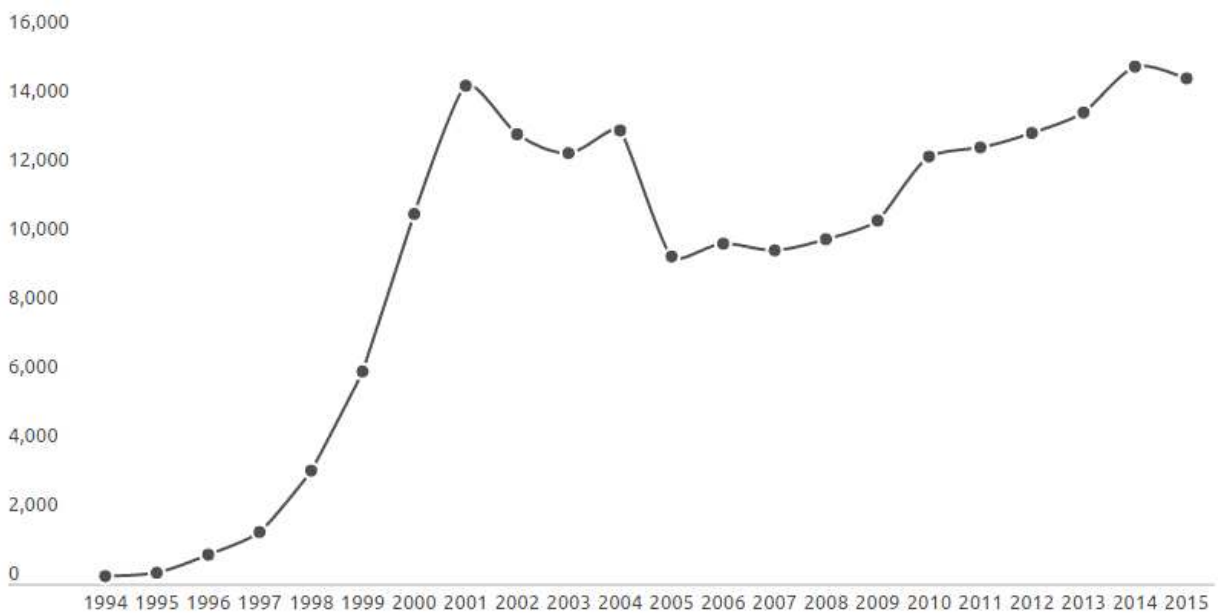
참여연대 2015 활동 기록 · 통계

회원현황 (2015.12.31. 기준 회원 수 14,6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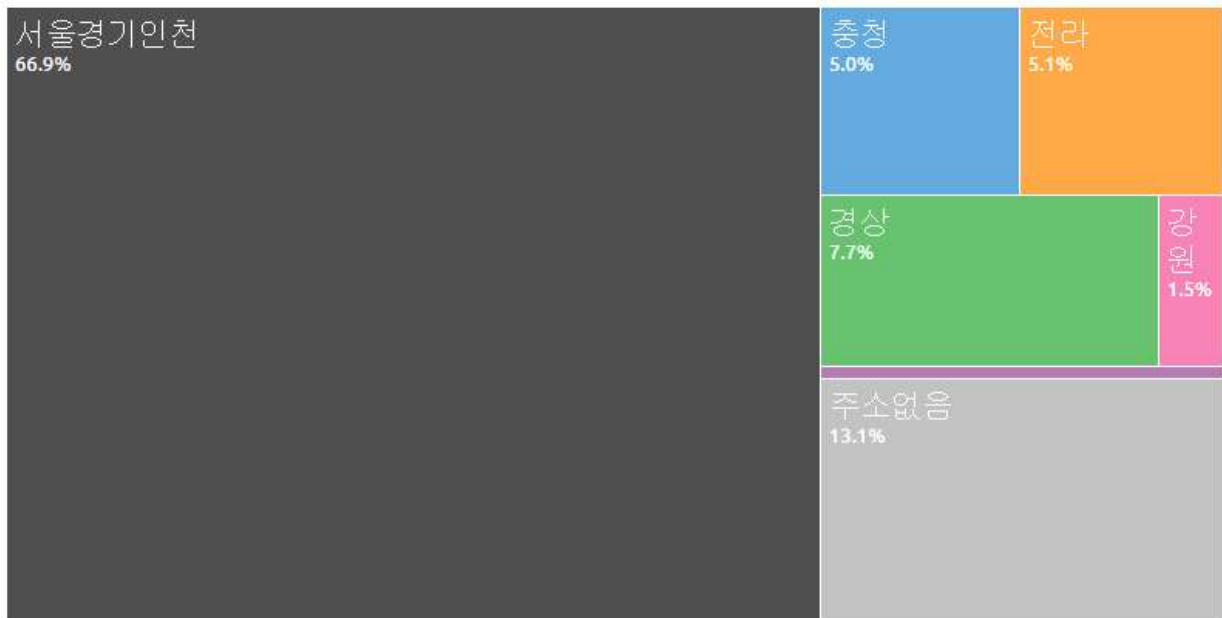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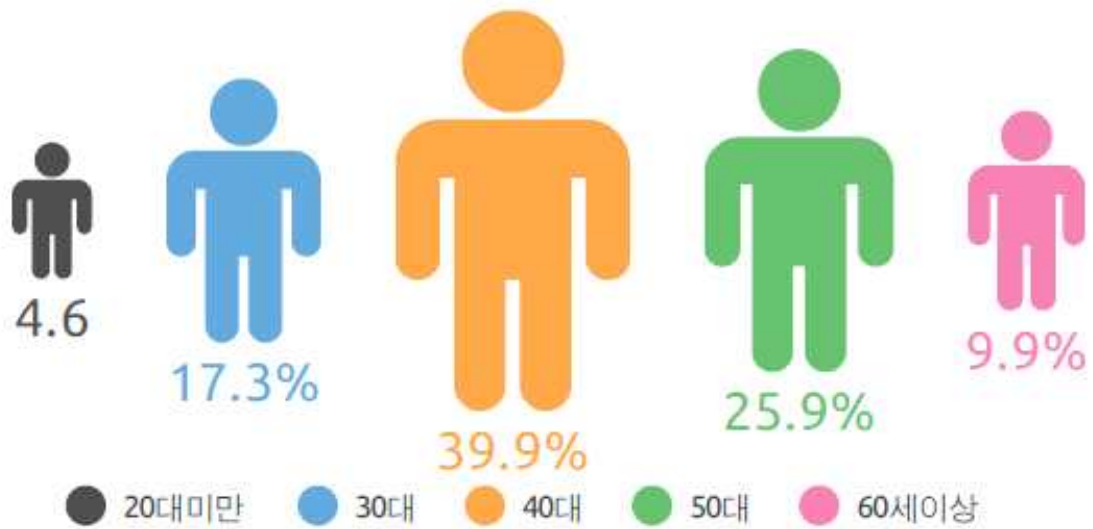
□ 2015년 월별 회원 가입 수



□ 연도별 회원 수 추이



□ **연령 · 지역별 회원분포** (2015.12.31.기준, ※지역은 집주소를 기준으로 함)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 회원 행사

- 제21차 정기총회 진행, 3/7
- 지역회원 만남의 날
 - 상반기 4회 : 3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광주·대구·대전·부산
 - 하반기 3회 : 7, 8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수원, 성남
 - 10월, <쉬자! 해남 땅끝마을, 대흥사 템플스테이>, 전남·경남
- 회원월례모임 5회
 - 5월, <박철우 대표가 들려주는 커피, 커피공방 이야기>
 - 7월, <범인스님이 묻다 :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 되는가>
 - 8월, <청년조성주가 말하는 2세대 진보정치와 청년운동>
 - 9월, <맥주파티-복지와 세금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 11월, <우리동네 캣맘+집사+반려인 다 모여라!>



△ 회원월례모임 <맥주파티 - 복지과 세금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2015.09.22.)

-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10/17~18
- 회원송년회 <대시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2/16

□ 청년 프로그램

- [15기 인턴] 내일을 뒤흔들 상상력은 청년으로부터!, 1/5~2/12. 총 144시간
-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7/6~8/6 총 96시간



△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입학식 (2015.07.06.)

- [불온대장정 2기] 내일로 타고 떠나는 오늘의 아픔, 8/14~17



△ 불온대장정 2기 (2015.08.14.)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8/4



△ 청소년자원활동 프로그램 (2015.08.04.)

□ 자원활동

- 자원활동가 정기모집 4회(분기별), 84명 참여

□ 참여연대 방문 프로그램

- 45회, 466명 방문 : 청소년 22회, 대학생 9회, 일반 10회, 해외 3회

□ 카페통인 - 음악,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잇는 <통인> 콘서트 외(14회)

- 01/22 [북토크] 티모시 브룩 북토크 (너머북스와 공동주최)
- 02/06 [음악회] 가수 하림 Gate lounge 콘서트
- 03/16 [소박한테이블] 자연을 닮은 손바느질
- 03/29 [음악회] 프로젝트 코렐리 '작은 것이 아름답다 Vol.3'
- 04/14 [북토크] 세월호를 기록하다
- 05/02 [오픈하우스 서촌] <인문목공소-세상에서 제일 작은 도서관> +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공연>
- 07/24 [북토크] 이채훈과 함께하는 <클래식 400년의 산책>

- 08/21 [북토크] 오로가 들려주는 쿠바 이야기 <쿠바 알 판판 알 비노 비노>
- 08/26 [토크쇼] 한국 PD교육원과 함께하는 인문학 포럼 정신과 의사 문요한의 <여행과 인간>
- 09/05 [소박한테이블] 드로잉 원데이 워크숍
- 09/17 [북토크] 음악평론가 서정민갑의 <포크음악 히치하이킹하기>
- 10/15 [북토크] <인민> 출간 기념, '왜 인민인가?'
- 11/25 [북토크] 다르게 살고 싶은 여덟 가족의 집짓는 이야기 <협동조합으로 집짓기>
- 12/26 [토크쇼] 이것은 조선인의 역사를 남기는 일이다 <단바 망간 기념관을 아시나요>



△ 가수 하림 Gate lounge 콘서트 (2015.02.06.)

□ 전시회 (13회)

- 02/02~02/15 [갤러리느티나무] 윤지원 전시 <낮선공간>
- 04/03~04/09 [갤러리느티나무] 사진전 <아름다워서 슬픈 가리왕산>
- 04/11~04/27 [갤러리느티나무] 세월호 1주기 추모전시회 <꿈에라도 보고 싶다 : 단원고 학생 일러스트와 가족 편지>
- 05/30~06/06 [갤러리느티나무]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 9기 <봄 - 서울을 보다 그리다>
- 06/08~06/14 [갤러리느티나무] 여행작가학교11기 사진전<여행의 순간>
- 06/19~06/26 [갤러리느티나무] 아카데미느티나무 미술학교 인체드로잉 <머리부터 발끝까지>

- 09/02~09/11 [카페통인] <대공원>, 박정은 일러스트레이터
- 10/28~11/06 [갤러리느티나무] 김세경 <삶의 편린(片鱗) 전(展)>
- 11/20~11/26 [갤러리느티나무] 중앙대학교 사진집단 현장 30주년 기념 전시회
- 12/06~12/11 [갤러리느티나무]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10기 <I · 서울 · 그림>
- 12/07~12/12 [카페통인] 그림者 소품전 <천안 골목길 풍경전>
- 12/12~12/18 [갤러리느티나무] 아카데미느티나무 미술학교 정물페인팅 <정물의 발견>
- 12/21~12/28 [갤러리느티나무] 캘리그래피 '술통' 정기 회원전

□ 회원모임 주요행사

- 03/22 회원모임 산사랑 <북한산 시산제>
- 07/03 회원모임 참좋다 <참좋다와 간사들이 함께하는 휴식>
- 07/05 회원모임 산사랑 <산사랑 800회, 군자산 산행>
- 07/12 마라톤 회원모임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
- 09/13 마라톤 회원모임 <시작장애인돕기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대회>
- 10/31 회원모임 참좋다 18번째 정기공연 <공포시대>
- 12/17 회원모임(준) 패누카 정기공연 <2015년을 보내며>



△ 패누카 정기공연 <2015년을 보내며> (2015.12.17.)

□ 세월호 관련 행사 외

- 04/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 촉구 참여연대 행진
- 04/12 故허세욱 회원 8주기 추모제 참가
- 04/11~19 <서촌길 노랑게 물들이기 캠페인>, 서촌지역 상점 67곳 동참
- 12/23 세월호를 기억하는 영화 <나쁜 나라> 단체관람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 촉구 참여연대 행진 (2015.04.18.)

시민교육

- 아카데미느티나무 총 56개 강좌 개설, 수강인원 991명

□ 강좌목록

시기	구분	강좌명	강의 횟수	수강 인원
겨울	민주주의	김만권의 정치철학-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2	6	26
	민주주의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6	47
	민주주의	시민연극 워크숍 <3색 소통 - 몸, 표현, 변혁>	3	14
	인문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2기	2	19
	생활문화	술술타로, 나의 무의식의 친구와 친해지기-저녁반	6	10
	생활문화	술술타로, 나의 무의식의 친구와 친해지기-오전반	6	7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21기	6	5
	생활문화	기획자와 함께하는 미술관 여행	1	12
봄	민주주의	휴먼라이브러리 - 대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1	33
	민주주의	특강 - 정치철학으로 본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	23
	민주주의	고나무 기자의 사실을 다루는 글쓰기	7	27
	민주주의	김만권의 정치철학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철학 <당대편>	7	33
	민주주의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2기	10	20
	민주주의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4기	2	23
	민주주의	느티나무 푸른시니어 아카데미 1기	9	10
	민주주의	시민연극워크숍 3기 <감정, 생존에서 존엄으로>	3	8
	민주주의	김만권의 독서클럽 -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2	4	15
	시민예술	느티나무 미술학교 1 <인체드로잉>	14	18
	시민예술	서울드로잉 9기	12	20
	시민예술	최경실의 <도시의노마드 춤워크숍> 3기	8	11
	인문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3기 - 꼴찌에게 갈채를	4	16
	인문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1	10	20
	인문	서구 근대소설로 읽는 근대의 실상(특강)	1	3
	인문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6	11
	굿모닝세미나	꿈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10	19
	굿모닝세미나	삶의 길목에서 만난 동화	8	12
	굿모닝세미나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 리추얼 워크숍	8	16
여름	민주주의	북유럽 복지국가를 말하다	2	42
	민주주의	김만권 독서클럽 - 새로운 빈곤	3	18
	민주주의	현경 토크 리추얼 2 - 사회적 영성과 시민운동	1	34
	민주주의	현경 토크 리추얼 3 - 세상을 바꾸는 시민예술의 힘	1	30
	민주주의	현경 토크 리추얼 1 - 자아와 사회의 만남	1	26
	인문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4기	2	15
	인문	서촌미술관답사	1	22

시 기	구분	강좌명	강의 횟수	수강 인원
가 을	시민예술	시민연극워크숍 4기	5	8
	굿모닝세미나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4	14
	굿모닝세미나	술술타로	6	11
	민주주의	김만권 독서클럽 [공화국의 위기] 읽기	3	17
	민주주의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기	7	18
	민주주의	저성장시대에 던지는 여섯가지 불편한 질문	6	19
	민주주의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8	10
	민주주의	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	6	8
	민주주의	공익로비학교 1기 - 국회를 흔들어라	6	10
	민주주의	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7	37
	민주주의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2	15
	민주주의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	1	8
	인문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4	17
	인문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6	22
	인문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10	23
	시민예술	도시의 노마드 춤 워크숍	8	8
	시민예술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 정물 페인팅	13	18
	시민예술	서울드로잉 10기	12	17
	시민예술	시민연극워크숍 5기 -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12	5
	굿모닝세미나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2	4	9
	굿모닝세미나	꿈투사 워크숍	10	20
	굿모닝세미나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6	12
			318	991



△가을학기 종강파티에 참석한 수강생과 강사들 (2015.12.10.)

감시와 정책제안

□ 활동 통계

구분	내용	활동량*
정책보고서 등	이슈리포트	20
	보고서/팩트북	4
	입법의견서	18
	정책 자료	14
	자료집/소책자	18
	의견서/공개 질의/서한	80
	계	154
토론회	토론회/좌담회/포럼/심포지엄/워크숍 등	51
입법청원/입법발의	입법청원	4
	의견청원	2
	입법발의(의원 공동발의)	5
	소계	11
소송	고소/고발	15
	행정소송	4
	민사소송	6
	위헌소송	4
	소계	29
행정처분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등	4
	행정심판	2
	공익신고	13
	소계	19
성명/논평	성명/논평	446
직접행동	집회/시위/촛불문화제 등	36
	1인시위	12
	캠페인·서명운동	60
	항의기자회견	208
	면담·방문 등 직접행동	21
	소계	337
기자회견	입장발표, 기구발족, 실태 보고 기자회견	78
기획행사	의인상 시상식/영화상영 등	28
미디어기획	언론공동기획(11)	135
	카드뉴스	28
	여론조사	3
	칼럼·기고	77
	팟캐스트(자체제작)	34
	보도자료	163
	정기간행물(참여사회, 복지동향, 시민과세계)	26
	소계	466
총계		1619

* 참여연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통계입니다. (시민참여/교육 제외)

□ 입법

청원/입법청원/공동발의(11)

02/11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
02/11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
02/23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04/08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07/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입법청원
08/20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08/20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09/02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09/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1/12	가맹사업자의 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11/17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송 · 공익신고

소송(29)

02/12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02/26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고발
03/03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03/12	국정원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03/25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및 혈세 탕진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 김형찬(MB 측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아들) 검찰 고발
03/30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 설립 취소에 대해 헌법소원

03/31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불법유통·부실보관 검찰고발
04/21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04/28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
05/06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05/13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고발
05/27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06/02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06/16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06/23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07/30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에 1차 고발
07/31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08/18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08/31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09/03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09/10	홈플러스 대표이사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10/06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부작위살인죄 고발
10/14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0/22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10/27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명예훼손 손배소송
10/29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11/12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11/24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12/30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행정심판(2)

- 06/23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09/03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감사청구/조사요청(4)

- 02/03 론스타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 05/19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청구
- 07/01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 청구
- 11/02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행위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공익신고(13)

- 02/08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 02/26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 04/02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 06/23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 06/18 통신 3사의 부당행위·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 07/01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 07/07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 07/29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 09/01 교육부에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요청
- 09/03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 10/06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 11/02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진정
- 12/29 방치되는 통신사 멤버십포인트 문제 공정위/미래부/방통위 신고

□ 신고/소송 성과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횡포와 불법행위 등 ‘갑질’ 에 과징금 부과

2012.07.19. 농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떠넘기고 이를 미달한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2015.03.06. 공정거래위원회 농심에 과징금 처분 결정

‘국민 미개 발언’ 트윗했다가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승소

2014.10.22. 검찰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전 서울시장후보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후보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대학생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 참여연대 공익변론

2014.12.24 1심 무죄판결

2015.03.26 2심 무죄 확정판결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2014.03.17 참여연대 ‘나라사랑교육’ 영상정보공개 청구

2014.10.27. ‘나라사랑교육’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15.07.31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6.01.21.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하라 판결(1심 승소).

□ 참여연대 활동 관련 소송현황

대한민국 vs. 광우병대책회의 등 손해배상소송 (2심 진행 중)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대책회의에 소속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대책회의에서 직책을 맡은 박원석, 안진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과>

- 2008년 7월 31일, 원고(대한민국)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 2013년 10월 31일, 원고 패소 1심 판결
- 2013년 11월 19일, 원고 항소
- 2016년 3월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참여연대 vs. 박성현/뉴데일리 손해배상소송(대법원 승소)

박성현이 뉴데일리 칼럼에서 "참여연대가 재벌기업을 협박하여 아름다운 재단에 천억 원을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제기함

<경과>

- 2012년 8월 16일, 원고(참여연대) 손해배상 소제기
- 2014년 3월 5일, 참여연대 일부승소
- 2014년 3월 20일, 원고, 피고 항소
- 2015년 8월 25일,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확정

□ 정책자료

보고서/팩트북(4)

03/16	박근혜 정부 2년 검찰보고서
06/15	팩트북1. <2009~2013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09/10	[참여연대 연례 활동보고서] 2014-2015
12/07	팩트북2.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슈리포트(20)

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저품 제거 방안
03/12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관련 10문 10답
04/14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06/01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06/11	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평가
06/17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06/18	「근로감독보고서 1: 최저임금법6조」
06/23	2005~2015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06/25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06/25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07/07	「근로감독보고서 2: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07/09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 #1·최저임금위원회
07/13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08/20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09/07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09/11	LH 공공택지 매각, 누구 위한 개혁인가?
10/05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11/16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 #2.규제개혁위원회
12/23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12/27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입법의견서(18)

02/23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02/23	<국군의해외파견활동참여에관한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02/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03/02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04/06	<세월호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04/21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06/08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06/10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공동)
06/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07/07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07/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09/0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09/15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10/2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01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01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1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책자료(14)

02/10	군 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06/29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07/02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서
07/20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 요구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09/07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09/10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09/16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09/23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10/14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0/16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10/21	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10/28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반대의견서
11/17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자료집/소책자(17)

01/23	2015 참여연대 신입회원 길라잡이
02/09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봄학기 포스터 리플렛

02/17	진실을 인양하라 - 세월호 설날 특별홍보물
03/05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03/09	참여연대 21차 정기총회(2015) 자료집
04/13	세월호 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캠페인 홍보물
04/22	12가지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가이드북
07/15	복지권리 안내수첩
08/05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가을학기 포스터 리플렛
08/08	해방·분단 70년 평화기행
09/15	선거제도 확 바뀌야 정치가 바뀝니다!
10/12	청년참여연대 창립 총회 자료집
10/21	서울ADEX2015 관람포인트
10/22	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정부
12/04	참여사회연구소를 소개합니다
12/21	2015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12/22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카드뉴스(28)

03/05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국회 최종 통과안)
03/10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03/13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상식
03/24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일까요?
03/26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04/01	만우절 특집, 최고의 거짓말을 찾아라!
04/06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04/13	세월호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04/15	급식은 교육입니다
04/20	경찰 차벽 왜 위헌 위법인가?
04/21	뽕뽕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
05/08	홍준표, 당신 차례입니까?
05/1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콕콕 집어서 알아보기
05/21	공익제보자 소식 #1.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05/26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05/28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06/02	나, '삼성생명법'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싶다
06/02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06/10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보까요?
06/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06/19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06/26	공익제보자 소식 #5. 부실시공 제보자 유영호
07/08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07/10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07/17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07/29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11/02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12/28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룰겁니까?

□ 공론화 활동

심포지엄(2)

- | | |
|-------|----------------------|
| 09/04 |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
| 12/04 |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토론회/좌담회(52)

- | | |
|-------|--|
| 01/27 |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
| 01/28 |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
| 03/30 |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 |
| 04/02 |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뀌야 하나? |
| 04/06 |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
| 04/13 |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 “국가책임의 자리에 피해자 모욕을 채운 세월호 참사 배보상의 문제점” |
| 04/17 |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 |
| 04/22 |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 긴급토론회 |
| 05/06 |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
| 05/21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
| 05/22 | 론스타 문제 토론회 |
| 05/26 |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 토론회 |
| 06/02 |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
| 06/04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토론회 |
| 06/04 | 무주택자의 날 맞이 세입자 권리찾기 |
| 06/08 |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확대를 위한 합동 토론회 |

06/0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조건
06/11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06/23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06/24	제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06/25	자원외교와 ODA 국회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06/30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07/09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07/16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07/21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07/23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08/19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08/20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08/27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 '8.25 합의'와 제안
08/27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09/09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09/15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9/18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09/21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10/07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6년 예산안
10/08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10/12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10/1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10/15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10/26	노동개혁과 정치

10/28	인지대 때문에 재판청구 포기?
11/06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11/11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11/16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
11/17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11/23	[참여사회포럼] 영미 진보좌파정치의 약진, 어떻게 볼 것인가?
11/25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11/30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12/02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12/09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12/18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12/23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사례발표회(5)

03/24	2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05/13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06/25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09/07	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10/2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언론공동기획(11/135)

01/01~12/22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4회, 경향신문
01/07~12/25 [시민정치시평] 49회, 프레시안
04/09~12/02 [아시아생각] 9회, 프레시안
04/10~04/30 [세월호 1년 진단 - 무엇이 바뀌었나], 8회, 경향신문
04/21~11/26 [2015, 이제는 평화] 15회, 프레시안
07/15~07/21 [3세 승계, 법 위의 삼성과 결별하라] 5회, 오마이뉴스
08/25~12/24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13회, TBS
11/30~12/31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회, 슬로우뉴스
07/23~12/29 [박동수의 주거칼럼] 9회, 오마이뉴스
11/12~11/23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5회, 오마이뉴스
11/17~11/26 [법인세 개편 연속기고] 3회, 한겨레

□ 간행물

단행본(1)

02/13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북콤마 |

정기간행물(26)

반년간 《시민과 세계》 26호~27호 |이매진, 책과 공간|

월간 《복지동향》 195호~206호 |나눔의 집|

월간 《참여사회》 2015년 1월호~12월호 |the DNC|

2016년 사업계획

2016년 7대 활동방향

중점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6년 7대 활동방향

방향 1.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일상적인 침해는 한국사회 절망과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있음.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의 회복, 권력오남용 전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실시되는 20대 총선은 집권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어야 계기가 되어야 함
- 이에 참여연대는 집권세력을 포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적격 후보가 공천되거나 당선되는 일을 막고 '심판'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을 돕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해 현명하고 책임있는 선택과 행동을 촉진하고자 함.
- 아울러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민생회복, 복지국가, 평화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정책들을 부각시키고 각 정당들이 수용하도록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전개해, 공약채택 또는 정책추진으로 이어져 한국사회가 '전환'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방향 2.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극심한 수준임. 더 나아가 권위적 통치 성향은 집회시위를 비롯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의사표현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
- 대통령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역시,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만큼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고, 국가권력기구들에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시민참여 및 민주적 통제 구조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임.

방향 3. 노동자, 중소기업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 노동시간 1위, 산재사망율 1위(OECD) 등의 지표에 잘 드러나듯 사회경제적 삶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양극화와 민생고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저출산, 민생고 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일 것임.
- 비정규직, 중소기업인, 청년,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참여연대의 부단한 실천과 노력은 2016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임.
- 노동이 존중받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지속·확대하고, 중소기업인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재벌·대기업 특혜 및 탐욕·독점 문제를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 확대와 이를 위한 조세·재정분야의 대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음. 또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특히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양방향 모두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당사자그룹·전문가그룹과 소통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나갈 예정임.

방향 4. 청년들과의 연대 활성화와 정책제안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하기

- ‘이생망’,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N포세대’로 상징되는 한국사회, 특히 청년세대의 양극화와 민생고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려고 함. 무엇보다도 청년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청년세대와 적극 소통·연대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함. 현재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청알못’(청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청년세대가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주거지원 등 현재 추진 또는 시행중인 청년문제 해결책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것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정치권이 협력해 청년실업부조, 청년교육비, 청년일자리, 청년주거안정, 청년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

방향 5.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하기

-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비, 전월세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부채가 1,200조로 늘어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에 국민경제의 위기 해소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과중한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할 상황임.
- 이에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과 서민들이 과중한 교육비, 주거비(전월세), 의료비, 통신비, 이자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가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제안과 채택 캠페인을 지속하고자 함
-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금융, 방송·통신, 영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분야와 시민권리 및 소비자 이슈 일반에 대한 대응을 확대해나가면서 더욱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운동, 친근한 이웃 같은 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임.

방향 6.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하기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직후 남측의 주한미군 사드(THAAD)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사드배치 뿐만 아니라 연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한일군사협력도 가시화될 예정이라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임.
-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더 활발히 진행하고자 함. 또한 중대 선거를 앞두고 현행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적 평화정책을 마련, 제안하는 활동을 준비하고자 함.
- 한편 대규모 방산비리나 사드(THAAD)배치, 탄저균 국내 반입 및 실험, 위안부 합의 등에서 드러난 국방외교 정책의 불투명성, 무책임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에 기밀주의로 일관하는 국방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의 공개와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방향 7.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하기

-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참여연대-시민(회원)간의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더 활성화될 때 시민의 주권이 살아 있는 참여민주사회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도 가능함.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원과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회원/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2015년에 결성한 '청년 참여연대'의 활동력을 제고하여, 시민참여, 특히 청년세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회원 2만명이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4개년 계획의 2차년도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회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확충하여 회원과 더 많이 만나는 참여연대로 발전할 것임.
- 또한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시민(회원)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시민과 참여연대, 시민과 시민운동이 더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임.

중점과제 1.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 사업배경

- 정부와 집권여당의 독선과 실정은 민생악화,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 등 사회 전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올해 총선을 통해 이러한 집권세력을 심판하고 집권연장 기획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인만큼 총선을 계기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와 시민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운영 기조와 정책변화를 촉구해야 함.
- 참여연대는 총선 대응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연대기구를 조직해 집권세력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잘못된 정책의 중단을 이끌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부각되도록 노력할 것임. 이를 위해 각 정당 공약 평가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과제 제시 등 각종 정보·정책 생산과 확산에 집중함.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정책기획실 주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 및 활동

-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2016.2.17. 발족) 및 운영
- [온라인 플랫폼 운영] 후보자 정보, 집권여당 공약이행 평가, 각 당 공약평가 등의 각종 정보를 집적 및 유통
- [명단 발표] 엄정한 평가와 기준에 따라 공천배제 및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자 명단 발표 등 낙천낙선운동 등 활동
- [정책제안과 약속운동] 총선에서 쟁점이 되어야 할 정책과제 제시 및 약속받기 운동
- [공정선거 감시운동]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 [투표참여운동] 유권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세대 등의 투표참여운동 진행

2. 단독/연대 활동 병행

- 후보자의 활동이력, 의정활동,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입장 등 정보 조사
- 집권여당의 공약이행 평가
-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선정 및 공론화
-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관련 정보와 자료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유하기 □

중점과제 2. ‘열려라 국회’ 사이트와 국회 평가 활동 활성화

• 사업배경

- 의정감시센터가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국회 모니터링 사이트 ‘열려라 국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국회·의원 모니터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음.
- 참여연대 활동은 대 국회 로비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시와 평가는 보다 정성적 평가로 강화되어야 하고, 의정감시센터가 평가의 기준, 방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19대 국회 평가 사업

-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에 이어 4년 국회 활동을 평가해보는 자료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후반기 국회 2년 간 주요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 분야(민주/인권/복지/노동/민생경제/평화 등) 반개혁 법안발의 의원을 조사해 총선 후보자 정보 자료 등으로도 활용할 예정.
- 그 외에도 세월호 시행령(2015.05.11. 공포·시행) 제정 1년에 즈음하여 ▲(가칭)주요 분야 법률 위반 위임입법 보고서를 발간해 각각의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월권과 법률을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 회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20대 국회 모니터 사업 기획

- 새 버전 오픈에 맞춰 사이트 홍보를 위한 이벤트
- 다양한 국회 모니터 콘텐츠 생산 및 홍보 : 20대 국회의원 알아보기, 화제의 법안, 주목할 표결, 각종 국회 활동 및 의원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
- 참여연대 개혁 입법과제의 추진과 이행, 걸림돌·디딤돌 의원 선정 등 평가 기준과 방식을 각 활동기구와 협의하여 모색 □

중점과제 3.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사업배경

- 집회는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역시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집회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이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이견을 표출할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특히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기왕에 해오던 현안 대응과 다른 단체들과의 공조에 더해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일정 정도 성과를 내하고자 함.

• 실행부서

- 공익법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장소제한 등에 의한 집회시위의 자유 및 권리 침해 사건의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 공권력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모니터링과 대응
- 장소제한을 통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 사례 수집 및 발표, 공익소송

2. 해외 모범 사례 및 판례 등 연구, 발간을 통한 학술 및 정책사업

- 이슈리포트 등 발간 및 정책토론회 개최

3. 20대 국회 입법화 활동

- 20대 총선에서 장소제한 집시법 조항 개정을 약속하는 정책 제안
- 20대 국회에 개정안 제출 및 입법로비 진행 □

중점과제 4.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 사업배경

- 양극화, 민생고의 배경에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대기업의 끊임없는 중소기업 영역 침입 문제가 있음. 그에 따라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재벌의 독점과 탐욕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인의 생존권과 활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생존권 보호 및 활력

-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운동과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확산 저지 운동
-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기술탈취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운동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 및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정위 기능 모니터링과 공정거래법 개선 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보호 정책 채택 촉구와 불공정거래 감독규제 역할 수행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활동

2.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운동 전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연대 확대·강화
-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규제 또는 활용 촉진

-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및 규제완화 저지,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심화 저지 활동,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의 중소기업·상공인과의 상생형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촉진 활동 □

중점과제 5.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사업배경

- 정부·여당은 전 산업, 전 연령으로의 비정규직 확대를 야기할 노동법개정안을 관철 시키고자 하는 국면에서 사측 일방의 해고가 가능한 행정지침 도입됨. 불·편법적 해고 이후, 비정규직으로의 재고용이 보편화되었고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음
-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을 단순히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는 활동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 등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현재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

• 실행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제도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개정안 제시
- 근로기준법, 노조법 준수 관련 근로감독 모니터링과 관련 노동행정 개선 대안 제시
-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공론화와 고용노동부의 ILO 대응 모니터링
- 20대 국회 개원 시 제출할 노동관계법 재정비 및 공동입법 발의 추진

2. 정부의 '더 쉬운 해고' 지침 시행 모니터링과 대응

- '더 쉬운 해고' 지침과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행정 모니터링
-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직장인 고용불안 공론화를 통한 해법 모색
- 노동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지속·강화 □

중점과제 6.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 개선

• 사업배경

- 복지 확대가 시대적 요구이나 정부와 여당은 재정문제를 핑계로 복지 축소 또는 선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조차 가로막고 있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임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사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운동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화 및 가입자(시민) 몫 강화를 위한 입법운동
-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입법운동

2. 복지와 재정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복지재정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 공론화
- 시민복지 기준 및 이를 위한 재정대안 제시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 재정 역할 분담에 대한 대안 제시

- 누리과정 파행, 지역복지 정비 등 중앙정부의 복지침해에 대한 대응
- 지역복지 축소 시도에 대한 백서 발간 및 지역복지 침해를 막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입법 운동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관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한 대안 제시

4. 시민에 의한 재정감시와 국민소송법 제정 운동

- 국가재정 낭비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고발 운동 지속
- 위법한 재정집행사례를 시민들이 감시, 견제하는 국민소송법 제정 운동 ☐

중점과제 7.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과 대책 입법 활동

• 사업배경

-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N포세대로 대표되는 최근 한국 사회 청년들의 절망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노동개악 정책을 내세워 청년들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악화 등 부적절한 청년대책을 내세워서 청년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있음. 심지어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년대책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폄훼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 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주거지원, 청년교육비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청년대책을 옹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정치권이 협력해 청년실업부조, 청년교육비, 청년일자리, 청년주거안정, 청년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임.

• 실행부서

- 청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금융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참여연대의 ‘청년대책 종합요구안’ 발표와 입법 또는 정책채택 운동

- 일자리·교육·주거·부채 문제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법을 담은 ‘청년대책 종합요구안’ 마련과 공론화
- 청년실업부조(미취업 청년들에게 고용지원 수당 지급), 청년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청년대책 입법 또는 정책채택 운동
- 청년들을 위한다는 미명과 반대로 청년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운동과 청년노동권 보장 촉구

2. 지자체 차원의 청년대책 활성화

-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주거지원, 청년교육비 지원, 청년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

-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청년대책 모니터링과 내용적 보완 촉구 활동
- 지자체 차원의 청년문제 해결·완화와 청년복지 증진 정책을 방해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 □

중점과제 8.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 사업배경

-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발표)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지표로 삼고 이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이후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170%(2015년 3분기 말 추정치)로 치솟았음. 총량 그 자체도 문제지만, 고용불안정, 저임금, 경기침체 등으로 향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우려되는 수준임
- 이에 가계부채의 특성(담보, 신용)과 채무자의 유형(연령, 소득)에 따른 현황 점검과 가계부채 감축 방안과 향후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

- 가계부채의 특성과 채무자의 유형에 대한 현황 점검과 가계부채 악화 상황에 대한 금융관료감시보고서 등 주제별 이슈리포트 발간
- 가계부채경감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사항 마련(서민금융6법 개정 등)
-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사항 마련
- 가계부채 관련 포럼 및 토론회 개최

2.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반대활동
- 현행 채무회생기관 모니터링 및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재판 모니터링과 신속한 면책·회생 촉구 활동
- 지역 연계형 정책금융 지원 등 지자체 중심 금융복지시스템 제도화 촉구 활동 □

중점과제 9.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업배경

- 매해 물가·전세대란·가계부채·고용불안 문제까지 중첩되면서 모든 민생·복지 관련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전월세대란 및 세입자 고충이 심화되는 상황이나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대형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민간임대를 활성화시키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함
- 따라서 정부정책, 입법과제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되게 하여 서민주거비 부담을 해소시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 20대 총선 주거권 및 서민주거 대응 기구(‘주거권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 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촉구 및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촉구 활동
- 문제많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뉴스테이 실수요 계층의 소득 수준에 적합한 임대료 인하, 분양전환가 규제 등 공적 규제 강화 촉구 활동
- 가계부채 해소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구제 대책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대응과 하우스푸어 회생절차법 등 마련 □

중점과제 10.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 사업배경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미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공식화하고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결정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3월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이 같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한미간의 핵억지력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은 사드 배치 논란을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큼.
- 동북아의 신냉전적 대립구도를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초래하는 군사적 조치와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안위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시급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저지

- 사드 배치 문제 공론화 활동 : 사드의 위험성에 대한 카드뉴스 시리즈 발행, 관련 전문가를 통한 사드배치 위험성 알리는 정보 제공
-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총선 후보자에 대한 배치 반대 약속받기 캠페인
-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사드 배치 반대 애드보커시 : 일본의 X밴드(사드) 레이더 배치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 미국의 사드반대 평화연구자의 글 기고, 미국 대사관 면담, 외신 기자회견 등

2.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
- 한미일 연합해군에 참여중인 청해부대의 활동 모니터링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국내외 공론화

-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 후속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평화회의 등을 조직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시급성, 필요성을 국내외 공론화
- 민간 6+1자 회담(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 지속
- 국내외 반핵평화 진영과의 파트너십 형성 및 강화 : 20대 국회 비핵화 지지 의원모임 구성, 한반도 핵무장 반대 국회 결의안 추진, 일본 반핵청년 방한 프로그램 등 진행 □

중점과제 11.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4)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20주년을 맞아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을 앞당길 것을 결의하고, 2018년까지 회원 2만 명을 통해 예산기준 100% 회비에 의한 자립으로 확대하는 중기 목표를 세웠음.
- 올해는 2만 회원 달성을 위한 4개년 계획의 2차 연도임. 현재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보류 회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언론 환경 악화 및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참여연대 지지층을 넓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시민참여팀 주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

- 회원확대 종합계획 마련을 통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 회비증액, 지인추천, 신규가입회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
-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회원확대 매뉴얼' 마련 및 실천독려

2. 미디어 활용의 개선 (미디어홍보팀과 공동주관)

- 참여연대 활동성과를 여러 형태(카드뉴스, 웹홍보물, 교환광고 등)의 홍보물로 만들어 다양한 경로로 확산, 회원확대의 기여도 높임(회원가입 문구의 지속적 노출).
- 인터넷, 모바일(카카오톡, 팟캐스트 등)을 이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3. 대면접촉 강화

- 지인을 회원으로 추천한 회원에 대한 관리·감사 서비스 진행
- 아카데미, 카페통인 등 시민참여 공간(행사 포함)을 통한 회원확대 □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국민의 지지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개혁
-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니터 강화
- 정치개혁과 의정감시 활동에 시민참여 및 행동 프로그램 강화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국회 평가 사업 강화1> 실행

2. 20대 총선 관련 활동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방안에 대한 각 정당 의견 조사, 공약 제안
- 유관 단체들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사전투표소 확대 등 투표권 보장 촉구 활동 공동 기획
- 현역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 자료 수집/정리/유통
- 청년, 여성, 노동 등 주요 부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관련 분야 과제 질의, 답변 공개

3.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 부각 및 공감대 확산

- 2016년 20대 총선 '사표(死票) 보고서' 발간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춘 정치개혁방안 입법청원, 의원/보좌진 간담회 등 국회 내 협력관계망 형성
-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지역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장('정치사랑방', 강연회) 마련
- 정치개혁 의제 홍보를 위한 정치개혁시민연대 블로그 개선(electionreform.tistory.com)

1) 총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국회 평가는 정량에서 정성 평가로 나아가야 하고, 의정감시센터가 참여연대 각 활동기구의 개혁 입법과제 추진과 이행에 대한 평가들을 제공하고, 각 부서의 협업으로 국회 성적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성 평가의 관건은 해당 분야를 모니터해온 각 활동기구와의 협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활동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함.

4. 열린 국회를 위한 입법/정책 제안

- 20대 국회 개원 직후 담장 없는 국회, 청원권 실질화/활성화²⁾, 회의방청 허용, 투명한 국회 재정 등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국회개혁 의제 입법청원, 관련 상임위원들과 간담회 등 ☐

2) 총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 개혁 과제로 청원권 실질화, 활성화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요구해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하자는 제안에 대해, <열린 국회를 위한 입법/정책 제안> 사업에 반영하기로 함.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사법감시 활동의 시민참여 수단 개발
- 법원, 검찰 인사 개혁 방안 공론화
- 사법부 구성과 감시의 시민참여 강화

• 2016년 주요 과제

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의제화

- 입장 문서³⁾와 홍보 콘텐츠 제작 : 온/오프라인용
- 회원, 지역/유관단체, 법사위원, 언론인, 대학생 등 설명회, 토론회 등 공론장 기획

2. 권한오남용 검사 감시, 검찰권 행사 견제 지속

- <박근혜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간
- 검찰 수사사건 모니터링 일상화, 체계화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제한 등 검찰개혁 방안 입법 촉구 활동 지속

3. 판결 감시 활동 활성화/대중화 지속

- 시민참여 <판결문 읽기모임> 지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판결문 함께 읽기 행사 개최
- 부정기적인 판결비평 사업 정례화, 판결문/판사정보 등 정보 제공 확대

4. 고위 법관 인사 개혁 캠페인

-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시민 기준 만들기 토론 행사 기획
-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추천위 개선 등 인선 과정 개선 방안 제도화 캠페인 시작

3)총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지방검사장이 인사, 명령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사동일체 원칙을 넘어서 할 수 있을지, 지방정치 영역에서 확실한 견제 체계 없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등의 의견에 대해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함.

5. 20대 국회 대응 사업

- 사법개혁 입법/정책과제 발굴, 입법청원, 의원/보좌진 간담회 등 네트워크 형성 등
- 사법개혁 입법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 제도 개선을 의제화하기 위한 보고서 기획 □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꼼꼼히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권력감시
-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구조개혁
- 권력유착과 특혜,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 줄이기

• 2016년 주요 과제

1. 부패사건에 대한 기록⁴⁾

- 관료감시보고서 : 정책실패로 경질되거나, 부패혐의로 사임한 관료들이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공개
- 부적격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선사례 기록 :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논란이 된 부적격 인사 기록

2. 정부 위원회 감시활동⁵⁾

- 각종 위원회의 폐쇄성, 비민주성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위원회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 발행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준,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구성 등을 조사해 위원회 투명성·책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함(평가 지표 마련해 적용)
- 위원회 현황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실태보고서 발행

3. 퇴직 후 취업제한 모니터링

4) 총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2015년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 행정감시센터가 담당하려다 중단되었는데, 지배구조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라도 집중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문제 인사에 대한 기록사업을 진행하면서 낙하산/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는 것을 고려하기로 함.

5) 총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뿐만 아니라 위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사업에 반영하기로 함.

- 모피아(금융 출신 인사), 군피아(군 출신 인사) 등 분야별로 특화하여 모니터

4.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남아 있는 과제 및 제도 개선 방향 모색⁶⁾
- 현행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

6)충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력화 시도가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 과정 등에 대해 현재 모니터 중인만큼 계속 집중해서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함.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늘이기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2016년 주요 과제

1.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주간에 (공익제보 관련) 상영회, 길거리 전시회, 의인기금 캠페인 등 부대행사 적극적으로 진행해 공익제보(자) 인식 제고 및 의인상 홍보⁷⁾

2.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공익제보자에게 생계비 지원 및 상담치료, 법률상담 지원
-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촉구 운동 병행

3.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유지 및 다양화

- 불이익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시민참여형 캠페인 활성화(시민탄원서, 불이익중단 시민요구서 등)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심리치유(상담) 또는 인문교양 강좌 지원사업 진행

7) 종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공익제보(자) 인식 향상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공직진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강연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센터업무를 제보자 지원에 집중하는 만큼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원활동에서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향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봄. 교육/강연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기, 장소, 강연자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므로 추후 논의해보기로 함.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과제 점검

- 제도개선 과제 점검⁸⁾ 및 개선 요구(대리신고 허용,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군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정부 예산낭비, 권한남용 등에 대한 부패신고 인정 등)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공익제보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⁹⁾ □

8) 총준위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공익제보자가 경제적으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전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제보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호제도 도입 때부터 요구해왔던 개선사항이었고, 추후 개선과제 정리할 때 고려하기로 함

9) 안전검토 소위에서 제시된 국회 사무처에 각 의원실의 제보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부서설치와 같은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보기로 함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공익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를 개선함
-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옹호 및 확장¹⁰⁾
- 표현의 자유 외 공익소송 대상 사건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힘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실행

2.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 침해 대응¹¹⁾

- 모욕죄,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 : 모욕죄의 문제점 드러내는 사례 수집 및 이슈리포트 발행, 형법개정안 제출
-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이슈리포트 발행
- 방송통신심의위의 방송 및 통신심의 과정에서 권력비판 제재에 대한 문제제기, 공익 소송 등

3. 통신비밀의 자유 보장 활동

- 수사기관 등의 불법 감청과 같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적극 대응
- 가입자정보무단제공 제도 개선 관련 입법운동 등

4.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활동

- 사례축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 포럼 3~4회 진행 □

10)총준위 안전검토 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정치 및 경제분야에서 결사의 자유(노조, 자영업자 조직 등) 확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치결사의 자유는 의정감시센터 등에서 그동안 지속 해온 의제이며, 경제분야에서의 결사의 자유는 일부는 노동사회위원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 더 확장하거나 집중할 점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하기로 함

11)총준위 안전검토 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프리덤하우스 지수 하락)에 대한 외국 기관과 언론의 비판적 언급을 한국사회에 적절히 소개해보자는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하기로 함

경제금융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금융 거시건전성 요인(가계부채, 감독체계, 금산분리 등)에 대한 개입 확대
- 감독당국(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에 대한 권력감시의 기틀 마련
-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실행

2. 재벌 지배구조,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재벌 지배구조,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마련과 20대 국회 대응
- 독점·담합 등으로 인한 재벌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 방안 모색

3. 금융권력 감시 및 금융정책 모니터링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모니터링과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 저지 활동
- 핀테크, 개인정보 남용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제시
-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고발건의 처리과정과 결과 모니터링과 대응
- 론스타 관련 정부대응 감시와 비판

4. 기업구조조정

- 기촉법, 원샷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 점검과 20대 국회 대응
- 조선·해운·중공업계 구조조정 관련 관치 금융 견제
- 금융기관 채권자 중심의 회생제도((가칭) Creditor's Track) 추진에 대한 대응 모색

5.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 경제민주화 운동을 위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사회적 연대 확대와 강화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20대국회 입법과제 제시 및 대응 □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감시 기틀 마련
-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실행

2.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보고서
- 근로감독 강화와 노동관계법 준수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3.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실업급여 확대·강화와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전개
- 두루누리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사회보험지원정책 개선안 마련

4. 최저임금

-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캠페인 전개

5. 공공부문 비정규직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생활임금」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평가
-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실태점검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노동 차별·편파 용어 사용실태조사 및 개선 촉구 캠페인

6. 총선과 국회 대응

- 노동개약 저지 및 노동정책 당론화 추진 위한 각 정당의 노동/일자리 공약 집중 분석
- 20대 국회 개원 시 제출할 노동관계법 재정비 및 공동입법 발의 추진

7. 현안 대응 및 연대 사업

- 노동개약 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지속·강화 □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활동
- 상가임대차 보호 제도 개선
-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활동
- 생활밀착형 시민·소비자·청년 권리 찾기 캠페인
-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민생침해 이슈 대응
- 총선에서 민생 분야 정책 약속 운동 진행 및 20대 국회 민생입법 마련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실행

2. 상가임대차 보호 제도 개선

-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갱신기간 보장, 퇴거보상제 도입,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 적용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켄트리피케이션 피해 관련 제도개선안 연구

3.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의 등록금 인하 운동 성과를 담은 백서 제작
- 청년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문제 등 제도개선안 연구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
- 수원대·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 대응(연대)
- 정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 문제 대응(연대)

4. 이동통신비 인하

-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 촉구 활동
-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활동

5. 중소기업 살리기

- 전국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에 필요한 입법, 입점 저지 활동(연대)
- 중소기업인 고유영역·업종 보호 활동

6. 민생침해 이슈 대응

- 주거환경·교육환경 훼손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폐장 촉구 활동(연대)
- 친환경 무상급식·안전급식 실현 활동(연대)

7.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 작지만 소중한 권리(일반 소소권, 청년 소소권) 언론과 공동 기획(2014~2016년)
- 영화관 업계 불공정행위 개선 및 관련 입법 운동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 운동
-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판매 문제 대응 □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모두를 위한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 공적연금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정부, 국회 등 보건복지정책/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의 개편 및 복지운동의 대중화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실행

2. 복지 문제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활동

- 복지현안 분석, 복지현장 인터뷰, 지역복지 소식 등 복지컨텐츠를 모으는 복지동향 매달 발간
- 오마이뉴스, 베이비뉴스 등 언론사와 복지, 보육 문제에 대한 정기 칼럼 진행
- 복지와 세금 문제에 관한 SNS페이지를 개설하고 세금정보, 복지컨텐츠 등을 확산함
- 복지팟캐스트 등 복지이슈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운동

2.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대안 제시

-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확대 대안 제시
- 유보통합, 노인장기요양 등 돌봄 현안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 제시

3. 보건의료정책 감시활동

-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 임상시험 활성화,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등 의료정책 감시 및 비판 활동

4. 공적연금 강화 활동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 활동 및 시민교육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인프라 투자 공론화
- 공적연금 지역순회 시민교육

5. 기초생활보장제도 감시활동

-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6. 복지를 위한 예산 운동

- 보건복지 분야 예산분석보고서 등 복지를 위한 예산감시 활동

7. UN 사회권 관련 대응

-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 분석 및 평가
- 사회권 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목록(List of Issues) 선정 ☐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세재정체계 재정립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국민소송법 입법화 및 예·결산 감시운동
-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세재정 운동의 연구 및 확대

• 2016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실행
2. 시민이 참여하는 조세재정 운동 확대
 - 소득, 세금, 정부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금정보 사이트 운영(“소세지”) 및 개선
3.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활동
 -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활동
 - 복지를 위한 증세 운동
4. 예산감시 활동
 - 예산감시 네트워크 등 예산감시 활동 □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흐름.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평화운동 진영의 대응 지속 및 정책대안 제시
- 한미일 군사협력, 위안부 합의, 안보교육 등 국방, 외교정책의 기밀주의와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피해 심각하므로 국방·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 강화
- 복지, 민생, 참여민주주의 분야 활동과 조화되도록 한반도 미래 구상 차원의 정책생산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실행

2. 국방·외교 분야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시

- 국방비리 모니터링 및 무기도입·수출 과정 제도개선안 마련 : 통영함, 해상작전헬기 등 주요 사건 모니터링 통해 문제점 정리 및 제도개선안 마련, 무기도입사업 중심으로 국방예산 감축 촉구 활동
- 세계군축행동의날(GDAMS) 캠페인 : 한국 군사비 현황과 국방예산 지출의 주요 문제점을 짚어주는 온라인 캠페인 진행
- 탄저균 등 대량살상무기 반입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 용산 미군기지 반입 문제를 바탕으로 지자체 제도 마련 촉구 활동
-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위한 연대운동 : 외교부 합의과정 공개 촉구, 정의와 기억재단 모금, 관련 국제연대 활동 전개

3. 제주해군기지 저지운동 전환

- 제주해군기지 이용 감시 :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반대운동 전환의 하나로 기지이용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핵잠수함, 핵항모 반입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지자체 비핵조례 제정운동 제안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및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활동 지속

: 팩트북 발간, 강정후원주점, 생명평화대행진 등

4. 평화국가만들기 정책 개발

- 평화정책 패키지 마련 : 정책 패키지 및 20대 입법과제 발표, 정당과의 정책 간담회 및 파트너쉽 형성

5. 평화운동 시민주체 형성

- 참여연대 국제평화협력기금 “지혜기금” 운영
-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2학기 프로그램 기획

6. 기타

- 평화칼럼 지속
- 팟캐스트 평화국제코너 진행 ☐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력 강화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시민감시 능력과 메커니즘의 강화

• 2016년 주요 과제

1.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관심 확대 : 이야기마당, 아시아생각 칼럼 등 진행. 이야기마당의 경우 국내 이주민 커뮤니티와의 연계 시도
- 아시아 민주화운동 연대 : SDMA 워크숍 개최, 필리핀 선거감시단 구성,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현안 대응

2.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모니터 안정화

- ODA 중기정책 이행 모니터링 : OECD 동료평가(Peer Review) 대응, 2차 ODA 기본계획 이행, 국제개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모니터링
- ODA 악용사례 감시 : 원전 수출 활용된 사례 분석, 치안한류 ODA 사례 분석, 원조의 군사화 관련 지역재건팀(PRT) 사례 분석
- ODA 효과성 감시 : 새마을 ODA 정책 예산 모니터링, 필리핀 할라우담 유상원조 사업 모니터링
- ODA 교육 모니터링 : 각 대학 내 국제개발협력 수업 평가 □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역량 강화
-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모색

• 2016년 주요과제

1. 4개 시즌별 강좌 진행

- 겨울, 봄, 여름, 가을학기 강좌의 안정적 진행

2.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부 역량 강화

- 민주주의학교 활동가교육(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 연간계획 수립 등 체계화
- 민주주의학교를 비롯해 새로운 내용과 방식의 교육 개발, 강사 발굴
- 변화하는 시민교육 사례와 연구에 대한 조사, 학습
- 시민교육 철학, 목표, 배움의 경험 공유를 위한 시민교육 학습모임 진행

3.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삶과 삶, 행동과 놀이, 만남이 함께하는 배움의 문화 형성
-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확대
- 강사진의 교육발전을 위한 대화와 배움의 기회 만들기
- 독서서클, 월례특강, 심화강좌, 후속모임, 교육진행팀, 느티나무지기 등 다양하고 유
연한 참여와 연결 확산

4.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모색

- 교육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인홍보 동력 강화
- SNS(페이스북), 구글애드센스 등을 활용한 시대 맞춤 홍보 시도

- 팟캐스트 시민교육의 가능성 실험
- 효과적 홍보와 활발한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연구소 운영체계 안정화
- 연구사업 및 출판 등 기본·일상 사업 내실화

• 2016년 주요 과제

1. 연구소 운영 체계 안정화

- 운영위원회 활동력 제고, 편집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강화, 자문위원회 관리
- 신진연구자 충원 및 연구분과위원회 신설을 위한 다각적 노력 및 새로운 접근

2. 연구소 20주년 기념사업 진행

- 11월초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학술 심포지엄과 연계하여 친목행사 실시 및 연구기금 모금

3. 연구사업 진행

- 연구사업 예산 및 연구기금을 활용한 연구사업 모델(연구진 구성, 연구비 지급 및 사용 지침 등) 마련 및 관리
- 연구사업으로 시민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 관련 지수/지표 개발(‘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시민참여지수’ 등) 진행

4. 출판사업 내실화

- 《시민과 세계》 안정적 발행 및 학술등재후보지 추진 지속(2년차)
-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단행본 발행(상반기)

5. 한국사회 주요 담론과 정책 관련 대응

- <참여사회포럼> 안정적 운영 지속. 주요 정책과 담론에 대한 내부 토론 활성화
- ‘시민정치시평’ 안정적 발간 지속. 필진 강화와 기획력 제고 □

청년참여연대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총선/대선 대응활동 진행
-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도입
- 청년참여연대 회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 2016년 주요 과제

1.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위해 비용을 낮추는 활동 (경제, 대학분과)

- 비용은 줄이고 청년수당/배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활동
- 입학금, 졸업유예제 등 학내 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고서 발간 및 후속 대응

2.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 개악에 맞서는 현안대응 활동 (경제, 대학분과)

-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는 현안대응 및 채용비리 관련 후속행동
- 정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감시·대응 활동

3. 청년을 넘어 다양한 세대·소수자들과의 연대 활동(정치, 평화다양성, 성평등분과)

- 선거연령 만18세 확대 등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하는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응 및 평화담론 확산
- 여성혐오 문화 근절 캠페인, 젠더감수성 확장을 위한 활동(감성공동체모임 등)

4.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총선 대응 활동(총선대응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실업부조 강화 등 청년종합대책 마련
- 총선청년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공천반대·투표독려 등 공동행동 진행

5. 청년참여연대 회원확대 및 조직 운영의 안정화(사무국, 교육위원회)

- 청년참여연대 회원 확대 및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마련
- 분과/TF 구성원 모집, 자문·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연 2회), 불온대장정 진행 □

국제협력사업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유엔 등 국제협력메커니즘을 통한 국내외 인권이슈 공론화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2016년 주요 과제

1. 국제 애드보커시 통한 국내 인권개선 기여

-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 지속가능한발전계획(SDGs) 국내 이행 대응
- 3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
- 국내 인권 현황 대응 국제연대 사업

2. 해외 파트너 단체 안정적 관리

-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해외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기록 및 네트워크 관리 □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공동체성 강화
-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유도
-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2016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4) 실행

2. 회원들과 소통 및 만남 확대

- 총회, 지역회원만남의 날, 회원월례모임(“신입회원 만남의 날”과 격월로 진행) 등 정기 회원행사의 안정적 진행
- 지역과 주제가 결합된 지역회원모임 시도, 기존 회원모임과의 결합 강화

3. 시민의 리더십 강화

- 자원활동가의 역할(주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도
- 월별 회원 액션 캠페인 진행(미디어홍보팀과 공동 진행)

4.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확대(방중 자원활동 프로그램 안착화 등)
- 청소년 탐방프로그램 개선(탐방안내지 마련 등)

5. 안정적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진행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신규 업무 진행 □

정책기획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차원의 중점 연대과제 수행 및 총선/대선 대응 활동
- 참여연대 활동 성과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참여연대 중장기 의제 장기 이행계획 마련

• 2016년 주요 과제

1. 총선 및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참여연대 중점 연대과제 수행

- 총선시기 유권자운동/연대기구 정책 활동 지원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모니터 및 416연대 활동 지원

2. 참여연대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평가·연구 활동

- 2016년 1월 사무처 집중논의/교육 진행 및 평가
- 활동 성과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대언론 활동, 활동방식 개선 등) 연구
- 입법, 소송 활동 종합 및 평가 진행

3. 참여연대 상근자, 회원간 소통 강화

- 전체상근자회의 강화 및 소통프로그램 시범 운영
- 500인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3회) 및 개선방안 마련

4. 참여연대 중장기 의제 이행 계획 마련 및 대선 대응 기획

- 정책위원회 활동 지원 및 20주년 중장기의제 및 혁신과제 이행 계획 마련
- 2017년 대선 대비 참여연대 종합정책 제안 사업 기획 및 자료조사 진행

5. 정책기본사업의 안정적 진행

- 정책기본문서 정기적 보완 및 관리
- 탄력근무제 등 혁신방안 시범실시, 평가, 제도화
- 발간, 입법, 소송 자료실 정기적 업데이트와 관리
- 총회자료집(3월) 및 정기활동보고서(9월) 발간 □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알기쉬운 참여연대 : 단체/사업/활동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
- 유통하는 참여연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넓게 콘텐츠 유통
-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 뉴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시민참여, 소통을 지향
-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 2016년 주요과제

1. 시민에게 친근하고 알기쉽게 참여연대 이미지 홍보

- 단체PR : 참여연대 대표 메시지의 통합 전달을 위한 기틀 마련, 온오프라인(팟캐스트, 교환광고 등) 광고
- 시민단체의 상생을 위한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캠페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0여 개 단체가 함께 기획 사업으로 진행.
- 사용자 친화적으로 웹사이트 개편 : [열려라국회], [아카데미느티나무]
- 2층 역사의 벽 업데이트
- 미디어활용으로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시민참여팀과 공동주관)
: 중점과제11.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의 일환

2. 집중사업 알리기

- 사업이슈 홍보/모금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모금함(희망해/해피빈/스룩) 활용
- 월별 집중사업을 선정하여 웹포스팅, 상집위원/운영위원/전체간사에게 공유
- 상근자에게 홍보 관련 정보제공 및 매뉴얼 교육 강화 : 디자인제작프로그램 교육, SNS이미지 가이드 제작, 미디어 활용 방법 공유, 웹포스팅 매뉴얼 업데이트

3.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고 소통하기

- ‘SNS 팔로워 10만 만들기’ 대상별/채널별 콘텐츠 관리 전략 : 소셜미디어의 통합 관리(페이스북/카카오톡스토리채널/트위터/인스타그램)를 통해 채널에 맞는 컨셉으로

운영. 카카오톡엘로아이디를 통한 회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

- 월간 참여사회 : 전국 도서관(지자체/교육청 운영) 배포 캠페인
- 팟캐스트 '참팻' :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민사회 뉴미디어 채널로 자리매김
- 참여연대 제작물에 대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방침 마련

4.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 홍보/뉴미디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 홍보/마케팅/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문단(기획위원/실행위원) 모임 추진 □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6-2017)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참여연대 전현직 네트워크 강화
-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회원 데이터베이스 정비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2016년 주요 과제

1.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참여연대 공동체 TF 구성 및 운영
- 의사결정 집행 구조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 운영위원회 활성화

- 운영위원회 활성화 TF를 통한 기획과 진행
- 회원모임과의 교류 프로그램 진행

3. 참여연대 전현직 네트워크 강화

- 전현직 운영위원들과의 워크숍
- 전현직 간사 정기 친목행사 개최 등

4.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연간 상근자 교육 기획 및 안정적 진행
- 참여연대 활동을 축적하기 위한 교안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5. 회원 정보 관리

- 회원 정보 관리의 개선사항 점검

6. 공간을 통한 문화사업 확대

- 카페통인의 안정적 운영
- 카페통인, 갤러리느티나무 등을 활용한 '시민의 놀이터' 사업 확대 ☐

2015년 결산안 및 2016년 예산안

회계감사보고

2015년 결산안

2016년 예산안

살림살이

2015년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채이배 감사 (회계사)
- 회계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제22기)

□ 총평

- 2015년(제22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전기(제21기) 대비 흑자 전환하여 당기순이익 28백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 증가와 국제평화협력기금(100백만 원, 부정기후원금수입) 등으로 수입액(매출액)이 137백만 원(6.18%) 증가하였고, 전기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물 리모델링 수선비, 카페 관련 소모품비 등이 당기는 없으므로 총 133백만 원의 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 손익계산서 상 퇴직급여는 130백만 원이나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13백만 원이며, 97백만 원은 대차대조표 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된 것 입니다.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39백만 원과 기타의대손상각비 23백만 원은 현금유출이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현금성 지출항목을 고려할 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은 5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전기 대비 자산은 29백만 원(0.65%) 감소하였고, 부채는 57백만 원(5.58%)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좌자산은 운영비 등 지출로 예적금 81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제평화협력기금 100백만원 등 특별기금 증가 등으로 39백만 원(5.33%)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투자자산으로 표시한 참여사회연구소 대여금 30백만 원은 참여사회연구소 청산으로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대손처리하여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외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자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부채는 장기차입금 150백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 등 정상적인 변화 외에 특이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 특이사항

- 특이사항으로 통인카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통인카페를 개업하였으며, 2015년 중 점차 안정화되고 월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65백만 원이며, 비용은 재료비 26백만 원, 인건비(급여) 43백만 원 등으로 총 82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은 17백만 원입니다. 다만, 카페운영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1명만 카페운영을 위해 추가 고용하였으므로, 증분기준으로는 적자가 크지는 않습니다.

□ 권고사항

- 2015년에 차입금 150백만 원을 상환한 바 있으나, 여전히 500백만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만기 연장 시 마다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015년 카페 이용객수(판매잔수) 20,902명, 월례 문화행사 14회(참여인원 384명)로 회원 및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사업 취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손실인 점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 1월 22일

회계감사 채이배



2015년 결산안

손익계산서(예산대비)

제22기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2015년 결산	2015년 예산
	금액	금액
I.매출액	2,347,450,955	2,340,000,000
회비수입 ¹²	1,763,193,858	1,800,000,000
정기후원금수입	9,550,000	10,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¹³	379,520,391	320,000,000
사업수입	130,274,222	150,000,000
카페사업수입	64,912,484	60,000,000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2,347,450,955	2,340,000,000
IV.판매비와관리비	2,274,734,236	2,314,898,854
급여	1,309,896,138	1,285,800,000
퇴직급여	129,793,606	133,000,000
복리후생비	123,338,510	141,500,000
여비교통비	15,082,116	10,000,000
통신비	31,013,801	27,000,000
수도광열비	5,029,205	5,000,000
전력비	21,829,830	25,000,000
세금과공과금	25,781,015	25,000,000
감가상각비	38,598,854	38,598,854
임차료	4,307,503	5,000,000
수선비	16,013,800	0
보험료	2,506,620	3,000,000
차량유지비	2,287,660	3,000,000
교육훈련비	10,084,320	5,000,000
도서인쇄비	4,382,940	5,000,000

12 회비수입은 전년대비 약 9.1% 증가, 예산대비 약 2% 가량 감소했습니다.

13 인터넷후원금, ARS후원금, 창립기념식 등 각 종 행사후원금으로 2015년의 경우 연구기금과 평화국제협력기금 출연으로 예산 대비 약 17.9% 가량 증가했습니다.

회의비	30,164,560	30,000,000	
사무용품비	3,271,380	10,000,000	
소모품비	34,967,637	30,000,000	
지급수수료	83,351,437	100,000,000	
건물관리비	13,259,020	15,000,000	
잡비	573,980	1,000,000	
사업비 ¹⁴	329,200,260	350,000,000	
발송비	7,764,990	8,000,000	
부설기관회비	6,153,000	38,000,000	
카페통인재료비	26,082,054	21,000,000	
V.영업이익	72,716,719		25,101,146
VI.영업외수익	19,642,770		25,000,000
이자수익	14,038,856	10,000,000	
잡이익 ¹⁵	5,603,914	15,000,000	
VII.영업외비용	63,842,942		49,500,000
이자비용	21,076,134	27,000,000	
기부금	19,000,000	22,000,000	
기타의대손상각비 ¹⁶	23,466,753	0	
잡손실	300,055	500,00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28,516,547		601,146
IX.법인세등	535,301		40,000
X.당기순이익	27,981,246		561,146

14 참여사회제작비, 아카데미드티나무 사업비, 청년사업비, 연대사업비, 창립기념식, 총회, 토론회 등 각 중 행사진행비, 홍보물제작비, 그 외 각 센터사업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5 명예훼손소송배상금이 포함되었으며,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은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6 당기 참여사회연구소 청산으로 인해 대여금 중 회수불능액을 손실처리한 금액입니다.

손익계산서(전기대비)

제22기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제21기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22(당)기	제21(전기)
	금액	금액
I.매출액	2,347,450,955	2,210,869,004
회비수입	1,763,193,858	1,616,306,806
정기후원금수입	9,550,000	10,32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79,520,391	432,006,835
사업수입	130,274,222	144,955,364
카페사업수입	64,912,484	7,279,999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2,347,450,955	2,210,869,004
IV.판매비와관리비	2,274,734,236	2,407,615,713
급여	1,309,896,138	1,163,667,794
퇴직급여	129,793,606	152,136,226
복리후생비	123,338,510	112,011,340
여비교통비	15,082,116	10,739,904
통신비	31,013,801	26,995,590
수도광열비	5,029,205	3,157,270
전력비	21,829,830	20,289,200
세금과공과금	25,781,015	24,055,619
감가상각비 ¹⁷	38,598,854	41,235,760
임차료	4,307,503	4,995,046
수선비	16,013,800	195,937,880
보험료	2,506,620	2,514,050
차량유지비	2,287,660	2,168,993
교육훈련비	10,084,320	4,142,110
도서인쇄비	4,382,940	6,332,780

17 감가상각비 당기 계상액은 건물 및 차량운반구의 당기 상각비입니다.

회의비	30,164,560	26,136,330	
사무용품비	3,271,380	7,083,920	
소모품비	34,967,637	64,539,120	
지급수수료	83,351,437	97,761,587	
건물관리비	13,259,020	13,437,800	
잡비	573,980	741,060	
사업비	329,200,260	377,256,389	
발송비	7,764,990	8,462,661	
부설기관회비	6,153,000	37,958,000	
카페통인재료비	26,082,054	3,859,284	
V.영업이익	72,716,719		-196,746,709
VI.영업외수익	19,642,770		23,729,336
이자수익	14,038,856	9,774,407	
잡이익 ¹⁸	5,603,914	13,954,929	
VII.영업외비용	63,842,942		50,611,181
이자비용	21,076,134	26,787,181	
기부금	19,000,000	23,490,000	
기타의대손상각비 ¹⁹	23,466,753	0	
잡손실	300,055	334,00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28,516,547		-223,628,554
IX.법인세등²⁰	535,301		44,585
X.당기순이익	27,981,246		-223,673,139

18 명예훼손소송배상금 5,451,78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당기 참여사회연구소 청산으로 인해 대여금 중 회수불능액을 손실처리한 금액입니다.

20 당기 수익사업 부문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계상액입니다.

재무상태표

제22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21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22(당)기		제21(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유동자산	773,745,692		734,602,321	
(1)당좌자산	773,745,692		734,602,321	
현금	1,034,300		713,110	
보통예금	424,712,391		305,878,014	
정기예·적금	0		200,000,000	
미수수익	6,192,500		3,682,000	
미수금 ²¹	1,613,429		1,656,755	
상근자교육기금	11,814,324		19,689,953	
연대기금	1,554,582		1,553,034	
도시락기금	11,913		28,569	
사회복지위원회	20,400,983		19,995,799	
상근자교육기금	158,206,138		170,743,499	
의인가금	14,393,136		10,661,588	
공익소송기금	33,807,614		0	
연구기금	100,004,382		0	
평화국제협력기금				
Ⅱ.비유동자산	3,762,171,728		3,830,770,582	
(1)투자자산	0		30,000,000	
장기대여금 ²²	0		30,000,000	
(2)유형자산	3,762,171,728		3,800,770,582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291,958,920)	1,123,599,516	(256,569,960)	1,158,988,476
차량운반구	26,614,810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22,707,422)	3,907,388	(19,497,528)	7,117,282
자산총계	4,535,917,420		4,565,372,903	

21 미수금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환급예정액입니다.

22 2015년 5월 참여사회연구소에 대한 장기대여금 중 연구소청산 과정에서 6,533,247원을 회수하고, 잔액 23,466,753원을 기타 의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 처리하여 제각하였습니다.

부채		
I.유동부채	1,962,413	15,867,402
예수금	344,461	14,459,534
부가세예수금	1,617,952	1,403,818
미지급세금	0	4,050
II.비유동부채	969,672,220	1,013,203,960
장기차입금 ²³	500,000,000	6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469,672,220	353,203,960
장기임대보증금 ²⁴	0	10,000,000
부채총계	971,634,633	1,029,071,362
자본		
자본총계	3,564,282,787	3,536,301,541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27,981,246		
전기: (223,673,139)		
부채 및 자본총계	4,535,917,420	4,565,372,903

23 2015년 5월 장기차입금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4 2015년 2월 참여사회연구소에 대한 장기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안

예산손익계산서

제23기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23(차)기	
	금액	
I.매출액		2,375,000,000
회비수입 ²⁵	1,878,000,000	
정기후원금수입	10,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285,000,000	
사업수입 ²⁶	130,000,000	
카페사업수입	72,000,000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2,375,000,000
IV.판매비와관리비		2,364,751,091
급여 ²⁷	1,388,000,000	
퇴직급여	130,800,000	
복리후생비	138,800,000	
여비교통비	15,000,000	
통신비	30,000,000	
수도광열비	5,000,000	
전력비	25,000,000	
세금과공과금	25,000,000	
감가상각비 ²⁸	37,151,091	
임차료	5,000,000	
수선비	10,000,000	
보험료	3,000,000	
차량유지비	3,000,000	
교육훈련비	5,000,000	
도서인쇄비	5,000,000	

25 전년도 12월 회비×12개월, 매월 100만원씩 회비증가(회원확대캠페인/1년=1,200명)

26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수입, 참여사회 광고비, 대관수입, 도서저작권료, 그 외 판매수입 등

27 상시 근로자 월평균 57명 기준(단기간사, 안식년 포함)

28 건물(40년/정액법, 2007년 8월 취득), 차량운반구(5년/정율법, 2012년 10월 19일 취득)

회의비	30,000,000	
사무용품비	5,000,000	
소모품비	27,000,000	
지급수수료 ²⁹	80,000,000	
건물관리비	10,000,000	
잡비	1,000,000	
사업비 ³⁰	350,000,000	
발송비	8,000,000	
카페통인재료비	28,000,000	
V.영업이익		10,248,909
VI.영업외수익		30,000,000
이자수익	15,000,000	
잡이익 ³¹	15,000,000	
VII.영업외비용		37,700,000
이자비용	17,200,000	
기부금	20,000,000	
잡손실	500,00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2,548,909
IX.법인세등		329,651
X.당기순이익		2,219,258

29 회비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소프트웨어사용료, 외주웹관리수수료, 회계기장료 등 각 종 수수료

30 참여사회제작비, 아카데미느티나무 사업비, 청년사업비, 평화국제협력사업비, 연구사업비, 연대사업비, 총회/창립기념식/토론회 등 행사진행비, 그 외 각 센터사업비

31 고용부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포함

예산재무상태표

제23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23(차)기	
	금액	
자산		
Ⅰ.유동자산		943,939,795
(1)당좌자산		943,939,795
현금		1,000,000
보통예금		640,959,446
정기예.적금		0
미수수익		6,000,000
미수금		1,980,349
상근자교육기금		7,000,000
연대기금		1,000,000
도시락기금		0
사회복지위원회		21,000,000
상근자교육기금		
의인가금		145,000,000
공익소송기금		7,000,000
연구기금		23,000,000
평화국제협력기금		90,000,000
Ⅱ.비유동자산		3,725,020,537
(1)투자자산		0
장기대여금		0
(2)유형자산		3,725,020,537
토지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327,347,880)	1,088,210,556
차량운반구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24,469,653)	2,145,157
자산총계		4,668,960,332

부채		
Ⅰ.유동부채		2,000,000
예수금		5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미지급세금		0
Ⅱ.비유동부채		1,100,458,287
장기차입금		5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600,458,287
장기임대보증금		0
부채총계		1,102,458,287
자본		
자본총계		3,566,502,045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2,219,258		
전기: 27,981,246		
부채 및 자본총계		4,668,960,332

참여연대 정관
기구표

조직과 운영원리

참여연대 정관

참여연대 정관

1994.9.10	(제정)
1995.3.23	(1차 개정)
1996.3.13	(2차 개정)
1997.9.10	(3차 개정)
1998.9.27	(4차 개정)
1999.2.6	(5차 개정)
2000.2.19	(6차 개정)
2001.2.10	(7차 개정)
2002.2.23	(8차 개정)
2003.3.15	(9차 개정)
2005.3.12	(10차 개정)
2006.2.25	(11차 개정)
2006.9.13	(12차 개정)
2007.3.3	(13차 개정)
2011.3.5	(14차 개정)
2012.2.25	(15차 개정)
2013.2.23	(16차 개정)
2014.3.8	(17차 개정)
2015.3.7.	(18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 ②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

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①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고문의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임원 선임

임원선임안
2016년 임원 명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1. 공동대표 선출의 건 (임기 2년)

[신임] 하태훈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2. 감사 선임의 건 (임기 2년)

[신임] 박형주 감사 (회계사)

3.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임기 2년)

[신임] 김정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춘천교대 교수, 2012~현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임] 김진욱 운영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2009~2015. 4. 집행위원장)

4.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의 건 (임기 1년)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42명)

[연임] 김명수 (홍익대 연구교수, 2009년 회원가입, 2013~2015 운영위원)

[연임] 김성제 (직장인, 2012년 회원가입, 2013~2015 운영위원)

[연임] 김상균 (방송인, 1999년 회원가입, 2003~2015 운영위원)

[연임] 김세경 (퇴임 교사, 2011년 회원가입, 2014~2015 운영위원)

[연임] 김영수 (자영업, 2010년 회원가입, 2013~2015 운영위원)

[연임] 김용기 (자영업, 2000년 회원가입, 2013~2015 운영위원)

- [연임] 김종백 (직장인, 2003년 회원가입, 2012~2015 운영위원)
- [연임] 김태엽 (자영업, 2003년 회원가입, 2012~2015 운영위원)
- [연임] 맹행일 (자원활동가, 2001년 회원가입, 2004~2015 운영위원, 2005~2006 회원모임협의회 대표)
- [연임] 박상철 (직장인, 2003년 회원가입, 2004~2015 운영위원)
- [연임] 박종희 (사업가, 2000년 회원가입, 2006, 2012~2015 운영위원)
- [연임] 박지영 (피아노 강사, 2009년 회원가입, 2011~2015 운영위원, 2012 회원모임협의회 대표)
- [연임] 박희경 (직장인, 2001년 회원가입, 2014~2015 운영위원)
- [연임] 안기석 (동시통역사, 2011년 회원가입, 2014~2015 운영위원)
- [연임] 오종철 (직장인, 2009년 회원가입, 2011~2015 운영위원)
- [연임] 윤형준 (직장인, 2004년 회원가입, 2007~2015 운영위원)
- [연임] 이영기 (가락수산시장 중매인, 2000년 회원가입, 2012~2015 운영위원)
- [연임] 이해숙 (수필가, 1998년 회원가입, 2001~2015 운영위원, 2007 회원모임협의회 대표)
- [연임] 이현정 (학생, 2013년 회원가입, 2014~2015 운영위원)
- [연임] 이해정 (중앙대 교수, 2006년 회원가입, 2013~2015 운영위원)
- [연임] 임상웅 (자영업, 2010년 회원가입, 2011~2015 운영위원)
- [연임] 장연희 (자원활동가, 2004년 회원가입, 2006~2015 운영위원)
- [연임] 장정아 (자원활동가, 2000년 회원가입, 2009~2015 운영위원)
- [연임] 조규훈 (직장인, 2009년 회원가입, 2012~2015 운영위원)
- [연임] 조룡상 (직장인, 2005년 회원가입, 2007~2015 운영위원)
- [연임] 조은제 (시간강사, 2010년 회원가입, 2013~2015 운영위원)
- [연임] 채명묵 (전 자원활동가, 2003년 회원가입, 2009~2015 운영위원)
- [연임] 한명희 (자영업, 2003년 회원가입, 2004~2015 운영위원)
- [연임] 한승호 (치과의사, 1998년 회원가입, 2008~2015 운영위원, 2009 회원모임협의회 대표)
- [연임] 한용환 (직장인, 2007년 회원가입, 2012~2015 운영위원)
- [연임] 홍남숙 (자영업, 1999년 회원가입, 2009~2015 운영위원)
- [연임] 홍천희 (자원활동가, 2004년 회원가입, 2007~2015 운영위원)

[연임] 황미정 (컨텐츠 기획자, 2009년 회원가입, 2013~2015 운영위원)

(이상 33명)

[신임]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2004년 회원가입, 2006~2013 운영위원)

[신임] 민선영 (대학생, 청년참여연대 추천, 2016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신임] 박예지 (직장인, 2015년 회원가입,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신임] 유상모 (2014년 회원가입, 아카데미느티나무 수강)

[신임] 이봉섭 (디자이너, 2008년 회원가입, 2014-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이수호 (2015년 회원가입,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신임] 정남훈 (직장인, 2009년 회원가입, 산사랑 회원)

[신임] 정현원 (2002년 회원가입, 아카데미느티나무 수강)

[신임] 피학용 (전 산사랑 대표, 2015 당연직 운영위원, 2013~2014 선출직 운영위원)

(이상 9명)

○ 추첨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40명)

[연임] 강찬호 (지역활동가, 2008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고재원 (역사교사, 2008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곽현지 (단체활동가, 2007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권민우 (사업가, 2011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권영숙 (교사, 2011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동한 (회사원, 2008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진영 (직장인, 2008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현우 (직장인, 2010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효정 (직장인, 2011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문명희 (의료계 종사, 2010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박여라 (직장인, 2007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소재학 (직장인, 2010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신용태 (사회복지사, 2008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신중범 (두 아이 아빠, 2000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유영석 (회사원, 1999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유혜선 (평화활동가, 2010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이선영 (직장인, 2011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이재천 (자영업, 2009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이재현 (자원활동가, 1999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정성훈 (치과의사, 2010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조은진 (직장인, 2011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연임] 하아련 (사회복지사, 2011년 회원가입, 2015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 (이상 22명)
- [신임] 강지나 (교사, 2000년 회원가입)
- [신임] 권현숙 (작가, 2000년 회원가입)
- [신임] 김성순 (사회복지활동가, 2014년 회원가입)
- [신임] 김지훈 (협동조합활동가, 2013년 회원가입)
- [신임] 김태년 (직장인, 2010년 회원가입)
- [신임] 김태욱 (청년, 2014년 회원가입)
- [신임] 김희정 (직장인, 2014년 회원가입)
- [신임] 김희태 (직장인, 2007년 회원가입)
- [신임] 박명규 (회원, 2002년 회원가입)
- [신임] 박정원 (직장인, 2014년 회원가입)
- [신임] 박정은 (방송작가, 2008년 회원가입)
- [신임] 서명수 (회사원, 2000년 회원가입)
- [신임] 유수륜 (하모니, 2004년 회원가입)
- [신임] 윤준철 (직장인, 2014년 회원가입)
- [신임] 이광기 (자영업, 2011년 회원가입)

[신임] 이승호 (화물노동자, 2002년 회원가입)

[신임] 최승환 (쌍둥이 아빠, 2005년 회원가입)

[신임] 최지원 (직장인, 2001년 회원가입)

(이상 18명)

5.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의 건

하태훈(공동대표, 신임) 김정인(운영위원장, 신임) 김진욱(운영위원장, 신임) 김경율
(집행위원장, 신임) 김성진(집행위원장, 신임) 양홍석(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신임) 이상
희(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신임) 이태호(정책위원장, 신임) 진영중(정책자문위원장,
신임) 박근용(사무처장, 신임) 안진걸(사무처장, 신임) 박정은(협동사무처장, 연임) 이
동교(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2016 임원 명단

공동대표

법인(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정강자(인하대 초빙교수) 하태훈(고려대 교수)

감사

박형주(회계사)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재)진실의힘 고문) 박호성(서강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양길승(원진직업병관리재단(녹색병원) 이사장) 이삼열(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포럼 상임대표) 이선중(원불교 은덕문화원 원장)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민교협 원로교수모임 대표) 청화(청암사 주지)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운영위원회

- 공동운영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 부위원장 : 주은경(시민교육전문가)
- 당연직 운영위원 (21명)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하태훈(공동대표) 김정인(공동운영위원장) 김진욱(공동운영위원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김경율(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공동집행위원장) 양홍석(공동 부집행위원장) 이상희(공동 부집행위원장) 이태호(정책위원장) 박순성(공동정책자문위원장) 진영종(공동정책자문위원장) 박근용(공동사무처장) 안진걸(공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맹봉학(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 박진호(회원모임 '청년마을' 대표) 이상준(회원모임 '참 좋다' 대표) 이동교(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최상천(회원모임 '참여현상소' 대표)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

○ 선출직 운영위원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42명)

김명수(홍익대 연구교수) 김성제(직장인) 김상균(방송인) 김세경(퇴임 교사) 김영수(자영업) 김영수(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김용기(자영업) 김종백(직장인) 김태엽(자영업) 맹행일(자원활동가) 민선영(대학생) 박상철(직장인) 박예지(직장인) 박종희(사업가) 박지영(피아노 강사) 박희경(직장인) 안기석(동시통역사) 오종철(직장인) 유상모(직장인) 윤형준(직장인) 이봉섭(디자이너) 이수호(사진프리랜서)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해숙(수필가) 이현정(학생) 이혜정(중앙대 교수) 임상웅(직장인)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정남훈(직장인) 정현원(자영업) 조규훈(직장인) 조룡상(직장인) 조은제(시간강사) 채명묵(전 자원활동가) 피학용(전 산사랑 대표) 한명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한용환(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미정(컨텐츠 기획자)

-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40명)

강지나(교사) 강찬호(지역활동가) 고재원(역사교사) 곽현지(일반인) 권민우(사업가) 권영숙(교사) 권현숙(작가) 김동한(회사원) 김성순(사회복지활동가) 김지훈(협동조합 활동가) 김진영(직장인) 김태년(직장인) 김태욱(청년) 김현우(직장인) 김효정(직장인) 김희정(직장인) 김희태(직장인) 문명희(의료계 종사) 박명규(회원) 박여라(직장인) 박정원(직장인) 박정은(방송작가) 서명수(회사원) 소재학(직장인) 신용태(사회복지사) 신종범(두 아이 아빠) 유수륜(하모니) 유영석(회사원) 유혜선(평화활동가) 윤준철(직장인) 이광기(자영업) 이선영(직장인) 이승호(화물노동자) 이재천(자영업) 이재현(자원활동가) 정성훈(치과의사) 조은진(직장인) 최승환(쌍둥이 아빠) 최지원(직장인) 하아련(사회복지사)

집행위원회

- 공동위원장 : 김경율(회계사) 김성진(변호사)
- 공동부위원장 : 양홍석(변호사) 이상희(변호사)

○ 선출직 집행위원

서복경(서강대 연구원) 양규웅(변호사)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찬진(변호사) 조수진(변호사)

○ 당연직 집행위원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하태훈(공동대표) 김정인(공동운영위원장) 김진욱(공동운영위원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김경율(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소장 대행) 양홍석(집행위 부위원장) 이상희(집행위 부위원장) 이태호(정책위원장) 박순성(공동정책자문위원장) 진영종(공동정책자문위원장) 박근용(공동사무처장) 안진걸(공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김균(참여사회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형중(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남찬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선영(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박홍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서보학(사법감시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병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최상천(회원모임협의회 대표)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

정책위원회

○ 위원장 : 이태호 (전 사무처장)

정책자문위원회

○ 공동위원장 : 박순성(동국대 교수) 진영종(성공회대 교수)

사무처

○ 공동사무처장 : 박근용 안진걸

○ 협동사무처장 : 박정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참여연대 노래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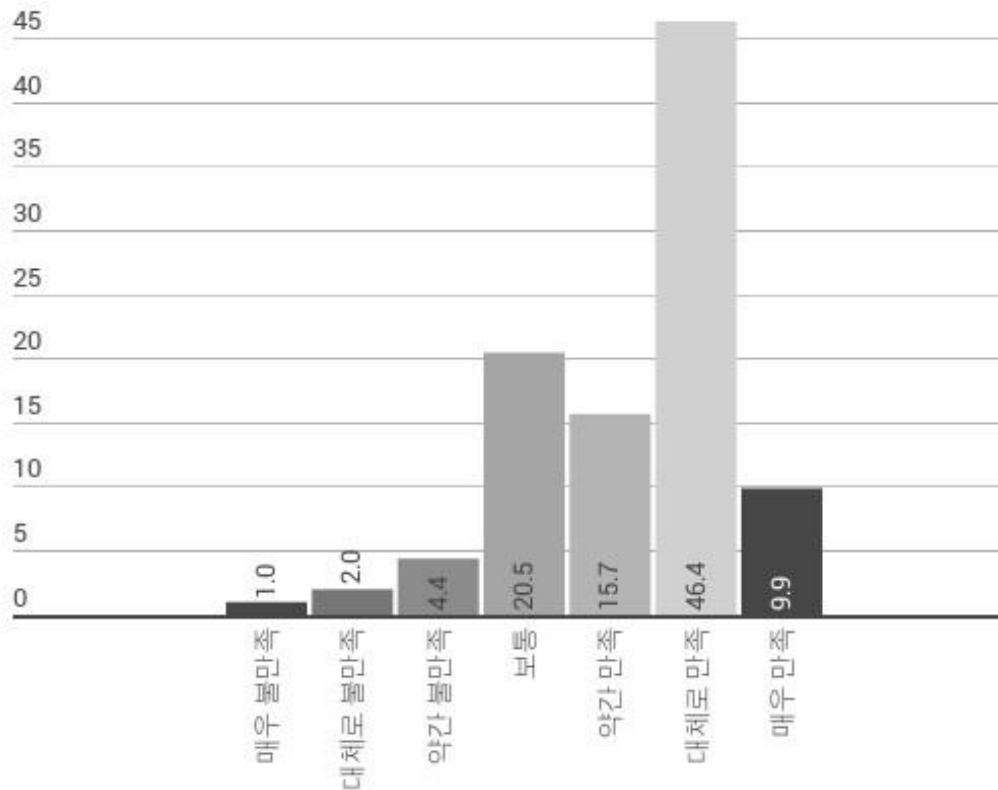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2015년을 평가하다

참여연대는 2015년 활동을 평가하고 2016년 활동 방향에 대해서 3기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2명 중 293명(응답률 59.5%)이 참여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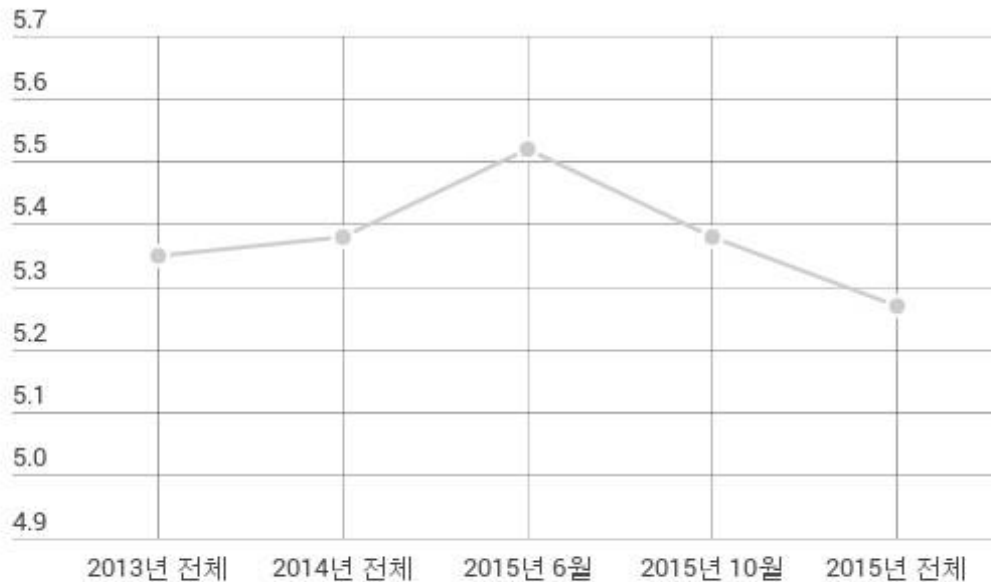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회원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추첨하여 모니터단을 구성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3회 이메일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현재는 3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7년 3월까지입니다.

1. 2015년 활동 전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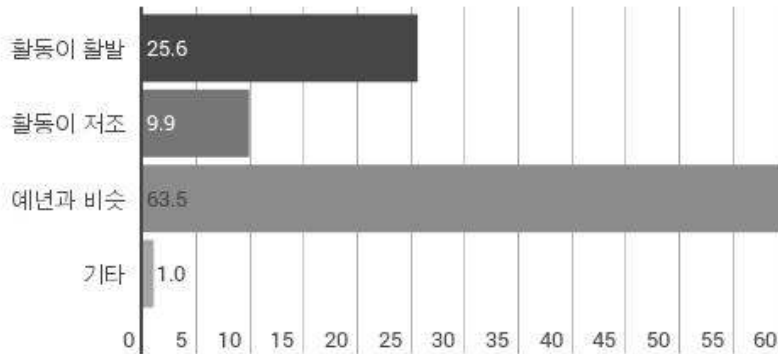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여쭙본 결과, “만족”하신다는 응답(약간만족+대체로만족+매우만족)이 72.0%로 “불만족”이라는 응답(매우불만족+대체로불만족+약간불만족) 7.5%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신 이유로는 여전히 주변에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노력 여부를 떠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1. 최근 3년 활동 전반 평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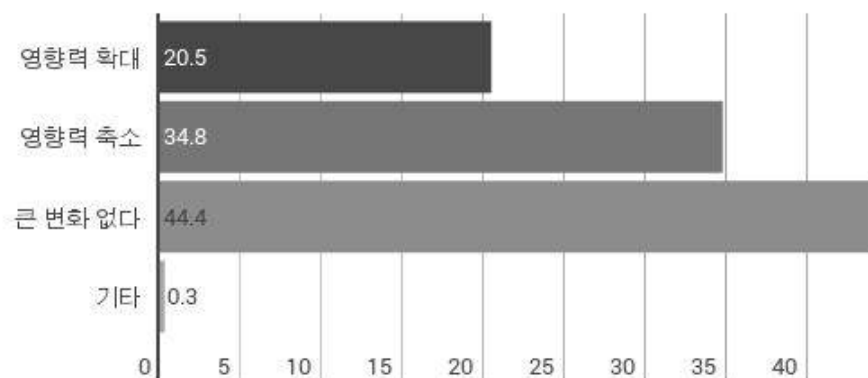
또한 2015년 2월에 평가한 2014년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8점이었고, 2015년 6월에 평가한 2015년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5.52점으로 높아졌었습니다. 2016년 2월에 평가한 2015년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27점이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만족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대응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의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2015년 활동 양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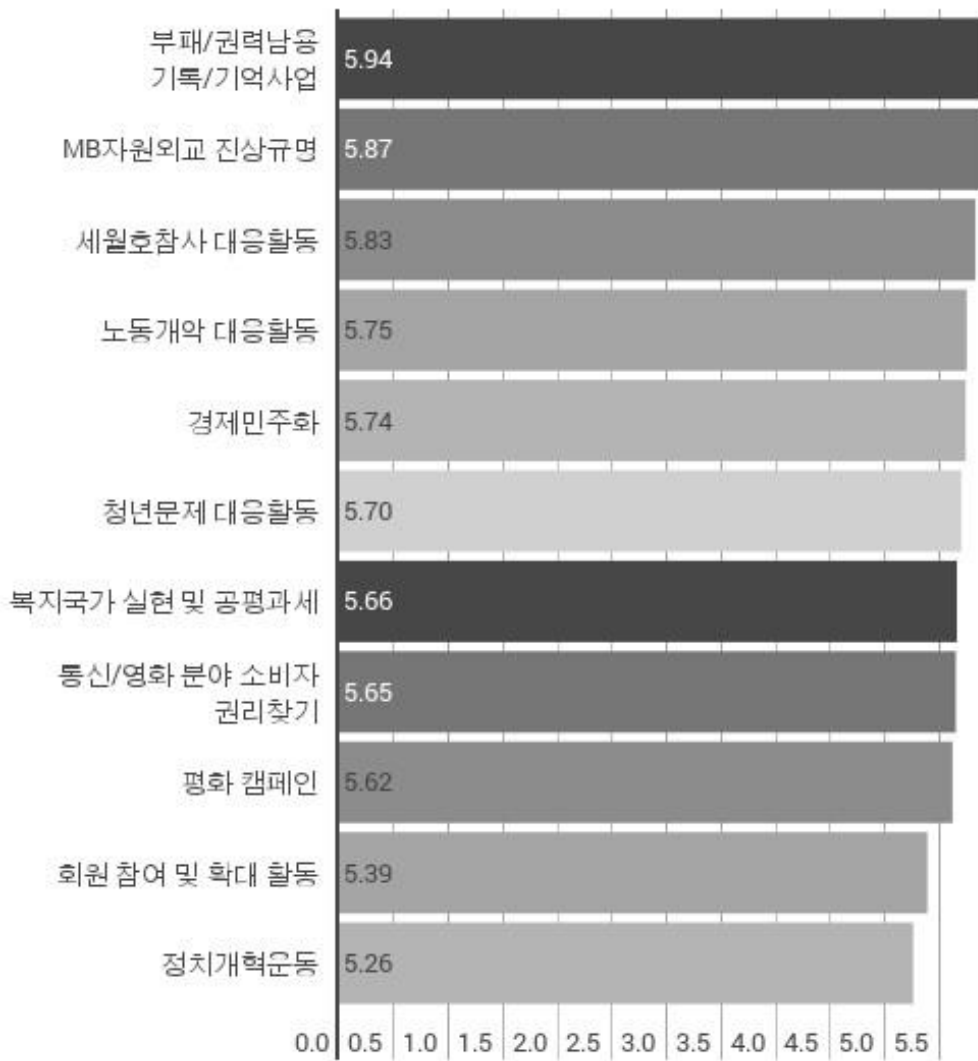
예년에 비해서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에 대해서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이 예년에 비해 활발해졌다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비율보다 15%p정도 많았습니다. 즉 2015년에도 양적으로는 활발하게 활동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3. 2015년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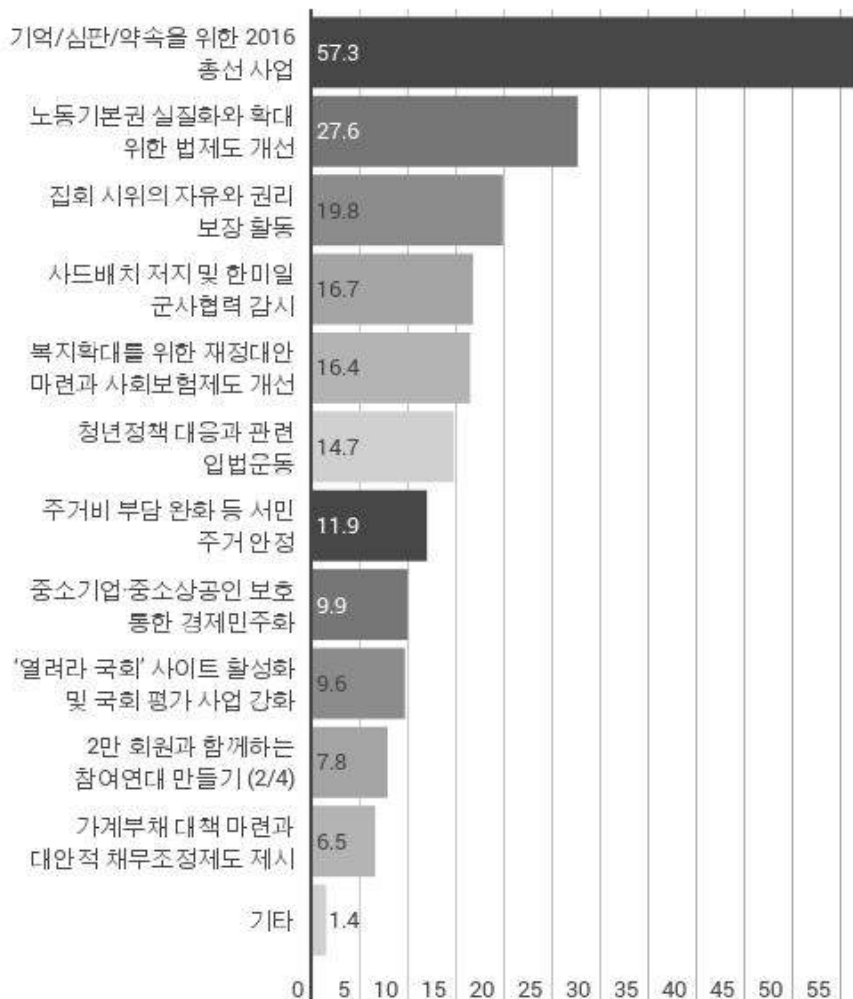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자의 44.4%가 “큰 변화 없다”고 응답하셨습니다만,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확대되었다”는 응답보다 14.3%p나 높았습니다.

4. 2015년 분야별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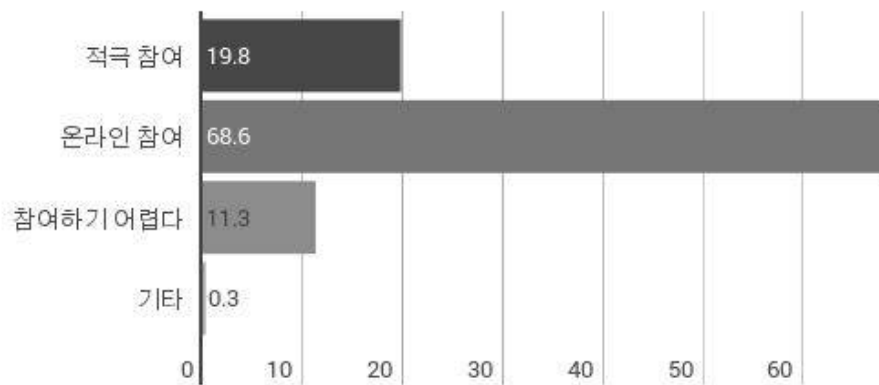
2015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기록/기억사업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7점 척도(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부패 권력남용에 대한 기록/기억 활동에는 최고점수인 85점을, 정치개혁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점수인 75점을 주셨습니다.

5. 2016년 주력 과제



2016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년 총선 사업”을 57.3%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해주신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27.6%) 보다 두 배 이상 되는 높은 응답률입니다. 이것은 작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두 과제 “복지국가 실현과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의 응답률이 각각 45.0%, 43.5%로 비슷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에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20대 총선 유권자 행동 참여 의향



위의 주력 과제 응답에서 “총선 사업”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신 것처럼 회원모니터단 여러분의 약 90%가 유권자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권자 행동에 대한 참여프로그램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2016총선넷 홈페이지 (www.2016change.net)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응답자(293명) 기본 정보

성 별		연 령		
남	여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186 (63.5%)	107 (36.5%)	61 (20.8%)	149 (50.9%)	83 (28.3%)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함께 열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구실을 내걸며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부정권은 마침내 국민의 결집된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개혁의 과제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에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경색된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우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8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성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보장을 으뜸의 가치로 삼는 정치이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지방자치와 남북통일, 복지사회의 미래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슴을 열고 논의를 펼쳐 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토론의 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뜨거운 정열이 넘쳐흐르는 청년학도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면서도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던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 회원 일동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권력남용과 기회독점을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시민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발휘해왔습니다. 회원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도 시민들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벽,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적, 정치적 편 가르기, 다양성을 부정하는 적대와 차별,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자유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해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뒷에 갇혔고,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거세지고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인류의 오랜 노력들은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고장 난 사회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도처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를 불행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과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근거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편 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겠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반자이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개방하겠습니다.

자립재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믿음직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고 굳세게,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 과제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19차 정기총회에서 성찰과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균, 임종대, 정현백, 이석태)를 구성하여 2014년까지 1년 6개월간 운영해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 산하 평가비전위원회(위원장 : 이석태)는 10차례의 회의와 2차례 비전워크숍,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회원 공청회를 주관하여 참여연대 역할과 사명,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등을 마련했습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과 사명의 재확인

○ 시민의 파수꾼

- 권력과 부의 독점과 오남용에 대한 밀착 감시와 견제
- 초정파적이고 독립적인 일관된 권력감시

○ 시민의 대변자

- 시민권의 옹호와 정책적 대안제시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바탕을 둔 사회발전 전망과 대안 제시

○ 시민의 동반자

- 고통과 갈등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감의 연대
-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참여와 연대

○ 시민 참여와 연대의 징검다리

- 사회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의 징검다리
- 시민들의 놀이터, 시민 주도 학습/치유/훈련의 전당

2. 8대 중장기 의제

○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지난 20년 동안 확인된 참여연대의 존립근거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국가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권력감시 운동의 기본과제입니다.

<주요과제>

- 전관예우, 부정청탁, 회전문 인사 등 권력유착 감시와 공직윤리 개선
- 입법 사법 행정 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확보, 국가기구의 투명성 확보
- 사법권력, 관료권력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검찰과 경찰,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공정거래위 등 사정기구 감시와 개혁
- 인사제도와 행정평가제도의 민주적 개선
- 공익제보의 보호

○ 공공성의 강화

- 지난 20년간 권력의 특성이 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은 과 공공정책,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공공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
-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와 복지 재원 확보
- 공공 서비스와 공공시설 운영의 사영화(민영화), 영리화, 외주화 제한
- 공공기관 개혁, 규제 개혁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

- 극심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
- 모두를 위한 복지 제도 확대
- 재벌·대기업 불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 개혁
- 금융 공공성 확보와 금융 소비자 보호
- 좋은 일자리 확충과 노동권 보장·강화
- 주거불안 해소와 가계부담 완화
-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철폐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간성과 생태를 파괴하고 특권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다수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과로체제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단축
- 산업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규제의 강화, 안전평가·환경영향 평가 실질화
- 군사비의 축소와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핵발전 단계적 폐지,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

○ 시민참여·시민자구 수단의 확대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시민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로서, 주민으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수단과 자구수단이 확대되어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유권자 참정권 강화와 선거/정당 제도 등 정치개혁
- 지방 분권과 자치의 확대
- 정보공개, 예결산(재정) 참여,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 시민/주민 참여 제도 확대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행정 강제에 대한 시민자구 수단과 불복종의 자유 확대
- 소비자 권리, 납세자 권리, 유권자 권리 등 사문화된 시민권리 실질화
-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책임 추궁 수단 강화

○ 외교안보권력, 정보권력의 민주화

- 외교안보통상 분야는 해당 관료와 군, 정보기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아 통일을 앞두고 이 분야의 권력남용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의 독점, 통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역처럼 여겨졌던 외교안보통상 권력과 정보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안보·외교·통상 등 행정독점분야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 정보권력의 여론조작과 언론통제에 대한 견제
- 국가권력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 옹호
- 국정원 개혁과 군 개혁

○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 한반도 정전체제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과 동아시아에서 자원, 영토,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주의와 패권대결정책으로는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추구
- 한반도 동북아에서 핵위협의 제거와 군비의 축소
- 한반도 화해협력(갈등해소)과 인권개선의 결합
- 동아시아 협력안보체제 형성
- 국가중심의 영토·역사 분쟁을 완화할 시민교류·협력과 이해의 증진
- 평화권(평화적 생존권)의 존중

○ 진영논리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

- 일방적인 평가르기는 공론의 형성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대립의 평행선이 지속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시민사회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로 나뉘는 이기심과 경쟁의 질서 대신 시민사회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시민사회 내의 성찰과 연대 의식 제고
- 시민사회 세대, 지역, 계층간 이해, 소통, 협력의 확대
-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생활밀착형 풀뿌리 운동과의 협력강화
- 복지재원,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난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합의 촉진
- 연대와 협동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의 모색

3. 8가지 혁신과제

○ 현장성

-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과 유리된 시민운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활성화되고 시민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조건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을 도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과 해법이 논의되는 현장에 대한 밀착 감시와 개입을 강화하는 것 역시 권력감시 운동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개선과제>

- 현장(분쟁현장, 권력작동 현장) 밀착형 활동 강화
- 당사자 연대의 강화
- 조직가·기획자로서의 활동가 능력 향상, 활동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사무처의 현장 지원·연대 체계 개선

○ 전문성

- 참여연대는 전문성을 갖춘 권력감시단체로 자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쟁점이 구체화되고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날이 갈수록 지식사회가 자본과 권력에 촛촛히 포획되고 있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는 전문가들의 자원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참여연대의 전문성과 활동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할 젊고 진취적인 실천적 전문가층을 적극 발굴하고, 내부의 정책 협력 체계와 활동목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억압받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개선하고 지식사회의 독립적인 비판기능과 사회참여를 되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에도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전문가 임원 확충
- 중장기 활동목표 관리체계, 부서간 정책 협력체계의 개선
-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실천적 전문가·지식인·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 전문가 운동 활성화 방안, 전문가 사회참여 촉진 방안 모색

○ 소통 능력

-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모니터 보고서나 정책 자료들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생산됩니다. 주로 정책입안자들이나 감시대상 권력을 상대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향한 정보와 메시지를 개발하고 소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운 참여연대 활동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성과 및 보완과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소통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활동 의제와 행동수단의 시민친화력 개선
- 시민대상 시청각 콘텐츠 생산의 확대
- 정보기술 발전과 매체의 발전을 반영한 온라인 소통의 강화
- 참여연대 대안미디어 형성

○ 시민 리더십

- 시민을 대행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 참여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시민리더십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교육활동은 종합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 참여연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활동가 교육(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여형 활동기구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사회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청년 참여연대를 우선 발족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참여연대 아카데미 강화,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확대
- 청년/청소년,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여성을 위한 맞춤형 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활동가, 시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Training of Trainers) 코스 개발
- 직업적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여형 활동기구 단계적 확대
- 청년 참여연대 우선 발족

○ 변화의 공간

- 참여와 연대는 주로 공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연대 건물은 활동가들의 공간이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참여연대가 만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공적기능 확대하여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개선과제>

- 사무 공간의 축소와 시민참여 공간 확대
- 지하, 1층, 2층을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선
- 공간 기획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 글로벌 참여연대

- 세계화는 국가단위로 분리된 공동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정부간 기구는 국경을 넘어서 형성되는데 반해 시민의 삶의 터전이나 권력 감시 운동은 좀처럼 국경을 넘어서지 못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인권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범위를 국경을 넘어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인권·평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범위의 시민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시민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시민사회간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 국제 권력감시 운동역량 강화
- 상근자와 임원, 회원의 국제 이해 교류의 증진
- 부서별 국제연대 가능 상근인력·자원활동 인력 육성
- 시민참여형 국제교류(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프로그램

○ 나눔과 협력의 재정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부심은 회원과 시민의 소액다수 후원으로 재정자립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립재정을 넘어 나눔과 협력의 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살림은 알뜰하게, 연대와 협력의 비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조기실현
- 시민운동 미래세대 형성, 현장지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재원 확보
- 연대와 협력,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형 기금의 확대

○ 참여연대 공동체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산은 지난 20년간 사회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참여연대를 지탱해온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입니다.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참여연대 구성원들 간의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고 각급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집행참여구조를 더욱 견고하고 알차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현직 임원과 전현직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대를 이어가도 경륜과 정체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역량 강화와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원 자치의 확대와 회원 공동체 강화
- 운영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등 회원 의사결정/소통구조의 강화
- 전현직 임원/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 활동가 역량 강화와 복지 확대, 활동가의 교육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참여연대 노래

참여연대가

박원순 작사
지근식 작곡

C Em Am Dm⁷ G

여 기 사 람들 이 모 였 - 다 - 꿈 꾸 며 사 는사 람들 이 모 였 - 다 - 아
정 의
희 망

Em Am Dm⁷ G

답 고 사 람들 게 사 는세 상 - 함 께 꿈 꾸 는사 람들 이 모 였 - 다 - 혼 자
롭 고 맑 고 깨끗 해 진세 상 - 시 민
속 에 서 로의 지 하 는세 상 - 물 방

Am Em F D G

꾸 는 꿈 은단 지 꿈 이지 만 - 다 함 께 꾸 는꿈 은현 실 이 된 - 다 - 참 여
들 의 목 소리 로 참 여연 대 - 시 민 의 권 익은 우리 가 지 키 - 자 -
을 이 모 여시 냇 물 이되 어 - 흐 르 고 마 침내 큰강 물 이 룬 - 다 -

C Am F G

하 자 연 -대 하 - 자 - 그 꿈 우 리 함 께이 루 기 위 - 해 - 참 여

C Am F G

하 자 연 -대 하 - 자 - 아 름 답 고 밝 은세 상 이 루 - 기 - 위

C Fmaj⁷ C Fmaj⁷

- 해 -



〈2016년, 더욱 힘차게 활동 하겠습니다_참여연대 상근자 일동〉

참여연대 자료집

참여연대 22차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6. 03. 05.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 법인, 정강자, 하태훈)

담당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에서

생각보다 가까운 참여연대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peoplepower21
참여연대 팟캐스트 팟빵 / iTunes 에서 '참팻' 구독하기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회원가입/정보변경/회비납부/회원행사/자원활동/방문 문의
운영기획팀 02-723-5304 fund@pspd.org
회비 외 후원금/물품후원/기부금영수증 문의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